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下)

황병덕 · 김규륜 · 최용환 · 박정란 · 박형중 · 장용석 ·  
고재홍 · 강동완 · 임순희 · 이금순 · 정은미 · 조한범 ·  
임강택 · 조명철 · 홍익표 · 장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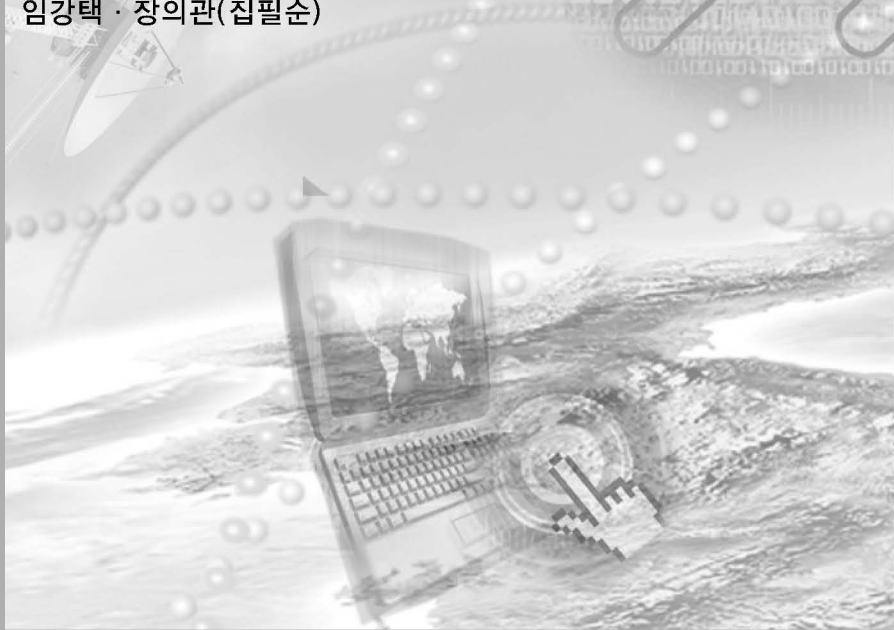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下)

황병덕 · 김규륜 · 최용환 · 박정란 · 박형중 · 장용석 · 고재홍 ·  
강동완 · 조명철 · 홍익표 · 임순희 · 이금순 · 정은미 · 조한범 ·  
임강택 · 장의관(집필순)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주)예원기획 (02-745-8090)

ISBN 978-89-8479-592-1 93340

가 격 ₩13,0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황 병 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 규 루 선임연구위원 박 형 중 선임연구위원 임 순 희 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조 명 철 선임연구위원 장 의 관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규 루 선임연구위원	최 용 환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박 정 란 선임연구위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박 형 중 선임연구위원	장 용 석 연구위원(평화문제연구소) 고 재 흥 선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강 동 완 책임연구위원
		임 순 희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 선임연구위원 정 은 미 선임연구위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임 강 택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조 명 철 선임연구위원	홍 익 표 전문연구위원



# 목차

C o n t e n t s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김규륜, 최용환, 박정란, 박형중, 장용석,  
고재홍, 강동완, 임순희, 이금순, 정은미,  
조한범, 임강택, 조명철, 홍익표, 장의관

### 제8장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가. 문제제기	2
	나. 북한 경제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4
02 북한 경제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가. 북한 경제정보의 특징	5
	나. 주요 세부분야	13
03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가. 수집단계	26
	나. 분석단계	35
	다. 북한경제정보의 관리 및 활용단계	41
04 북한 경제정보체계 사례분석 -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11월)	가. 화폐개혁 관련 정보 수집	48
	나. 화폐개혁 관련 정보 분석	51
	다. 화폐개혁 관련 정보 활용	54
05 북한경제정보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4

### 제9장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의의와 필요성	61
	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64



<b>02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주요 분야</b>	가. 비공식경제 활동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6
	나. 주민생활·의식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6
	다. 사회질서·사회통제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7
	라. 문화·예술 분야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8
<b>03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b>	가. 수집단계 70
	나. 분석단계 84
	다. 활용단계 106
<b>04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사례분석</b>	가. 수집단계 128
	나. 분석단계 133
	다. 활용단계 138
<b>05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b>	가. 정보순환 절차에 따른 문제점 141
	나. 개선방향 157

## 제 10 장

## 북한 인권정보체계 실태조사

<b>01 문제제기</b>	<b>166</b>
<b>02 북한인권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b>	가. 북한인권정보의 개념 및 특징 168 나. 주요 세부분야 170
<b>03 북한인권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b>	가. 수집단계 174 나. 분석단계 189 다. 활용단계 193
<b>04 북한인권정보체계 사례분석 - 정치범수용소</b>	가. 정보 수집 198 나. 정보 분석 200 다. 정보 활용 201
<b>05 북한인권정보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b>	가. 정보 순환절차에 따른 문제점 204 나. 개선방향 211



## 제11장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01	설문조사 개요		214
02	북한정보 수집 실태	가. 북한정보 수집 방법	215
		나. 공개정보 수집 실태	217
		다. 인간정보 수집 실태	219
		라. 기술정보 수집 실태	221
		마. 북한정보 수집 실태에 대한 평가	223
03	북한정보 분석 실태	가. 북한정보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225
		나. 북한정보 분석 시 이용하는 기관의 활용도	226
		다. 북한정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228
		라. 북한정보를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229
		마.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230
04	북한정보 활용 실태	가.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신뢰성	231
		나. 북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232
		다.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235
		라.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와 주 활용처	236
		마.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및 교류 현황	239
		바.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	241
		사.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의 수정을 위한 환류과정	242
05	종합 평가	가. 북한정보의 수집 실태	243
		나. 북한정보의 활용 실태	245

## 제12장 **결론**

---

01 북한정보체계 영향 요인	가. 남북관계	250
	나. 북한상황	250
	다. 국제관계	251
02 북한정보체계 특성	가. 북한정보체계 현황	252
	나. 전문가 조사결과	253
	다. 분야별 비교분석	255
03 북한정보체계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경제정보부문	259
	나. 정치정보부문	261
	다. 외교정보부문	263
	라. 군사정보부문	265
	마. 대남정책정보부문	266
	바. 사회·문화정보부문	268
	사. 인권정보부문	270
04 북한정보의 향후 과제	가. 정보 가중치 편중성과 조정력 향상의 거버넌스	272
	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과의 조화 지향	273
	다. 북한정보의 대중화에 따른 정보 순환 오류 극복	273

**참고문헌** / 27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87

---

# 목차 Contents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 제1장 서론

01 연구배경	2
02 연구목적과 방향	10
03 연구내용 개괄	
가.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14
나. 북한정보체계의 현황과 실태	14
다. 북한 정치정보체계	15
라. 북한 외교정보체계	15
마. 북한 군사정보체계	16
바. 북한 대남정책정보체계	16
사. 북한 경제정보체계	17
아.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17
자. 북한 인권정보체계	18
차. 북한정보체계에 대한 실태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서	18
04 연구추진 과정	19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01 정보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정보 관련 이론적 논의	24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42
02 미국정보공동체의 정보운용사례와 시사점	
가. 문제제기	48
나. 현행 미국 정보공동체의 구성과 운용	49
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 생산 및 활용 - 사례-1980~90년대 북한 핵개발 사례	58
라. 평가 및 시사점	66

### 제3장 북한정보체계의 현황과 실태

01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정보 추이	
가. 국제 관계와 북한정보	72
나. 남북 관계와 북한정보	74
다. 국내 정세와 북한정보	75
라. 북한 내부 정세와 북한정보	76
02 북한정보 주체 및 기능 현황	
가. 국가기관	77
나. 언론	79
다. 민간단체 및 기업	82
라. 학계	84
03 북한정보 순환단계별 현황	
가. 수집	89
나. 분석	93
다. 활용	95

### 제4장 북한 정치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100
02 북한 정치 이해 방식의 다양화와 시대적 변천: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가. 북한 정치 이해 관점의 다양화	102
나. 보수와 진보 관점의 경쟁과 협력	104
다. 주요 세부 분야	108
03 북한 정치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가. 수집단계	116
나. 분석단계	122
다. 활용단계	127
04 북한 정치정보체계 사례 분석: 김정일 후계자 문제	128
05 북한 정치정보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문제점	135
나. 개선방향	137

### 제5장 북한 외교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가. 문제제기	140
나. 외교정책 개념과 외교정보 범위	141
02 북한 외교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 분야	
가. 주요 특징	146
나. 외교정보의 세부 분야	148
03 북한 외교정보체계 현황	
가. 정보 수집 현황	160
나. 정보 분석 현황	176
다. 정보 활용 현황	180
04 북한 외교정보체계 사례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가. 정보 수집 문제	181
나. 정보 분석 문제	182
다. 정보 활용 문제	186
05 북한 외교정보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문제점	187
나. 개선방향	197

### 제6장 북한 군사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200
02 북한 군사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가. 북한 군사정보의 특징	201
나. 주요 세부분야	203
03 북한 군사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 제7장 북한 대남정책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254
02 북한 대남정책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가. 특징	256
나. 북한 대남정책정보의 범위	259
다. 북한 대남정책정보의 주요 세부분야	261
03 북한 대남정책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가. 수집단계	265
나. 분석단계	280
다. 활용단계	283
04 북한 대남정책정보체계 사례	
가. 정보체계에 따른 사례분석	288
나. 사례를 통해서 본 정보유동의 문제점	290
05 북한 대남정책정보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정보순환절차에 따른 문제점	291
나. 향후과제	297

〈표 VIII-1〉 한국은행 통계에 기초한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17
〈표 VIII-2〉 최근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정비 현황	22
〈표 VIII-3〉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수입 추정	25
〈표 VIII-4〉 남북왕래인원 현황	30
〈표 IX-1〉 통일부 산하 특수자료취급기관 특수자료 활용실적	121
〈표 IX-2〉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 산하 기관들의 특수자료 열람현황 비교	122
〈표 IX-3〉 북한기근 시기 사망자 수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	127
〈표 IX-4〉 북한 아사자 추정치별 정보 수집의 실태	133
〈표 IX-5〉 북한 아사자 정보의 용도별 활용 실태	139
〈표 IX-6〉 정치범 수용소 경험자의 정보자료	199
〈표 IX-7〉 정치범 수용소 위치 및 현황	202
〈표 IX-8〉 정치범 수용소 관련 주요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203
〈표 XI-1〉 설문 응답자의 특성	214
〈표 XI-2〉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244
〈표 XI-3〉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244
〈표 XI-4〉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245
〈표 XI-5〉 응답자가 생산하는 정보의 성격	246
〈표 XI-6〉 응답자가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246
〈표 XI-7〉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	247
〈표 XI-8〉 유통된 정보가 수정되는 환류과정	248

〈그림 Ⅷ-1〉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 추이	19
〈그림 Ⅷ-2〉 한 경제 관련 정보 수집 경로	26
〈그림 Ⅷ-3〉 북한 시장상황 정보 수집	27
〈그림 Ⅷ-4〉 대북전문 매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28
〈그림 Ⅷ-5〉 북한 경제 관련 정보수집 수단에 대한 신뢰도 평균	38
〈그림 Ⅷ-6〉 경제정보의 수집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집단	39
〈그림 Ⅸ-1〉 김정은 선전 벽보	94
〈그림 X-1〉 북한인권정보관련 응답자의 역할	186
〈그림 X-2〉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187
〈그림 X-3〉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187
〈그림 X-4〉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188
〈그림 X-5〉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	188
〈그림 X-6〉 국내 북한정보의 신뢰성	191
〈그림 X-7〉 국내 북한정보의 정확성	192
〈그림 X-8〉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194
〈그림 X-9〉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북한정보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195
〈그림 X-10〉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관리현황	195
〈그림 X-11〉 타 기관과의 정보교류	195
〈그림 X-12〉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정도	196
〈그림 X-13〉 이미 유통된 정보가 거치는 환류과정	196
〈그림 XI-1〉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216
〈그림 XI-2〉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217
〈그림 XI-3〉 북한정보 수집에 이용되는 각 공개정보의 신뢰성	218
〈그림 XI-4〉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219

〈그림 XI-5〉 인간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	220
〈그림 XI-6〉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221
〈그림 XI-7〉 기술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	222
〈그림 XI-8〉 북한정보 수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223
〈그림 XI-9〉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	224
〈그림 XI-10〉 북한정보 수집시 이용하는 각 기관의 신뢰성	225
〈그림 XI-11〉 북한정보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226
〈그림 XI-12〉 북한정보 분석 시 이용하는 기관의 활용도	227
〈그림 XI-13〉 북한정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228
〈그림 XI-14〉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229
〈그림 XI-15〉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230
〈그림 XI-16〉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신뢰성	231
〈그림 XI-17〉 국내에 활용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232
〈그림 XI-18〉 국내에 배포되는 북한정보의 정확성	233
〈그림 XI-19〉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234
〈그림 XI-20〉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235
〈그림 XI-21〉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236
〈그림 XI-22〉 주로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	237
〈그림 XI-23〉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238
〈그림 XI-24〉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현황	239
〈그림 XI-25〉 소속 기관(개인)과 타 기관과의 북한정보 교류현황	240
〈그림 XI-26〉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	241
〈그림 XI-27〉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의 수정 방법	243
〈그림 XII-1〉 북한정보 현황과 향후 과제	275





# 제8장

##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조사



## 제8장

##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조사

## 1. 문제제기

## 가. 문제제기

탈냉전과 세계화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집대상에서 정치·안보 분야의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정보의 기본속성인 비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sup>1)</sup> 더구나 수많은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대학 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연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역할이 정치·안보분야에 한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탈냉전 이전까지 각국의 정보당국은 석유와 같은 전략자원의 확보 등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 대한 수집활동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왔다. 냉전해체와 더불어 가일층 심화되는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는 경제정보의 중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시켜 주었다. 그 결과 오늘날 경제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정보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sup>2)</sup>

따라서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극심한 식량 부족과 경제위기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가 경제정보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경제 위기가 체제전반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로 연결되면서,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연구기관 등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1)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9), p.33.

2) 경제정보 관련 문헌으로는 Phillip Zelikow, "American Economic Intelligence: Past Practice and Future Principl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12: 1(1997, 1), pp. 164~177; Peter Schmeizer, "The Growth of Economic Espionage," *Foreign Affairs* 75:1(1996)을 참고.

자리잡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정보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교류의 확대에 기인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의 수립·추진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관련정책 등에 대한 정보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즉, 남북경협이 활성화에 따라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수요가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까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들어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관계자나 북한 내 정보제공자, 새터민 등을 통해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고, 정보 전파의 신속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부족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일정 수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정보는 그 특수성에 의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내 관련 기관 간에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의 대북 경협참여 기업 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북 경제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기업들의 대북 경협사업 추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양을 늘리고 그 정확성도 제고시켜나가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활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경제정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 간의 북한경제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및 활용, 검증 등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북한 경제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내 유관부처간의 독자적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줄이고,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관련 정보의 양·정확성·활용 등에 있어서도 시너

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수집, 활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 경제정보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북한 경제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경제정보(economic intelligence)는 다양한 활동과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정의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제정보 외에도 상업정보, 경영정보, 산업정보 등이 혼용되고 있다.<sup>3)</sup>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서는 경제정보를 “정부기관이 작성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 및 소비, 노동, 금융, 조세 제도 및 국제경제체제와 관련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상업정보(commercial intelligence)라고 지칭한다.<sup>4)</sup> 이는 정보의 작성주체와 정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정보는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외 경제추세의 중장기 예측, 국제경제체제의 불안정성 예측, 전략자원의 추세 및 안전공급,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 및 방어, 그리고 기타 대형 사업의 수주 정보 확보 등과 같은 경제활동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경제정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추진과 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북한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기초 자료 및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정보의 주요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 현황과 관련된 정보이다. 경제현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북한경제에 대한 경제통계 자료이다. 특히,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GDP, 대외무역, 식량수급 및 인구

3)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정보와 산업정보가 혼용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경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의도, 능력, 취약점 및 가능한 대응책의 파악에 목적 둔 정보이다. 반면, 산업정보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상대적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217.

4) Leo D. Carl, *International Dictionary of Intelligence* (McLean: international Defence Consultant Service, 1990), p. 184.

5)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34.

등의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대상이 된다.

둘째, 북한의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북한경제 관련 정보 중에서 정책 당국의 수요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 정보이다. 북한의 법제 관련 정보는 경제협력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 경제부문 관련된 기구 및 인적 정보이다. 기관 및 인적 정보는 정책추진 및 민간부문의 협력사업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인간정보 수단을 활용해서 수집되기 때문에, 북한경제정보 중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정보대상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 북한의 불법경제활동 관련 정보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무기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특성상 주로 국가정보기관을 통해 수집, 분석되고 있다.

## 2. 북한 경제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 가. 북한 경제정보의 특징

#### (1)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비중 확대: 탈냉전과 사회주의의 변화

북한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체 정보에서 경제관련 정보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계는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보대상도 군사·안보분야, 정치·이념, 북한 최고 지도자 및 주요 인사 등에 대한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기의 도래와 함께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확대 및 붕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전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국가정보의 대상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기술·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총체적 안보’ 또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도 정치·군사안보와 함께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정보체계에서도 경제분야에 대한 정보의 비중과 수요가 급격히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탈냉전기와 함께 시작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과 체제 붕괴 현상도 북한경제정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데 기여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의 복귀이후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였으며, 이후 4대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소련의 경우도 1985년 고르바초프 정권의 등장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적극 추진하면서 체제개혁과 민주화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그 외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베트남 등도 구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개혁은 그 내용과 속도, 범위 등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차이를 드러냈지만, 이러한 체제개혁과 변화의 근본 동기가 경제적 낙후성의 극복을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거의 동일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 상황 및 경제부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 정치·안보 중심의 북한정보 수요에서 경제 관련 정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대북 정책과의 상관성

북한경제정보가 탈냉전기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과도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 경제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 말 탈냉전과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라 당시 노태우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움직임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의 냉전체제 하에서의 외교방식에서 탈피하여 구사회주의권과의 관계정상화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 ‘북방정책’<sup>6)</sup>을 표방하였고, 같은 해 7월에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고, 6개항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적극 지원, ③ 남북간 교역을 위한 문호 개방, ④ 비군사물자에 대한 한국의 우방과 북한간의 교역 찬성,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 지양 및 남북대표간의 상호협력, ⑥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 개선 및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협조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 선언은 북한을 적대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의지를 표명하면서 각종 대북 제의에서 항상 수반되었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이후 남북 국회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sup>7)</sup>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6)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1983년 6월 이범석 외교장관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된 것은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였다.

7)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 9월 구소련, 1992년 8월 중국 각각 수교를 맺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남북경협이 시작되면서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의 수집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지속과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북한경제 정보에 대한 수요는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1995년과 1996년에 걸친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북한의 대외적 고립 등으로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였으며, 북한체제를 지탱하였던 계획경제체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수요도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전망 차원에서 급격히 확대되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북한경제 정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이었다. 최악의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급감함으로써 대규모 기아가 발생한 1995~97년 소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식량 사정에 대한 정보는 정부의 대북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 현상에 대한 정보는 한국 정부가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의 변화와 함께 북한경제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면서, 적극적인 대북 교류협력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으며,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대북정책의 3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 하에서 대북 경제정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라 경제정보의 양과 질도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 당시 경제정보의 주요 대상은 북한 경제정책과 관련 법제의 변화, 평양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경제 상황 등이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대외경제협력도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이는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이 2002년 7월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신의주를 비롯하여 금강산과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7·1조치 이후 새롭게 나타난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보수요가 늘어났고, 변화된 경제운용 메커니즘이 실제 협동조합과 공장·기업소 등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또한 남북경협 확대에 따라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북한내 관련 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외자유치법, 외환관리법, 가공무역법 등의 제·개정을 발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문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하였다. 따라서 정보당국과 관련 경협기업 및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법제의 변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대북 투자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평양을 비롯하여 원산, 남포, 신의주, 라진선봉 등의 북한내 주요 거점들에 대한 전력사정, 노동력 현황, 교통물류체계 등과 같은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은 큰 변화와 함께 경제정보의 수요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상생·공영’을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제시하였다.<sup>8)</sup> 이는 북한의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하고, ‘상생·공영’한다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하여 북미

간의 국교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대 정책수단과 목표로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유도, 북한의 개방,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경제 선진화를 지향하고 호혜적 인도협력의 추구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을 개방하고 정상국가화 하는 것이다. 즉,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단순한 개방이 아닌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은 ‘정상국가화, 시장경제 수용, 주민의 경제적 자율성 획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대북 경제정보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교류협력 확대 차원보다는 비핵화의 진전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북 경제제재 추진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 수요가 확대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군수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해당 분야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대상이 되었다.

또한 북한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관련 정보활동도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유엔제재를 우회해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위조지폐·마약·위조담배 등의 제작, 유통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불법적인

8) 상생·공영 정책은 2008년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상생·공영은 대북정책의 명칭과 기조로 정해졌다.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새롭게 부상한 또 다른 경제정보 대상은 북한내 시장화의 진전과 관련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전에도 북한내 시장확산에 대한 정보를 주요하게 다루었지만, 이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기의 시장 확산이라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시장화’를 주요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였지만, 현 정부 하에서는 중앙 당국의 통제에 대한 반발 또는 저항 차원에서 진행되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 북한이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북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정보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의 무역통계의 경우 북한이 직접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역대상국의 세관통계를 통해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KOTRA에서 매년 북한의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도입 정보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북한경제 전망과 대외개방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북한내 자원 확보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보당국은 물론 관련 업계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 (3) 북한경제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등으로 인해 북한경제정보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대북 경제정보의 수집·분석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남북경협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 8월에는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에도 남북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이 추진, 실현되었다. 특히 NGO를 중심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활성화는 보다 다양하고 실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북한경제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선, 북한 경제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현상이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게 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접한 중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사회주의권 전반의 붕괴에 따른 북한체제의 고립과 체제존립에 대한 위기감도 북한내 일부 고위층 및 엘리트 계층의 탈북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사태로 인해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분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즉, 북한경제 정보 수집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북한내 현실에 보다 근접한 정보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한경제정보체계의 개선에 기여한 둘째 요인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차원에서 제3국 접촉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관련단체 대표 및 실무자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국에서의 접촉 확대가 불가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자들 간의 인적 유대와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북한내 경제상황이나 정책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남측 파트너에게 전달하였다.

북한경제정보의 수집 확대에 기여한 셋째 요인은 남북 당국간 대화의 지속이었다. 남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형태의 회담체계를 유지해왔다. 통일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경제부처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각종 실무회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교환하였다.

북한경제정보의 수집 확대에 기여한 넷째 요인은 북한체제의 외부개방 확대를 들 수 있다. 북한체제는 여전히 강력히 통제되고 폐쇄적인

사회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방문이 확대되었고, 이들 중에는 기업인은 물론 언론인과 학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협조하에 평양을 비롯한 북한내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산업현장 등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자국의 정보당국에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경제정보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남한 주민들의 대규모 방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금강산 지역의 관광객은 물론이고, 평양을 비롯한 북한내 주요 지역들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방북이 가능해지면서 북한경제 정보는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일부 경협기업들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북한내에서 장기간 상주나 수시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을 통한 북한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보다 용이해졌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경제정보의 수집, 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대북 전문매체나 일부 단체 등에 의해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터민과 일부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상된 대북 전문매체나 단체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이나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내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국내로 전달하고 있다. 2009년 11월말의 화폐개혁 관련 보도나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관련 보도를 가장 먼저 전달한 것도 Daily NK, 열린 북한방송 등의 대북 전문매체들이었다. 해당 매체나 단체들간의 속보경쟁과 지나친 이념적 개입에 따른 오보 또는 확대 해석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지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경제정보체계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주요 세부분야

### (1) 경제현황 관련 정보

북한경제 관련 정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고 기초가 되는 것이 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정보이다. 북한 당국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정보의 유통이 엄격히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통계 관련 정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북한 통계자료들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통계자료인데, 북한의 경우 국가경제의 기본통계를 대외비로 해서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모든 통계사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이라는 전문 통계기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의 통계국이 자주적인 행정단위로서 승격함으로써 설립된 이후 현재에는 내각의 별도 부처로 기능하는 통계기구이다.<sup>9)</sup> 중앙통계국은 그 설립 초기에서부터 통계와 관련된 국가의 모든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중앙통계국의 임무를 살펴보면, 첫째는 국가행정과 경제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제반 통계사업을 관장하며, 계획의 실행 부진 또는 실패에 대한 제반 원인을 조사하는 일이다. 셋째는 국가의 통계조사 및 계산 체계, 그리고 통계보고의 형식과 내용 등을 통일하고 표준화 하는 것이다. 넷째는 경제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민경제의 각종 ‘밸런스(balance)’를 작성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각종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요컨대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통계와 관련된 모든 국가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sup>10)</sup>

북한의 경우 실제의 통계와 외부로 공표되는 통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가 모든 통계를 일종의 ‘비밀’로

9) 실제로 1952년 발표된 북한의 내각명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① 국가계획위원회 통계국을 종전과 같이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두되 전국 계산-통계사업을 지도하는 자주적 기관(국가계획위원회 내의 자주적 행정단위)으로서의 중앙통계국으로 개편한다. ②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계획부서 내의 통계부서를 기초로 하여 도, 시, 군 및 구역에 자주적인 통계기관을 조직하여 이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 직접 종속시킨다(내각 결정 제 37호,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 조직에 대하여, 1952.2.28).

10) 이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4~15.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통계가 비밀이라고 해서 이를 외부에 전혀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효율적인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관련 통계를 공표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 거의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당시 북한이 한국 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공업화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스스로의 경제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당국의 통계발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정체상태에 빠지고 상대적으로 한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굳이 비밀로 분류되는 북한의 내부통계를 외부에 공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계발표 중단이 또다시 역전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식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체 통계를 외부세계에 제공할 필요성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뢰할 만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기구 및 한국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주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주요 통계자료로는 GDP통계, 대외무역통계 및 인구통계 등이다.

우선, 북한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시계열 통계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당연히 북한의 공식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UN통계국이 추정하는 시계열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시계열이다.<sup>11)</sup>

북한 공식통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50년대 말까지 북한당국은 ‘순물질 생산(Net Material Product)’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총산출량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DP 개념과

11) 물론 이 밖에도 과거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같은 외부기관,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GDP 규모를 추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할 만큼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당시를 기점으로 북한경제가 극심한 위기상황에 진입한 반면, 이와 관련된 경제 데이터의 입수는 더욱 더 어려워짐으로써 많은 연구기관이나 개별 연구자들에게 있어 북한의 GDP 추정작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는 잘 맞지 않는다. 이마저도 1960년대 이후에는 거의 발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필요한 여러 기초 통계들을 외부세계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자국의 GDP 규모에 대한 통계 역시 포함되었는데,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8년 UNDP와 공동으로 ‘북한의 농업회복 및 식량회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1992~1996년까지 자국의 북한 달러화 표시 GDP통계를 UNDP에 제출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 인권관련 보고서의 통계부록에도 1999~2000년 GDP통계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통계제출은 이후에도 이어져 2004년과 2005년 UNICEPF 등 국제기구에 제출된 북한의 각종 보고자료에도 2004년까지의 GDP통계가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그 대상기간이 매우 짧은데다, 통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부세계의 다양한 북한 GDP 추정치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GDP 규모를 외부세계에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UN통계국 역시 이러한 수치를 이용해 북한의 GDP 규모를 자체 추정·발표하고 있다.<sup>12)</sup> 물론 UN통계국은 북한의 GDP 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추정치가 북한의 공식 발표치를 일정 부분 이용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1996년 이후 북한 GDP에 대한 UN통계국의 추정치는 그 총량 규모면에서 북한의 공식 발표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1996년 이전의 추정치는 양자가 총량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GDP의 산업별 구성 비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UN통계국 추정치가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의 공식발표치를 토대로 이를 일정한 기준이나 가정에 의해 재구성 또는 재추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12) UN통계국의 전자데이터베이스 <<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를 참고.



〈표 VIII-1〉 한국은행 통계에 기초한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구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인구	천명	22,175	22,253	22,369	22,522	22,709	22,928	23,079	23,200	23,298	23,380
명목 GNI	조원	19.0	20.3	21.3	21.9	23.8	24.8	24.4	24.8	27.3	28.6
1인당 GNI	만원	85.6	91.2	95.4	97.4	104.7	108.1	105.8	107.0	117.4	122.5
경제성장률	%	1.3	3.7	1.2	1.8	2.2	3.8	-1.1	-2.3	3.7	-0.9
무역총액	억달러	19.7	22.7	22.6	23.9	28.6	30.0	30.0	29.4	38.2	34.1
수출	억달러	5.6	6.5	7.4	7.8	10.2	10.0	9.5	9.2	11.3	10.6
수입	억달러	14.1	16.2	15.2	16.1	18.4	20.0	20.5	20.2	26.9	23.5
대미 환율	원/ 달러	2.19	2.21	2.21/ 153	145.0	139.0	140.0	141.0	135.0	130.0	134.2
예산 규모	억달러	96	98	NA	NA	25	29	30	30.2	34.7	-

주: 1) 2000년 기준년 가격 기준

2) 2002년도 환율은 7:1조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북한의 공식통계나 UN통계국의 추정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GDP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해당연도의 북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한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들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주로 북한의 실물생산에 관련된 자료라는 사실만은 공개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한국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에 삽입하여 북한의 GDP를 추정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상대가격체계와 부가가치율은, 북한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상대가격체계와 부가가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컨대 한국은행은 북한의 생산량 데이터에 한국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곱해 얻어진 부가가치의 총계를 북한의 GDP 규모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북한의 GDP는 당연히 한국의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달러화 GDP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북한 원화의 달러화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원화의 달러화 환율이 적용된다.<sup>13)</sup>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그간의 북한경제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무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는 ①북한의 공식통계, ②한국 KOTRA가 발표하는 추정통계, ③IMF가 집계한 추정통계, ④UN이 집계한 추정통계 등이 있다. 북한당국이 자국의 무역규모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북한당국과 국제기구 등의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의 무역통계 일부가 외부세계에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그 후에도 이어져 현재에는 1993년 이후 2004년까지 북한의 공식무역통계가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공식통계는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이용 가능한 공식통계는 북한의 상품(merchandise)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이에 따른 총거래액 및 수지 적자액 등에 불과하다. 북한의 국가별 무역액이나 상품별 무역액과 같은 기초적 통계는 아직 공표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식통계는 북한의 대외거래에 대한 북한 당국 스스로의 집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부세계가 집계하는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는 모두가 거래 상대국의 통계를 이용한 것들이다. 우선 한국의 KOTRA는 해외 각국에 파견된 지사에서 보내오는 현지 국가와 북한과의 무역규모를 집계하여 매년 북한의 무역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KOTRA의 추정통계는 북한의 국가별·상품별 수출입 규모와 총거래 규모 그리고 무역수지 규모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거울통계는 주로 해당국의 세관통계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KOTRA의 추정통계는 매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로 발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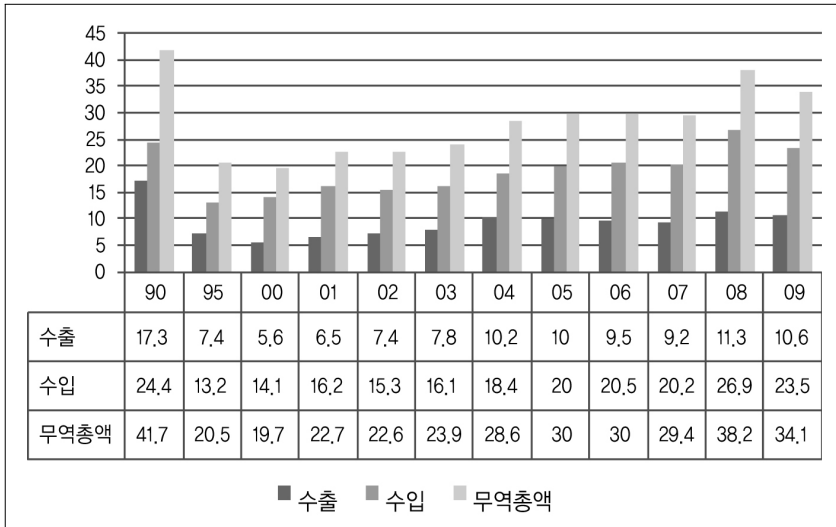
반면, IMF나 UN은 회원국 등이 보고하는 국가별·상품별 무역 데이터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무역 데이터는 누구나 해당

13) 이러한 방법이 과연 북한 GDP 규모를 올바르게 추정하는 방법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북한의 모든 경제변수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달러화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는 달러화로 표시된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 역시 따라서 오르거나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재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북한이라는 국가로 재정리하는 경우 KOTRA의 추정통계와 유사한 북한의 국가별·상품별 수출입 규모와 총거래 규모, 그리고 무역수지 규모 등에 대한 추정통계를 획득할 수 있다. IMF의 경우에는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라는 세계 각국의 국가별 무역 데이터를 통해, 그리고 UN의 경우에는 UN통계국이 제공하는 상품별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를 통해 이러한 북한무역의 추정통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Ⅷ-1>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경제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통계중의 하나가 인구통계이다. 올바른 인구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인당 GDP와 같은 경제의 기초적 변수조차 확정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인구통계는 GDP통계나 무역통계와는 달리 외부세계의 독립적인 추정통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통계청이나 UN통계국 등과 같은 외부기관이 북한의 인구와 관련된 추정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정통계는 거의 대부분 북한의 인구통계에 그 기반을 두고 이를

보다 정치화하거나 교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청과 UN통계국 등의 북한인구 추정통계는 1994년 실시된 북한의 센서스 데이터 및 이후의 관련통계들을 토대로 몇 가지 가정과 기법을 적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의 GDP나 무역에서와 같이 외부기관이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하는 추정통계는 인구분야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2) 경제정책 관련 정보

북한경제 관련 정보 중에서 정책 당국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북한의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평가,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공식매체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중요한 결정이나 정책방향을 김일성·김정일의 발언 또는 저작물을 통해 공개하였다. 과거 김일성은 주요 산업현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해왔으며, 이는 김정일 시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북한의 경제정책 정보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자료중의 하나는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신년사이다. 김일성 생존시에는 신년사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1995년부터는 당보, 군보, 청년보 등 3개 기관지의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신년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전년도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신년의 정책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 당국은 물론 일반 연구자들도 북한의 신년사설을 당해 연도 북한 경제정책 방향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매체로는 『로동신문』, 『민주조선』, 『근로자』, 『경제연구』, 『조선신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당정의 주요 회의결과 및 결정사항 등을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결정과정에서의 논쟁이나 쟁점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 파악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전문 잡지인 『경제연구』의 경우 북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정책결정 이전에 북한의 경제부문에 대한 주요 쟁점과 관심분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조선신보』의 경우 일본의 조총련에서 운영하는 기관지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결정사항 중에 외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반영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북한 당국이 조선신보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 신문에 게재된 경제정보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는 이와 같이 공개출처를 활용한 정보수집이 기본이 되고 있지만,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수집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평양에 장기간 상주하거나 수시방문이 가능한 기업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제3국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경제부문 일군들과 남측 인사들과의 접촉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문인원의 확대와 제3국의 수시접촉 과정에서 북한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대북 경협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과정에서도 관련 정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수집은 제3국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북한 방문이 자유로운 중국인 관료나 연구자, 기업인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북한경제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조총련 관계자들도 북한 당국과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데 있어 유용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

### (3) 경제관련 법제 정보

북한경제정보 중에서 법제관련 정보는 대북 경협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이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현장에서의 실제 관련 법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관련 법제 정비는

북한의 개혁·개방과도 연관성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을 비롯한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데 주력해왔다. 북한이 핵문제와 북미관계 개선의 부진 등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뚜렷한 실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관련 법제 정비에 있어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관련 법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법제관련 정보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공개출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개최결과나 내각의 결정 등으로 법률을 제개정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성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제개정된 법률의 전체 조문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법제정비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인간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남북경협 참여 기업과 대북 지원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북한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관련 문건을 입수해서 국내외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표 VIII-2> 최근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정비 현황

구분	주요 법률
경제/자원 (36개)	사회주의상업법('92.1), 공증법('95.2), 보험법('95.4), 재정법('95.8), 품질감독법('97.7), 화폐유통법('98.11), 재산관리법('98.12), 통계법('99.2), 귀금속관리법('99.2), 발권법('99.3), 인민경제계획법('99.4), 가격법('99.8), 손해보상법('01.8), 제품생산허가법('02.7), 회계법('03.3), 중앙은행법('04.9), 국가예산수입법('05.7), 상업은행법('06.1), 자금세척방지법('06.10)
	토지법('77.4), 도시경영법('92.1), 건설법('93.12), 국토계획법('02.3), 하천법('2.11), 도시계획법('03. 3), 간석지법('05. 7)
	수산업('95.1), 량정법('97.2), 농업법('98.12), 양어법('98.12), 과수법('02.12)
	지하자원법('93.4), 전력법('95.12), 물자원법('97.6), 에네르기관리법('98.2), 주민연료법('08.12)

구분	주요 법률
과학/기술 (13개)	과학기술법('88.12), 원자력법('92.2), 계량법('93.2), 규격법('97.7), 상표법('98.1), 발명법('98.5), 기술수출입법('98.6), 공업도안법('98.6),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03.6), 소프트웨어산업법('04.6),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04.12), 기상법('05.11), 유기산업법('05.11)
무역/개방 (22개)	나선경제무역지대법('93.1), 금강산관광지구법('02.11),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02.9), 개성공업지구법('02.11), 세관법('83.10), 합영법('84.9), 합작법('92.10), 외국인투자법('92.10), 외국인기업법('92.10),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93.1), 외화관리법('93.1), 토지임대법('93.10), 외국투자은행법('93.11), 대외경제계약법('95.2), 대외민사관계법('95.9), 수출입상품검사법('96.1), 무역법('97.12), 대외경제중재법('99.7),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04), 가공무역법('00.12), 원산지명법('03.8), 북남경제협력법('05.7)
교통/통신 (12개)	해운법('80.8), 항만법('86.9), 철도법('87.10), 체신법('97.2), 자동차운수법('97.2), 도로법('97.9), 해상감독법('97.9), 민용항공법('00.3), 갑문법('01.3), 배길표식법('04.3), 수로법('04.3), 도로교통법('04.10)
민사(4개)	민사소송법('76.1), 민법('90.9), 가족법('90.10), 상속법('02.3)

자료: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2009』(2009. 10), p.343.

#### (4) 경제부문 관련 기구 및 인적 정보

북한경제 관련 정보 중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정보가 관련 기구의 구체적인 활동과 조직개편 및 인적 관련 정보이다. 북한 당국이 경제관련 기구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나 기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이름만 공개하지 그들의 경력이나 구체적인 이력사항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련 기구 및 인적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인간정보를 통해 수집, 확인되고 있다. 물론 내각의 주요 경제관련 부처의 권한과 주요 인사(장차관급)들에 대해서는 공개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지만,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이나 실제 경험현장에 나서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북 경험업체 관계자들은 북한의 상대기관과의 접촉과정에서 해당 기구의 실체나 권한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해당 기관들의 책임자도 이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다.

북한의 경제관련 기구나 관계자에 대한 정보는 그 동안 남북경협 및 대외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는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거나 확인되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경제담당 기관들의 실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정 기간 경과이후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내부의 자료 등을 통해 사후에 검증,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5) 북한의 불법경제활동 관련 정보

북한의 경제관련 정보 중에서 정보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불법경제활동 관련 정보이다. 이는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외화벌이 및 통치자금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해왔다. 주요 대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미 달러의 위폐 제작을 비롯하여 무기거래, 위조담배 제조, 마약 제조·판매 등이다.

1980년 후반에는 북한은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한편 수입국의 군사교관훈련 등 기술지원도 제공함으로써 연 5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하여 당시 북한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수출은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게 된다.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무기수출액을 2001년 1억 달러, 2002년 2억 1,650 달러, 2003년 1억 7,30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5,65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기수출을 더욱 제약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마약은 북한의 주요 불법 수입원인데, Perl(2005), Asher(2006) 등이 추정하는 북한의 마약수입은 연간 7,000만~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과대추정된 것으로 미 국무부가 추정하는 북한의 마약 제조면적에 기초할 경우 1억 달러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4)</sup> 또한 북한은 100달러짜리 슈퍼노트 생산국으로 의심받고 있다. 2006년 당시 문제가 된 BDA 사태도 슈퍼노트에서 기인한 것이다. 위조 담배 및 의약품도 제조하여 중국, 러시아 등에 일부 수출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14)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입 추정," pp. 35~36.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는 주로 과학기술장비와 인간정보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육로운송을 비롯하여,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동을 인공위성을 통해 정밀 감시함으로써 불법경제활동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요 불법무기거래 대상국으로 간주되는 미얀마나 중동국가들에 대한 감청활동이나 정보활동 등을 통해 거래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경제 활동은 인간정보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고위급 외교관료나 외화벌이에 참여했던 북측 인사들이 탈북하게 되면서 해당 정보를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는 한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 정보당국 간에 교환, 공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관련 사안들이 단순한 경제이슈를 넘어 안보나 대북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VIII-3>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수입 추정**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마약거래	50.0	45.0	40.0	25.0	20.0	17.5	17.5	10.0	10.0
위조지폐	4.0	4.0	4.0	4.0	4.0	4.0	4.0	1.0	1.0
위조담배 등	1.0	1.2	4.2	4.3	4.5	4.6	4.7	4.9	5.0
합계	55.0	50.0	48.2	33.3	28.5	26.1	26.2	15.9	16.0

자료: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16권 2호(2010),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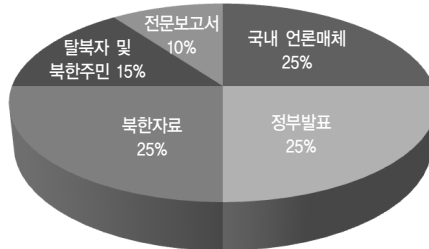
### 3.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 가. 수집단계

##### (1) 북한경제정보 수집실태

정보소비자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활동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비자에 의한 모든 정보요청이 수용되지는 않으며, 국가이익이나 사회적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일수록 정보수집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국가정보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PNIO; Prior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를 설정해 놓고 정보수집 활동에 들어간다. PNIO는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의 변화와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 일단 수집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수집대상을 식별하고 수집전략을 모색한다. 수집대상은 통상 정보요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수집전략은 주로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수집의 경우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sup>15)</sup> 북한경제 관련 정보수집도 이러한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그림 Ⅷ-2> 한 경제 관련 정보 수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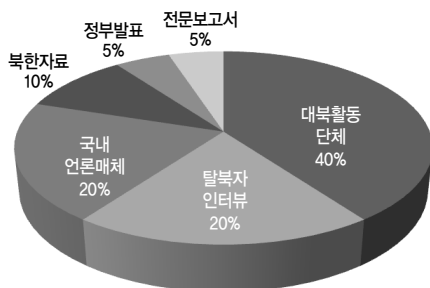
북한경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북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복수 응답을 실시

15)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3), pp. 44~45.

한 결과 25% 동등한 비율로 국내 언론매체, 정부 발표, 북한자료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 15%, 전문보고서의 경우 10%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북한경제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인 북한 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접하는지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40%)가 대북활동 단체를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탈북자 인터뷰(20%), 국내 언론매체(20%), 북한자료(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I-3> 북한 시장상황 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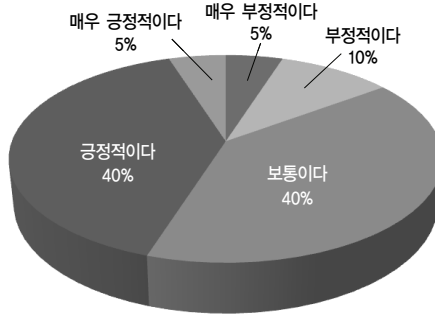


한편 최근 Daily NK, 열린북한방송 등과 같은 대북전문 매체의 활동이 활발한데, 이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부정적에서 5점: 매우 긍정적)로 답을 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인 40%의 응답자가 ‘보통이다’와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으로 3.30의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보통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국내 대북 매체는 열린북한방송, Daily NK, 좋은벗들,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등 모두 다섯 곳이다. 대북 매체들이 놀라운 정보력을 발휘하는 것은 고효율의 독자적인 정보 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국내 대북 매체들의 정보 라인 형태는 대체로 비슷하다. 핵심적인 역할은 탈북자 출신으로 구성된 스트링거(stringer; 비상근 통신원)들과 상근 기자들이 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sup>16)</sup> 이들은 제각기 북한 내부에 취재원을 두고 있다.<sup>17)</sup>

상당수는 북한 상류층들이나 수재들이 다니는 평양에 있는 대학을 일컫는 이른바 ‘중앙대학’ 출신들로 알려졌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접근도가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림 VIII-4> 대북전문 매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 (2) 인간정보(HUMINT) 수집 실태

인간정보는 가장 전통적 방식의 정보수집 방식으로, 간첩 또는 정보원으로 대변되는 사람을 활용한 정보수집 방식이다.<sup>16)</sup> 북한과 같이 폐쇄적이고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인 국가의 경우 정보수집에 있어 인간정보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북한경제 정보의 수집에 있어 인간정보는 전통적 의미의 간첩의 개념보다는 인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경제와 관련된 주요 인간정보원으로는 탈북자, 외부 언론 및 NGO 등과 연결된 북한 내 거주민,<sup>17)</sup> 해외거주 북한주민,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차원에

16) 『시사저널』 (1083호), 2010년 7월 21일.

17) 통신원들이 북한 내부 취재원들과 접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장 손쉽고 보편적인 루트이다. 현재 북한에는 중국 휴대전화기 많이 들어가 있다. 통신원들은 남한이나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 취재원들과 접선한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 내부 취재원을 불러들여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다. 한 대북 매체 관계자는 “휴대전화 접선보다 위험도가 높지만,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매체들은 직접 접선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8) 인간정보는 사람을 침투시켜 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첩행위를 통한 정보수집 방식이다. 주요 수집대상국에 대한 의도, 동기, 선호층, 정책결정과정 등 미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인간정보 이상 유효한 것은 없다. 사실 인간정보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정보수집방법이다. 그러나 약점도 크다. 간첩활동에 따른 위험도, 역용공장 또는 역정보에 대한 취약성, 수집정보의 신뢰도 등은 인간정보의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39.

서 북한을 왕래하는 기업인과 NGO 단체 관계자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정보기관 차원에서 운용되는 인간정보원도 존재하겠지만, 최근 북한경제 관련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는 우선 탈북자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으로 탈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 관련 정보가 크게 확대되었다.<sup>20)</sup> 물론 탈북자들을 통한 경제정보 수집은 신뢰성과 대표성의 문제와 함께, 정보의 내용이 경제정책이나 전국적 상황이 아닌 지역적 특수성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통한 경제정보는 기존의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북한주민들의 실제 경제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경제관련 인간정보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북한내 주민들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북한과 중국 간의 접경지역에서 북한주민들과의 통신접촉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을 통한 북한경제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에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 관련 정보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처음 외부로 전달되었고,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 거주민들과의 통신접촉 등을 통한 정보수집은 대북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좋은벗들, NK 지식인연대, Daily NK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인권 관련단체 및 종교단체, 대북전문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 간의 경쟁과열로 인한 신뢰성 문제와 함께, 일부 단체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수집 과정의 이념적 편향성 개입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19) 이들은 체계적인 공작교육을 받거나 한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침투된 정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정보의 전통적인 간첩, 공작원과는 다르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해외 언론 및 NGO 등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탈북자 수는 2008년말에 1만명을 넘어섰다.

북한주민들의 실제 경제생활 관련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서는 대북 경협기업인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평양 인근지역을 비롯한 북한 내에 투자를 하여 생산활동을 하거나 임가 공사업 등을 통해 자체 기술인력들과 경영관계자들이 북한내에서 장기간 상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북 지원단체들도 농업지원사업과 영유아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양과 인근지역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서 북한경제 상황변화에 대한 추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책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당 정보원들은 주로 평양을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 또는 책임있는 당·정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이들로부터 경제정책이나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원들에 비해 대북정책에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III-4> 남북왕래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1989~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남→북	27,154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743,565
북→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7,735
합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742,300

자료: 통일부

이러한 인간정보원의 다양화와 이를 통한 경제정보의 양적 확대가 가능하게 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북한 경제난의 지속에 따른 탈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같이 폐쇄되고 엄격히 통제된 국가에 정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설사 침투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첩보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늘어난 탈북자들의 남측 유입은 북한사회 전반 및 주민들의 실제 경제생활에 관한 이해와 정보수집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 특히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북한 내에도 이동전화기의 보급이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이동전화기는 북한내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외부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수년전부터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의 이동전화기를 통해 중국내 북한지역 거주민들과 비밀리에 통화접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셋째, 북한의 부분적 개방에 따른 북한 방문자 수의 증가와 인적교류의 확대이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남북한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북한이 7·1조치의 발표, 신의주·개성 등의 추가 경제특구 설치 등과 같은 부분적인 개혁 및 개방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를 비롯한 경제인들의 평양방문도 크게 증가하였고, 북한내 시장활동과 연계된 중국인들의 방문도 확대되었다. 게다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이나 동아시아, 중동 지역 등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진출이 늘어난 것도 북한경제 관련 인간정보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3) 공개출처정보(OSINT)

냉전시기에는 공개출처 정보의 유용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말 이후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공개출처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혁명을 통한 공개정보공간의 확충과 연계망 구축의 역동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공개출처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체, 학교, NGO는 물론 개인까지도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출처를 통한 정보수집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느냐 하는 것과 이를 제대로 분석·활용 하는 것이다.<sup>21)</sup>

21) 이러한 공개출처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부분의 정보분석기관들은 공개출처에서 얻어낸 정보보다는 휴먼트나 테깃트 등을 통해 비밀리에 취득된 정보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40.

북한경제 관련 정보에서도 공개출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접근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1차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차 자료에는 북한 당국이 생산하는 공식문헌들, 즉 각종 기록, 팸플릿, 신문, 잡지, 연감, 단행본, TV 및 라디오 방송과 김일성·김정일의 저작물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공개출처정보 중에서 최대의 문제는 자료부족과 이들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다. 특히, 경제정보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통계 관련 자료에 대해 매우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표적인 통계자료인 『조선중앙연감』의 경우 1965년 이후에는 경제통계계재를 중단했다. 이후 공업총생산과 국가예산 통계가 매년 발표되는 유일한 통계자료였지만, 그마저도 1985년 이후 발표가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통계치는 절대치보다 어떤 기준년에 대한 상대치(증가율)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 기준년조차도 명확치 않았다. 사실상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통계에 있어 정보적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발표수치도 과정이나 왜곡 등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곡물생산량이 1963년에 500만톤, 1975년에 800만톤, 1984년에 1,000만톤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은 1970년대 들어 10%가 줄었고 1980년대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10%가 줄었다. 이밖에도 발표된 통계와 거시적·미시적 상황과의 부정합성이 나타나거나 발표자료 간에도 모순이 드러나 통계전반에 대한 신뢰에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계량화된 통계자료에 비해 비수량화된 경제자료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간신문이자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다. 정기간행물로는 당의 기관지인 『근로자』와 경제전문 월간지인 『경제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간행물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 관련 공개출처정보의 상당부분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김일성·김정일의 연설과 저작들은 북한경제정보에 있어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북한은 중요한 경제정책 전환과 결정, 각종 경제현상의 문제점과 부조리 등을 김일성·김정일



의 연설이나 담화문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저적선집과 저작집, 김정일선집 등을 통한 경제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TV 및 라디오 방송도 중요한 공개출처정보원이다. 북한에는 3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조선중앙텔레비전, 만수대텔레비전, 개성텔레비전)과 4개의 라디오 방송국(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구국의 소리방송, 평양인민FM방송)이 있다. 1971년 4월 15일에 대남선전을 전담하는 개성 텔레비전 방송(채널 10)이 개국했다. 20kW의 출력에 방송시간은 평일 오후 7시~밤 11시 30분이다. 북한의 다른 텔레비전 방송이 방송기술상 PAL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이 방송은 남한과 같은 NTSC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텔레비전 방송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중앙텔레비전이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난 1969년 4월 개국, 25kW의 출력으로 정규 흑백방송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이 방송은 1974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63회 생일을 계기로 컬러방송을 시작했다.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국은 1983년 12월 4일 평양지방만을 시청권으로 하여 개국했다.

북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은 중앙방송이다. 이 방송은 북한 방송의 효시이기도 하다.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북한귀환을 환영하기 위한 ‘조선개국환영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렸다. 이를 중계하기 위해 일제하 평양방송국의 명칭을 ‘조선중앙방송국’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정비, 500W의 출력으로 일부 북한지역에 라디오방송을 실시했다. 중앙방송은 대내용으로 중파 3채널과 단파 4채널을 갖고 매일 22시간 방송하고 있다. 평양방송은 대외·대남용 방송으로 500kW의 출력으로 하루 23시간 30분 방송한다. 대외용이기 때문에 방송내용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4) 기술정보(TECHINT)

기술정보는 크게 영상정보(IMINT: imagery intelligence),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 측정기술정보(MASINT: measurement and signature intelligence) 등으로 구분된다.<sup>22)</sup> 우선, 영상정보는 첩보위

성과 상업용 위성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정찰기 및 조기경보기 등의 항공기를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상정보는 사진이나 이미지 구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정보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신호정보는 위성, 항공기, 지상기기 등에 의해 수집된 상대방의 통신, 전자파 및 기타 신호를 분석해서 얻어내는 정보이다. 상대국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통신정보(COMINT; communication intelligence), 각종 무기나 레이더로부터 발산되는 전자파를 감청하는 전자정보(ELINT; electronic intelligence), 시험중인 무기로부터 파생되는 신호를 분석해서 얻어내는 원격측정정보 등이 신호정보의 주종을 이룬다.

측정기술정보는 영상이나 신호정보 이외의 방식으로 얻어진 기술정보를 지칭하는데, 통상 레이저정보(LASINT), 레이더정보(RADINT), 적외선정보(IRINT), 핵정보(NUCI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정보는 인공위성이나 정찰항공기 등과 같은 고도의 군사장비를 이용해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비공개자료나 특수비밀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나 관계단체 등에 의해 가공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정보는 그 특성상 군사정보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정보에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지역의 자유로운 방문이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정보 수집에 있어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경제정보 수집에 있어 기술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북한 식량생산 관련 정보수집이다. 항공이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 매년 북한의 식량재배면적, 작황현황 및 수해현황 등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이 북한식량수급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기술정보를 통해 획득되는 주요 북한 경제정보로는 산업가동률과 물류현황, 국토개발현황 등이다. 인공위성과 정찰항공기 등을 통해 북한의

22) Richelson(1990), pp. 66~70.

철도·도로의 교통량과 주요 공업지역 및 산업시설 등의 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상자료를 통해 북한 내 새로운 철도·도로, 발전소, 공장 및 산업시설, 농지개관 등의 실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기간 동안의 자료축적을 통해 북한경제 추이나 활동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나. 분석단계

수집된 첩보는 정제되지 않으면 정보가 될 수 없는데, 바로 이 정제작업이 분석과정이다. 분석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수집된 첩보 및 자료의 처리이다. 인적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빙성과 정확성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분석은 적시성(timeliness), 간결성(digestibility), 명료성(clarity)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적시성은 제한된 시간내에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정보수요자들에게 분석결과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간결성은 최종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정책이나 기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료성은 복잡한 현상을 현실의 왜곡없이 단순화시켜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정보분석과정은 대체로 분류(collation)-평가(evaluation)-분석(analysis)-통합(integration)-해석(Interpretation) 등의 5단계로 진행된다.

### (1) 분류(collation)

정보분석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수집된 첩보나 자료들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정보분류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사실(known facts), 비밀(secret), 역정보(disinformation), 미스터리(mysteri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4)</sup>

23)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p. 45~46.

24) Berkowitz & Goodman(1996), pp. 86~106.

이를 북한경제정보 분류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공개된 사실은 공개출처, 신뢰성 있는 복수의 인적정보, 영상자료 등의 기술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첩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2002년 7·1조치 이후 구역시장을 도입했다는 최초 첩보는 이후 공개된 사실로 입증되었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같은 주요 보도매체나 경제연구 등의 경제전문지 등에서 시장개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고, 실제 시장참여자인 북한주민이나 조선화교 등을 통해 시장의 운영실태나 가격체계 등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외국 관광객이나 북한의 TV 등에서 시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즉 북한에서 구역시장 개설은 초기단계에서 공개된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사실은 그 차제만으로 정보적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 즉, 구역시장 개설이 공개된 사실이라면, 실제 시장의 운영실태나 이후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북한 정책당국의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등이 보다 중요한 정보분석의 대상인 것이다.

비밀은 첩보분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료이다. 국가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나 아는 공개된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사회 내부의 비밀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분석은 첩보의 확인상의 제약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폐쇄적이고 정보가 차단된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보에 대한 비밀분류는 일반적으로 1급, 2급, 3급 비밀과 대외비로 구분된다.<sup>25)</sup>

북한경제 정보는 정치나 군사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요 경제관료의 인사사항, 군수경제,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자금 관련 내용,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위폐·마약 등의 불법거래 현황 등의 자료는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비밀의 일부 내용이 정보관계자나 전문연구자 등에 의해 공개되기도 하지만,<sup>26)</sup>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

25) 간혹 정부 내부회의 자료에는 대외주의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비밀분류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26) 국가정보원 고위관료 출신인 한기범의 박사논문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2009)는 일부 비공개 및 특수자료를 활용해서 북한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지는 않고 있다.

역정보는 적대국이 상대방의 분석관들을 기만하고 오판과 정책실패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리는 정보를 의미한다. 최근 수년전부터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북한경제의 실적을 부각시키고, CNC화, 주체철생산, 비날론 생산 정상화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이것이 북한당국의 역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혀 개선조짐이 없는 북한경제상황을 호도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북한경제 상황 진단시 상반된 분석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첩보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중복 확인, 과학기술적 근거 확보 등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역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미스터리는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만으로 규명해낼 수 없는 의문사항이나 현안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책결정자나 일반 주민들의 행태 및 심리분석 등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조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김정일 위원장 및 북한 정책결정 그룹의 인지구조나 정책성향 등에 대한 정보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는 구할 수 없으며, 기존 사례나 관련 조치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스터리에 대한 논리적 추론과 체계적인 분석을 반복할 경우 유사한 돌발상황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 마련이 한결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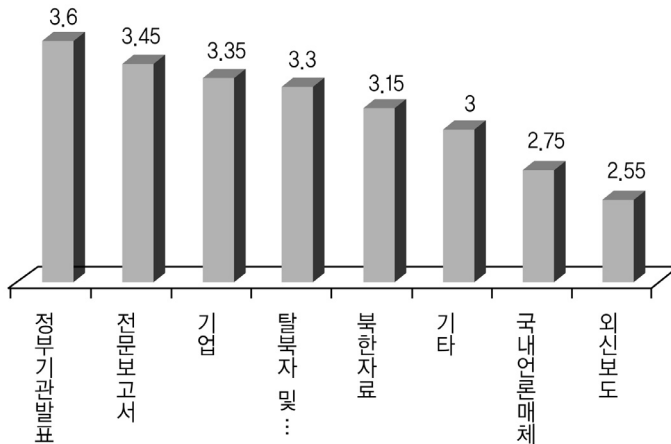
## (2) 평가(evaluation)

정보분석의 2단계는 분류된 첩보와 자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이는 수집첩보원의 신빙성과 수집된 첩보의 신뢰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경제 관련 정보는 그 양도 크게 늘어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신뢰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보제공원에 따라 신뢰도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설문조사는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신뢰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1점: 매우 낮다 ~ 5점: 매우 높다)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그림 VIII-5>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정부기관 발표자료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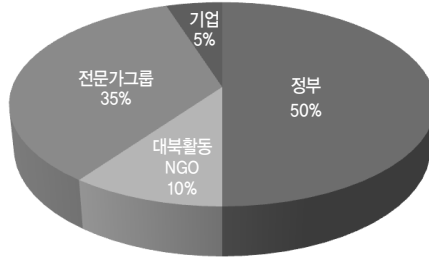
신뢰도 평균이 3.6점으로 가장 높으며, 국내언론매체 및 외신보도가 각각 2.75점과 2.55점으로 제일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정부기관 발표 및 전문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3점대 초반에 머물러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언론매체들이 정보의 확인보다는 신속보도에 치중하여 오보나 미확인 정보를 남발하였고, 각 언론기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림 VIII-5> 북한 경제 관련 정보수집 수단에 대한 신뢰도 평균



북한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 논란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주원인으로 보는 응답자가 5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정보 수집 및 해석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이라는 것이 지적도 3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집단으로 정부가 50%를 차지하였고, 전문가그룹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대북활동 NGO와 기업이 각각 10%와 5%를 차지하였다. 언론기관의 역할에 대해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대북정보 수집에 있어 제약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 VIII-6> 경제정보의 수집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집단**

### (3) 분석(analysis)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바탕으로 3단계에서는 수집된 첩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 알려졌거나 확인된 사실들과 대조를 통해 일련의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분석 작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 정보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정부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이다. 국가정보원은 여타 기관을 압도하는 예산과 전문인력<sup>27)</sup> 및 정보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분석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통일부도 정세분석국 내에 경제담당과를 두고 북한경제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에 있어 국정원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내의 경제정보 분석은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지며, 국정원에 의해 분석된 정보내용이 통일부나 경제관련 부처에 제공되어 공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통일부나 여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정원에 제공하거나, 국정원에서 제공된 정보와의 대조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분석 작업과 그 결과의 공유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다.

정보분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이다. 북한연구의 대표적 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개발연구원,

27) 정보분석의 핵심은 정보분석관의 자질에 달려 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도 정보분석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오판할 경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분석관의 충원과 양성은 정보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은 북한경제 관련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기업연구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의 주요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들도 북한경제 관련 분석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북한경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슈는 물론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나 고급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전문지식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정부 주도의 정보분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보분석 결과는 거의 대부분 비공개나 비밀로 처리되지만,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는 출판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4) 통합(integration)

분석된 첩보들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되어야만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북한경제정보의 경우에도 북한의 식량수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곡물수확 현황, 식량수요량, 식량수출입물량,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분, 농업인프라 현황, 비료생산 및 수입 현황 등과 같은 개별 정보들을 통합해서 분석해야만 북한 식량수급 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가능해진다.

2002년 7·1조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북한 지도부내 정책결정 과정, 북한의 공장·기업소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누진도급제도입 등의 임금체계 변화, 생활비 및 가격 조정내역, 중국·베트남 등 기존 경험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전략적인 정보판단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별분석 정보들을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해석(Interpretation)

분석·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판단을 하는 것이 해석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보분석을 통해 미래의 개연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정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해석단계의 작업은 국정원보다 개별 정부부처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분석과 통합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해석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대응방안 및 정책대안의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단계는 국정원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실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정책부서들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해석은 연구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 분석된 정보는 연구기관에 제공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다. 북한경제정보의 관리 및 활용단계

분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분석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배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된 정보는 크게 기본정보, 현용정보, 전략정보, 예측정보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분류에 따라 공개 및 배포수준이 결정된다.

### (1) 기본정보(basic descriptive form of intelligence)

기본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국가에 대한 망라형 총괄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지리, 인구, 역사 등 대상국가에 대한 모든 첩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본정보는 과거의 사실이나 이벤트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 분석해 놓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참고용으로 활용된다.<sup>28)</sup>

28) Abram, N(1991), p. 57.

북한경제 관련 기본정보로는 각종 경제관련 통계, 경제정책, 경제관리 체계 및 제도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경제 기본정보는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연구기관, 언론사, NGO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관련 정부기관이다. 통일부의 경우 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사업 등의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웹사이트와 정기간행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개요』, 『통일백서』 등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국정원도 북한의 일일동향을 비롯하여 경제정책, 제도, 관리체계, 기본통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웹사이트<sup>29)</sup>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여타 부처들도 자신들과 관련된 북한경제 일일동향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북한경제 기본정보는 관련 정부부처 외에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기본정보인 경제통계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규모를, KOTRA와 무역협회는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KOTRA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대외경제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LH공사가 개성공단관련 정보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현황 등을 기본정보 제공하고 있다.

연구기관들도 북한경제 관련된 다양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북한전문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각종 출판물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기본정보로는 북한관련 통계자료, 북한경제동향 자료, 국내외 북한연구 자료 등이 있다. 그 외에 북한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들인 KDI(북한 거시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KIET(북한 산업동향 및 산업정책), KIEP(북한 대외경제동향 및 정책), 농촌경제연구원(북한 식량수급 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수급동향, 지하자

29) <http://www.nis.go.kr/app/north/information/economy/list>

원 보유 현황), 국토연구원(북한 사회간접자본 현황) 등도 자신들과 관련된 전문가료 및 기본정보를 홈페이지나 출판물 등을 통해 일반에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에 대한 기본정보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북한경제 관련 기본정보가 상업적 수요에 의해 제공되기 보다는 공공의 목적 차원에서 무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현용정보(current reportorial form of intelligence)

현용정보는 매일매일 국내외 주요 정세를 추려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국내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놓은 일일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현용정보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 및 외교현안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용정보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관련 현용정보의 생산, 활용은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내에서 북한경제 관련 현용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등이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도 필요시 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현용정보는 대부분 언론이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거나 관련 대책을 수립,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경우 북한의 방송·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공개된 사실이나 해외주재 정보원을 통해 습득된 첩보, 각종 기술정보를 통해 수집된 첩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북 일일동향’ 형태로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 그 동안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관의 현용정보는 안보

및 대북관련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현용정보에서 경제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핵심과제로 제기한 이후 북한 매체를 통해 경제관련 정책이나 사례 등이 빈번히 공개되고 있고,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대외경제협력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도 대북 일일동향 형태의 현용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주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에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의 현용정보는 인간정보나 기술정보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과 같은 북한의 언론매체 보도내용이나 북한이 운영중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된 공개출처정보를 활용해서 현용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의 현용정보는 북한경제와 관련된 비밀이나 비공개 첩보나 자료 등을 제공하기 보다는 북한측의 경제정책이나 관련 조치들에 대한 배경과 의도 등을 심층 분석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

외교부는 주요 해외공관을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를 현용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소위 4대국의 해외공관의 일일보고 중에서 대북관련 내용이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부를 통한 현용정보 중에서 경제분야의 경우 해당 국가들과 북한 간의 무역·투자·과학기술 등의 경제협력 동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대북 경협프로젝트나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현용정보의 생산,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언론기관 및 NGO단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언론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언론매체의 경우 북한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 전문기자를 활용하여 북한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기사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가 극심한 위기국면에 처했던 1990년대 중후반과 2002년 7·1조치를 전후로 한 시점, 2009년 11월말 경의 화폐개혁 조치 등을 전후한 언론사의 대북 사실기사와 분석해설 기사의 경우 현용정보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sup>30)</sup> 특히,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Daily NK, 열린북한방송, 통일뉴스 등 대북 전문 언론매체들은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실시간 전파

와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당 언론매체들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다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보경쟁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북한경제 관련 현용정보를 공개하고 일반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용정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보급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이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일정한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북한수해 상황이나 돌발사건에 대한 인도적 지원결정이다. 지난 1995년과 2007년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수해, 2004년 용천폭발사건 등에 대해 모든 언론매체가 참혹한 현장사진과 함께 대북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실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 NGO 단체들도 자신들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첩보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현용정보 수준의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들이 농업지원을 비롯하여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 소규모의 에너지협력, 교육훈련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하고, 북한측 관계자들과의 대화나 인터뷰 등을 정보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정보분석의 현장감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 (3) 전략경보정보(strategic warning intelligence)

전략경보정보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용정보의 일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략경보정보는 적의 동향을 부단히 감시해서 얻어지는 공세적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다.

전략경보정보는 일련의 주요 지표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된다는 점에서, 현용정보가 일일동향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전략경보정보는 몇 개의 현용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의 변화에 대한 핵심

30) 물론 언론사의 이러한 기사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의 분석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은 현용정보의 생산주체라기 보다는 보급,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북한경제 관련 전략정보정보는 국정원,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과 주요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기관의 경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북일일동향과는 달리 대통령 또는 장관 등에 대한 대면보고나 서면보고 등의 형태로 전략정보정보를 생산한다. 북한경제 관련 전략정보정보는 공개출처를 통해 발표되는 일련의 연관된 경제조치의 발표나 인사개편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상의 중대한 전환이나 새로운 개혁조치의 발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 내에서의 정보분석과 대응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임박한 변화를 미리 경보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북한이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새로운 경제조치가 발표되거나 공개된 이후 이에 대한 심층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만큼 북한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은 현용정보를 경보정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수해에 따른 식량수급에 관한 경보정보를 만드는 과정에는 공개출처정보나 인적정보를 통한 접근과 함께 기술정보인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 수해피해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병행된다. 또한 북한이 경제정책의 전환이나 경제특구 추가 등의 대외개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의 정보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에서 정보원에 의한 대북 경제사업가들과의 접촉도 이루어진다.

북한경제 관련 경보정보 생산 및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연구기관이다. 특히 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들은 유관 부처와의 협의하에 현용정보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추진하여 전략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정부나 일반에게 제공한다. 특히 연구기관들이 심층 분석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북경제 관련 전문 연구기관들은 오랫동안 해당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연구자들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해외전문가, NGO단체 관계자, 경협기업인 등 자신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연구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의 심층분석 보고서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부에 정보판단을 보고하는데 있어 외부전문가들의 견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외부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의 결과를 자신들의 정보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정책결정 과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경제 관련 전략정보정보의 경우 상당기간 정부내 정책결정자를 비롯하여 일부 관계자, 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인력 등 소수에게만 공유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활용되는 정보라는 차원에서 정보공개시 정보원의 노출, 정책대응 혼선, 북한에게 우리의 대응 사전 노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4) 예측정보(speculative evaluative form of intelligence)

예측정보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과 판단까지 포함된 가장 정선된 정보이다. 국가안보 운영에 있어 정세예측과 판단이 가장 중심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입장에서 예측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경제에 대한 예측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경제 상황의 중장기 전망은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될 경우 체제붕괴 또는 통제력 약화에 따른 혼란발생 가능성 등이 상정될 수 있다. 반면 북한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주민생활도 안정될 경우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중장기 전망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북한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급격한 남북경제통합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남북경제의



연계성 강화전략을 준비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의 예측정보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의 경제부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들은 북한관련 연구기관이나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북한경제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대응전략을 마련해왔다. 해당 보고서나 자료들은 대부분 대외비 또는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사회내에 불필요한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논쟁과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당국 입장에서 북한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경로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과 전략을 준비해왔다.

북한경제의 예측정보는 중장기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제 예측한 바와 같이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느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컨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망보고서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단계적 경협전략이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소요나 경제적 혼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 4. 북한 경제정보체계 사례분석 -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11월)

##### 가. 화폐개혁 관련 정보 수집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발표된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sup>32)</sup> 첫째, 구권과 신권

31) 가장 복잡적이고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보가 예측정보이다. 예측정보는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세분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예측 또는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측정보는 정교한 분석의 틀, 가설설정 및 경험적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다.



의 교환비율은 1:100으로 정하였다. 둘째, 교환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제한하였다. 셋째, 교환한도는 최초보도에서는 세대당 10만원(신권 1천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씩 추가교환을 인정하고, 세대단위별 화폐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들이 기존에 저금한 몫은 10:1로 교환하였다. 이는 개인들의 저금 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자율은 연리 3.6~4.5%로 이전과 동일하다. 다섯째, 신권의 종류는 △지폐의 경우 5천원, 2천원, 1천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주화의 경우 1원, 50전, 10전, 5전, 1전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섯째, 발표된 화폐 교환기간에 바꾸지 못한 돈과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있는 돈은 모두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과거 4차례의 화폐개혁 당시에는 당일 『로동신문』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2월 4일자 『조선신보』를 통해 화폐개혁 사실을 공개하였다.<sup>33)</sup> 그러나 북한 화폐개혁 조치를 최초로 보도한 것은 북한의 공식매체도, 한국의 정보 당국도, 연합뉴스나 주요 일간지와 같은 기존 주요 언론매체도 아닌 Daily NK와 NK지식인연대였다. 특히, Daily NK의 경우 화폐개혁이 단행된 당일인 2009년 11월 30일 오후 5시경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화폐 교환을 실시했으며, 평양 거주자는 오전 11시부터 교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폐개혁 조치에 대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화폐개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를 낮춰 위안화나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sup>34)</sup>

2009년 북한 화폐개혁의 경우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수집이 있어 가장

32) 『Daily NK』, 2009년 12월 3일자; 『조선신보』 12월 4일자 참조.

33) 『조선신보』는 12월 4일자에서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성현 책임부원(조선중앙은행)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관련 내각결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일 평양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관리가 이날 북한주재 외교 사절단에게 11월 30일부터 구화폐 사용을 정지하고 신화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통보했다고 보도하였다.

34)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9000&num=78884>.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특히, Daily NK, 열린북한방송, NK 지식인연대 등과 같이 새터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북 전문매체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주민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화폐개혁에 관한 정보를 한국 및 국제사회에 전달하였다. 이들은 북한내 자신들의 인적정보원들이 갖고 있는 중국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생중계 하듯이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를 외부에 전달한 것이다. 그동안 대북 전문매체들은 자신들의 정보원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에 있어 기존의 주요 언론매체나 연구기관은 물론 정보 당국보다는 훨씬 뛰어난 정보수집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sup>35)</sup>

북한의 공개출처정보에 의한 화폐개혁 조치의 확인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12월 4일자 『조선신보』를 통해서였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조치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기존의 북한내 언론매체가 아닌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를 활용해서 외부에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공개출처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Daily NK 등의 최초 보도가 거의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북한 화폐개혁 조치에 따른 주민생활들의 생필품과 식량 부족현상 심화, 시장 폐쇄조치, 환율 급등 등의 북한내 경제적 혼란에 대한 추가정보 수집에서도 Daily NK, 열린북한방송, 좋은벗들 등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대북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경우 12월 2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화폐개혁으로 환율이 1달러에 6천 원까지 폭등했으나, 새로 발행되는 화폐를 기준으로 한 환율과 물품의 국정 가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그 이상을 주고도 환전하기 힘든 상황”이며, “화폐개혁으로

35) Daily NK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 등에 상주하는 특파원들이 사업차 중국에 드나드는 북한의 무역 거래상들과 주기적으로 통화하며 북한 내부 동향을 취재한다는 것이다. 특파원들은 거래상들에게 중국의 휴대전화를 사서 건네준 뒤 통화요금은 물론 사례비를 지급한다. 양측은 북한 내 전파감시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각각 서로가 소지한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약속한 시간에만 통화를 하고 그외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꺼놓는다는 것이다. 접경지역에서 먼 평양의 내부소식통들은 기지국을 통한 중국 휴대전화 대신 위성을 통한 휴대전화로 정보를 제공한다. 북·중 접경지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Daily NK의 한 기자는 2일 “북한의 무역 거래상들은 사업상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당국의 눈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중국의 특정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뒤 주기적으로 통화를 한다. Daily NK에 따르면 화폐개혁 기사는 4개 지역의 다수 북한 내부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인해 북한 현지의 모든 시장과 상점의 거래가 일체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Daily NK도 같은 날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에 따른 주민 동요가 확산되자 신권 교환 조건을 연이어 바꿨다고 전했다.<sup>36)</sup>

이와 같이 북한 화폐개혁 조치 이후의 내부 상황과 후속조치 등에 있어 서도 북한의 공개출처정보로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인간정보에 의한 정보수집이 계속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공식매체를 통해 화폐개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내 혼란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다만, 대북 전문매체들은 자신들의 정보소식통과 단동지역의 대북 무역상들을 통해 북한내 혼란상황과 관련 후속조치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발표 활동을 계속하였다.

북한 화폐개혁 당시 인간정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북한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북한경제정보 수집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이러한 정보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북한정보수집체계를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후 후속보도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 간의 과도한 속보경쟁의 촉발로 인한 오보, 과도한 이념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 등과 같은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정보를 활용한 방식은 가장 강력한 정보수집 수단의 하나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나. 화폐개혁 관련 정보 분석

『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화폐개혁이 사실로 확인된 이후 관련 정보 분석은 정부 당국, 연구기관, 언론기관, 대북 관련단체 및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정부 내에서의 정보분석은 통일부와

36) Daily NK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 처음 주민들한테 통보한 교환 한도는 가구당 10만원이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도를 15만원으로 5만원 올렸다는 것이다. 또한 저금소에 저축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20만원까지 추가 교환을 허용했지만, 이 경우에는 1000대 1의 교환비율을 적용했다. 구권 20만원을 맡겨 봐야 고작 신권 200원이 저축액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민 동요가 가라앉지 않자 북한 당국은 2일 100대 1로 교환해주는 가구당 한도액을 다시 원래대로 1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1000대 1 저금소 저축을 조건으로 바꿔주던 추가 교환 한도를 2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물론 경제부처 등에서도 진행되었다. 북한 화폐개혁에 따른 파급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는지,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하여 경제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의 정보판단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북한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분석은 관련 분석논문의 게재 및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통일연구원이 「경제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화폐개혁, 배경과 파급효과」(임강택, Online Series, 2009. 12.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시사점」(윤덕룡, 오늘의 세계경제, 2009. 12. 7), KDI가 「북한 화폐교환 및 액면단위 변경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고일동, 『북한경제리뷰』, 2009. 12월호)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화폐개혁의 배경은 첫째, 가중되는 인플레이 압력 및 원화의 구매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내부 경제사정이 이번 화폐개혁의 주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즉, 늘어난 화폐량과 상품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원화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시장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는데, 이번에 북한 화폐가치를 100배 상승시킨 것은 원화의 구매력 상승과 시장물가 하락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부의 재정능력의 약화이다. 북한은 국영상점 및 기업소의 생산능력 상실로 재정부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시장매대 등에 대한 이용료 부과, 부동산 사용에 대한 비용 부과 등 사실상의 세금과 같은 다양한 수익처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왔다. 화폐증발을 통한 재정조달은 높은 인플레이 압력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자금을 공식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다.

셋째, 시장의 확산 및 일부 부유계층의 등장에 따른 통제 필요성이다. 북한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거나 시장의 개장시간을

통제하는 등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주민들, 특히 시장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벌어들인 계층들이 정부의 통제에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남한의 지원 중단, 대외적인 압박 강화와 김정일의 건강이상 등으로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통제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는 지적이다.

넷째,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확대이다. 7·1조치 이전까지 달러당 2.16원 수준이던 환율은 150원대로 뛰었지만,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3000원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이와 같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왜곡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외환 암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이번 화폐개혁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 초부터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단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경제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가중되는 인플레이 압력, 재정능력의 한계,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을 방치하고서는 자신들의 경제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충격적인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력한 수단인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는 화폐개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북한의 당 조직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성 등을 통한 주민 장악 및 통제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 지도부와 당국은 화폐개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sup>37)</sup> 경제부문에서도 북한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심화, 정부의 시장통제 강화로 인한 암시장 거래 확대, 북한원화의 신뢰부족에 따른 외환보유 확대 및 북한원화 가치 추가 하락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37) 이후 화폐개혁을 주도했던 박남기의 숙청 등으로 이러한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다. 화폐개혁 관련 정보 활용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나 세미나 자료는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어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상 현용정보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화폐개혁에 대한 전망은 예측정보로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에도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당시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분석, 평가를 주도한 대부분의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은 관련 부처의 정책자문이나 별도의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책수립과 대응과제 마련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나 국정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부 내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기반 도출에 활용된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실제 대북 관련 업무 및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의 분석결과는 정부 전체의 대북 정책방향 및 과제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각각 업무보고를 통해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 나아가 국내적 합의기반 도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5. 북한경제정보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북한경제정보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 지속에 따른 탈북자의 증가,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 방문인의 급증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정보에 의한 북한경제정보의 양과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공개출처정보 역시 과거에 비해 북한의 공식출판물이나 매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관련 정보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관련 전문기관 등이 발표하는 북한경제 관련 통계자료

나 분석보고서 등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인공위성의 영상자료나 도·감청에 의한 통신정보자료 등의 기술정보차원의 정보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속성과 신뢰성, 다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우 강력한 통제체제로 인해 외부에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내부 정보의 유출도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내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는 실제 사건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정부의 효과적인 대북 정책수립과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에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경제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수집과 전달의 신속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경제정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간정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성이나 이념적 성향 등에 따라 정보수집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공개출처정보의 경우에도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선전 차원에서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전문연구기관의 자료도 대부분 제한된 정보를 갖고 만들어진 2차 해석자료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 확인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셋째, 북한경제관련 정보의 다양성문제이다. 북한경제정보가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시경제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들어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일부 지방단위나 경제현상의 미시적 정보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경제정보의 분석단계도 과거에 비해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보독점 현상이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내, 특히 정보기관 내에서의 정보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확인이 어렵다. 게다가 정부부처내에도 효율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와 국정원 간에는 초보적인 정보협조체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다지 효율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관련 부처와 안보관련 부처,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정부와 민간단체(기업, NGO 등) 등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협조체계의 부재는 북한경제정보의 활용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북한경제정보는 정부의 대북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체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연구기관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 축적 차원에서 정보의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북한 경제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경우 순환식 근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 수집, 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정보수집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둘째, 북한경제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이다. 이는 하나는 정부내 공유체계이다. 통일부와 국정원 간의 협조는 물론, 국방부·외교부 등의 안보부처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의 경제관련 부처 등을 망라하는 상시적 경제정보 공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민관 정보공유체계이다. 정부의 정보 독점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즉, 정부는 대북 경협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경협업체나 지원단체 등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수집·확인된 정보를 정보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경제정보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수집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일부 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물론 정보의 특성상 당장 공개는 어렵다고 해도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대북 경제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정보의 정확성, 파급효과, 남북관계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공개 △일부 공개 △일정 시점 경과후 공개 △비공개 등으로 정보를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정보 당국이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관 공동으로 북한경제정보를 취급, 판단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국회 정보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북한경제정보에 대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보기관들은 양자차원에서 대북 정보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초보적 수준이며, 북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 경제행위를 차단하고, 개혁·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제9장

###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조사



# 제9장

##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조사

### 1. 문제제기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활용하는가의 문제는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사실상 누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달라지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누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 사회·문화를 보는 관점 및 시각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기본 입장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생산된 정보의 신뢰도 및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지어진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느냐에 따라 신뢰도 및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은 무엇보다도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 및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수요자 내지 정보수집자를 비롯하여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다루는 행위자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 하여 ‘서로 다른 실상’을 주장하며 이를 ‘사실화’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은 첩보수준의 정보를 진위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남발하는 활용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첩보 수준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남발은 일반 대중을 포함한 정보수요자들로 하여금 북한주민의 생활 양상 및 환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밝혀 논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의 확립을 지향한다.

## 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의의와 필요성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의 궁극적인 의의와 필요성은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찾아지며,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 (1) 북한 사회·문화 실태 파악에 있어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보다도 북한 사회·문화 실태 파악에 있어 정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문화 실태에 관한 정보입수가 쉽지 않다. 또한 그나마 수집된 정보가 이념적으로 여과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생산, 활용되는 경우에는 대북정책 및 대북사업에 있어 시행착오를 거듭케 하는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문화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편견을 가진 왜곡된 시각 내지 관점으로 북한의 사회·문화를 인식, 이해하려 한다면 북한 사회·문화 실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사회·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 및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되고 체제존속을 위한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정치·사상 우선이 아닌 돈과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에 대한 사회통제는 오히려 완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의 사회·문화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다. 북한 사회·문화에 있어 변화의 주요 내용 및 동향은 대북정책 및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의 주요 내용 및 동향은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로써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남북한 내적 통합을 위한 선행과제

통일은 남과 북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통일은 남과 북의 물리적 통합에 이어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완성에 이르게 된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남과 북의 ‘내적 통합’, ‘사람의 통합’이라고 말한다.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서로의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 이해가 필수적인 선행과제이다. 서로의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가 없이 만난다면 남과 북의 사람들은 잦은 오해로 갈등을 겪으며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고 중국에는 또 다른 분단을 야기할 것이다. 남북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닫고 굳게 장벽을 쌓는 마음의 분단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은 쉽게 허물 수 없으며 물리적 통합을 강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보다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음의 장벽은 그 실체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법·제도 구현은 자칫 그 의의와 중요성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정치·이념 및 군사적으로 대립해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에 대해 남한 사회·문화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북한의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인식,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가 찾아진다.

## (3)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

남과 북은 지난 60년 이상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이질화를 겪어왔다. 서로 다른 이념·체제와 법·제도 아래 남과 북의 사람들은 가치관을 비롯해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상이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집단주의적 사고와

언어의 이질화는 남과 북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지향한 상호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를 위한 선행과제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제도화·활성화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간 공통적 사회·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의존관계를 수립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우열관계가 아닌 대등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으로 하여금 서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문화적 이질화로 인해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체제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비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특별선언) 이래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과정을 거치고 1990년대를 통해 점차 활성화 되어 온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한 차례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 및 추세로 진행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한간 직접 교류가 증대되었으며 교류 분야 및 내용이 다양해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사회·문화 교류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북측이 선별적으로 호응하며 합의사항 외의 비본질적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이념에 치우친 소극적 태도와 무리한 요구를 앞세우는 협상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측에서도 일단 교류 행사를 성사시키는 데에만 집착함으로써 매번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태를 보이고는 하였다. 우리측의 시행착오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한 데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한반도 평화 실현은 남과 북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라고 할 때, 이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수 선행조건은 바람직한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의 확립이다.

#### (4)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

북한의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는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인구학적 특성,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의식변화, 남한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유입 및 확산, 사회 여론 형성 및 추이, 사회 통제 실태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분야의 대북정책 수립 전반에 걸쳐 기초자료로서의 의의 및 활용도가 낮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심화, 확산되고 있는 북한 사회·문화의 변화 양상 및 추세는 전반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 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정보는 대상국 내부의 사회 구조, 문화와 제도, 사회변동, 사회집단들의 성격과 활동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sup>38)</sup> 이를 준거로 하면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북한의 인구, 자연·지리 환경, 사회 구조 및 제도, 문화·예술, 언론·출판, 관광·체육, 교육·종교, 보건·의료 등의 분야별 실태와 동향, 주민생활 및 사회통제 실태와 동향, 주민의식(가치

38)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9), p. 15.



관) 등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시계열적 특성에 따른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등의 관점에서 구분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상황 내지 상태 변화가 적거나 고정적이며 북한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구(주민의 수), 자연·지리 환경, 사회·문화구조 및 제도 등은 기본정보에 속한다. 둘째, 최근 북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발생한 일들과 현재 진행 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문화 분야별 실태와 동향, 주민생활 및 사회통제 실태와 동향 등은 현용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에게 제공된 첩보자료의 의미, 평가, 장래 발생할 일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판단정보라고 한다면<sup>39)</sup> 위에서 열거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 내용들 모두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특별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문제의 분석, 평가 및 예측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되는 판단정보 보고서는 북한 사회·문화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실태 및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체계성 및 정확성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주요 분야

설문조사<sup>40)</sup> 결과를 통해 보면 응답자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북한정보들 가운데 사회·문화와 관련된 정보의 비중은 37.2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정보 수요자 내지 수집자들 사이에 북한 사회·문화정보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낮지 않음을 말해준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들 가운데 관심을 갖거나 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한 복수 응답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화 실태’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의식변화’(31.6%), ‘사회질서 및 통제실태’(10.5%), ‘종교실태’·‘남한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 문화 유입·확산실태’·‘교육실태’·‘기타’(5.3%) 등의 순으로

39) 위의 책, p. 17.

40) 이 연구를 위해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 언론기관, 학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답하였다. 이와 같은 관심도를 감안하면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주요 분야들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비공식경제 활동 실태 및 동향, 주민생활·의식 실태 및 동향, 사회질서·사회통제 실태 및 동향, 예술분야 실태 및 동향 등이 그것이다.

### 가. 비공식경제 활동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심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점차 활성화된 경제에서의 비공식부문의 실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소상품 생산양식과 소자본에 의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외형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식당 영업, 짐꾼일, 생일잔치 등에 샅일이나 품팔이 임노동 제공, 고리 사채업자 등이 그것이다. 둘째, 경제운용기제로서의 상품시장이 북한사회에서 일상화되었다. 열흘에 한 번 열리던 농민시장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상설시장화 되어갔으며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7·1조치)를 계기로 하여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이어 2003년 3월에는 시장이 공식화되었는바, 장마당이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되기에 이른다. 셋째, 텃밭과 땀기밭, 소상품 생산양식이 장려되어 사적 이윤추구가 성행하였으며 텃밭, 땀기밭 등에서 생산한 식량과 식료품 등에 대한 사적거래도 급증하였다.

위와 같은 비공식부문의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 내지 인식에 있어 변화가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사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 활동을 해나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장사 등 개인 상행위를 통해 자본주의를 체득, 수용하고 있는 실태는 북한 사회 및 체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라 하겠다.

### 나. 주민생활·의식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1990년대 이래 식량난 등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의

생활과 의식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변화가 보다 가속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북한의 주민생활 및 의식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은 2002년의 ‘7·1조치’이다. 7·1조치와 시장의 공식화가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의 대내·외적 상황 인식 내지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가치의식의 변화가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7·1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sup>41)</sup> 자율성 및 능동성 확대 강화, 장사의 활성화, 생활고 심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일탈행위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7·1조치 이후 보다 더 가속화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sup>42)</sup> 자본주의 체득과 수용, 지도자(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 심화, 남한 사회·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남한 문화 확산, 대외의식 변화, 개인주의·물질주의 심화, 개방에 대한 욕구 및 기대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주민생활·의식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배급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의료제 등 종래 북한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졌던 사회주의제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보도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유포되고 있는 북한내 지하종교 및 신앙인들에 관한 정보도 북한주민의 생활·의식 실태를 파악,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 다. 사회질서·사회통제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종래 주민통제의 효율적 기제로 작동해 온 배급제가 무너지고 생계문제 해결을 단위가족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보다 많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3)</sup> 예를 들면 직장 및 근로단체의 학습, 생활총화 등에 불참하는 조직이탈, 노동자의 직장이탈과 무단결근, 간부들의 직권 남용

41)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78~93 참조.

42) 위의 책, pp. 93~136 참조.

43) 위의 책, pp. 90~91 참조.

과 뇌물수수, 허위진단서 발급과 개인의료영업 등의 불법 의료행위, 주택의 암거래, 국경 밀무역, 농민들의 식량전용과 국가수매 기피, 절도, 소매치기, 강도, 폭행, 자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해이 및 사회질서의 혼란과 관련해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인민반, 동사무소, 근로단체 조직, 당조직 등 기존의 조직보다도 국가보위부 지하망을 통한 감시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시 및 단속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일탈 및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통제 이완 현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인한 처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돈이나 물품 등의 뇌물로 무마되며 특히 식량문제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묵인되는 편이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 사이에 일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 통제가 이완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은 곧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위와 같은 북한의 사회질서 혼란 및 사회 통제 실상과 관련한 정보는 북한 사회실태 파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 라. 문화·예술 분야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1994년 김일성 사후 이른바 김정일 시대가 시작된 이래 북한이 겪어 온 크고 작은 정치·사회적 변화는 문예부문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문화·예술 동향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테면 선군정치시대를 반영한 문학이며 김정일의 선군영도업적을 반영한 영도자의 문학<sup>44)</sup>이라고 하는 ‘선군혁명문학’ 등 새로운 개념의 문학이 등장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합창조곡’ 등 새로운 예술장르가 등장하였다. 특히 2002년

44) 선군혁명문학은 새로운 사조의 반영이 아니라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며, 김정일이 사상과 이념, 영도업적에 의하여 그 특징과 성격이 규정지어지고 명명되는 독창적인 새로운 문학이라고 한다. 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1. 1), p. 5.

부터 시작된 ‘아리랑’ 공연은 외국인의 관람을 전제로 한 ‘대외공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북한 문예 이론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일성 사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이후 창작, 발표되고 있는 문예작품의 내용면에서는 감지될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적 양상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작품의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 서정성 및 오락성·대중성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양상이 북한 문예작품에서의 사상성·혁명성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동안 변함없이 반복·재생되어 온 사상성·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작품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거부감으로 인해 사상교양 수단으로서의 문예작품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방법론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래와 다름없이 사상성·혁명성을 작품의 핵으로 하면서 다만 작품의 수용자인 주민들에게 사상성·혁명성을 전달, 주입시키는 방법을 간접적·우회적인 것으로 바꾸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예술은 북한주민의 사회화의 주요 매체로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는 당의 영도이다. 문예창작에 있어 당의 영도란 작가, 예술인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북한의 문예작품은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임을 뜻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문예작품은 당 정책을 지지, 홍보하고 당 정책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실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북한의 문예작품들 가운데 특히 소설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적’, 또는 ‘말씀’, 그리고 다양한 정치·이념 및 경제·사회 구호 내지 운동 등을 통해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주민들의 가치관 및 생활문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 3.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 가. 수집단계

일반적으로 정보수집 경로 및 방법은 인간정보 수집(HUMINT), 기술정보 수집(TECHINT), 공개출처정보 수집(OSINT)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정보출처에 따라 인간정보 수집과 기술정보 수집으로 크게 나누고 인간정보는 공개출처와 비밀출처로 구분하며 기술정보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로 구분하기도 한다.<sup>45)</sup>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인간정보 수집, 기술정보 수집, 공개출처정보 수집 등 3가지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sup>46)</sup>

##### (1) 공개출처정보 수집 실태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공개출처정보 수집이다. 공개출처정보 수집은 주요 언론매체인 라디오·텔레비전방송과 신문·잡지, 국가 정보기관 및 민간기관의 보고서, 방북자, 학술세미나·토론회 발표 자료, 관련 일반서적 및 학술서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상용정보망 등 디지털 매체가 공개출처정보 수집에 보다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자들이 공개출처정보 수집을 선호하는 것은 비밀출처정보와는 달리 공개출처정보 수집은 위험부담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출처정보 수집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수집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며 수집자들이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수집방법으로도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보량도 많고 비용부담도 적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선호하는 매체이다.

45)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89.

46) 북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인간정보 수집과 공개출처정보 수집이다.

## (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수집

북한 사회·문화 정보수집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공개출처 정보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언론 매체이다. 특히 신문과 방송은 북한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실태와 동향을 개략적으로 볼 수 있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쓰임 있는 정보 출처이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북한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언론매체와 영화, 소설 등의 예술작품, 국가정보기관 및 민간기관의 관련 자료, 국내 입국 탈북자, 방북자, 북한 사회·문화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는 북한과 중국, 일본 등지에 있는 유·무급 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북한 사회·문화 실상 및 주요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주요 공개출처로는 연합뉴스-북한뉴스, NK조선일보-관광/사회/문화/예술, 중앙일보 북한네트-사회/문화,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SBS-북한뉴스, KBS-‘남북의 창’/‘아름다운 통일’, MBC-‘통일전망대’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Daily NK, 잡지 ‘민족21’과 ‘임진강’, 열린북한방송 등도 공개출처정보수집에 있어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다.

2004년 12월 창간된 Daily NK<sup>47)</sup>는 “세계 최초의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으로 사실보도를 지향하며 정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aily NK는 북한의 당·군·정, 주민동향 등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도 보도한다. 이 기관은 중국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북한 내부의 증언과 영상을 제공하며 일본과 미국에도 특파원과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족21’<sup>48)</sup>은 홈페이지의 ‘여기는 평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월간잡지로 발행되는 ‘민족21’을 통해서도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진강’<sup>49)</sup>은 북한 내부인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소식지이다. 2007년 11월 창간된 이 잡지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면 외부

47) <<http://www.dailynk.com/korean>>.

48) <<http://www.minjog21.com>>.

49) <<http://www.asiapress.org/korea>>.



에서 작성 원고를 받아 제작, 발간된다. ‘임진강’은 2008년에 일본어판과 영어판도 창간하였다. 2005년 12월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활동을 시작한 열린북한방송<sup>50)</sup>은 북한주민들에게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언어, 정치, 예술 등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문화방송이며,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공동체방송임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북라디오 방송, 시민교육 및 여론 형성 사업 등이 있으며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을 발행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2009년 창간한 열린북한통신은 주간으로 발행되며 내용은 북한의 최신기사,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소식, 북한바로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내부 통신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양강도 소식통”, “고위급 소식통” 등으로 인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 (나) 국가 정보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기관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이 갖는 특별한 권한으로 거의 제약 없이 공개출처정보와 비밀출처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한다. 이들 국가기관이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 및 방법은 다양하다. 통일부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인 정세분석국에서 북한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노동신문 등의 언론매체와 인터넷 선전 매체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북한 내부 문건 및 주요 간행물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국내·외 언론매체와 관련 연구기관·단체의 보고서, 민간 방북자 및 방북결과보고서, 관련 연구를 하는 내·외국인 학자, 대북사업을 하는 내·외국인, 국내 입국 탈북자 심문 결과 등을 통해서도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한다. 이 외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들도 중요한 정보출처이다. 통일부에서는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 관련 담당부서이다. 이 부서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남북한 경제력 및 사

50) <<http://www.nkradio.org>>.



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평가,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정보원도 통일부와 거의 같은 정보수집 경로 및 방법으로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국외지역에 있는 첩보원과 자발적 협조자 등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관련 비공개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술정보도 수집하는 정보기관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이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기 전 심사단계에서 북한 사회·문화 실태 및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자들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위와 같은 일련의 정보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쳐 공개하는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기관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기관의 관련 보고서 및 발간물, 또는 기관과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수집자들은 특히 이들 기관이 수집하는 비공개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신뢰 수준도 높은 편이다.

#### (다) 학계를 통한 정보수집

대학 및 민간연구소, 국책 연구기관 등 학계의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은 공개출처정보가 대부분이다. 학계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언론매체, 시민단체, 그리고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단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개출처정보의 대조 확인 및 보완을 위해 국내·외 탈북자, 또는 방북자를 만나거나 중국 현장조사를 통해 비공개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특히 국내 입국 탈북자 설문·면담조사를 통한 정보수집이 가장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북한 사회·문화정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연구기관·단체로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비롯하여 대학부설연구소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소,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

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있으며 민간연구소인 평화문제연구소,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단체들 가운데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에 있어 다른 연구기관·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은 통일연구원이다. 1990년 8월 민족통일연구원으로 설립하여 1999년 기관 명칭을 바꾼 통일연구원<sup>51)</sup>은 통일문제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정책개발기관이며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정보센터로서 북한·통일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북한·통일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북한연구센터와 통일학술정보센터가 주무부서라 하겠다. 북한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이론적 기초연구와 함께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하며 생산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부서에서는 특히 북한체제 및 사회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사회·문화 실태 및 변화 동향과 관련한 정보수집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구자들의 정보수집 활동은 다양한 공개출처 외에도 국내·외 연구기관·단체의 관련 전문가, 또는 개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북한방문, 중국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정보수집에도 적극적이다. 통일학술정보센터에서는 통일 및 북한 관련 학술정보를 대내·외 전문가 및 연구자들에게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연구원의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연구원 발간물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인 평화문제연구소<sup>52)</sup>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 및 이론 개발, 통일·북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등의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월간으로 발행하는 잡지 ‘통일한국’은 북한 사회·문화정보 제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공개출처들 가운데 하나이다. 동북아 미시사회연구소는 2009년 설립된 소규모 민간연구소이기는 하나 현장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새로운 ‘변경문화’의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북·중 접경지역은 남·북한 및 중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변경인바, 이

51) <<http://www.kinu.or.kr>>.

52) <<http://www.ipa.re.kr>>.

지역을 통한 다양한 문화접촉의 경험에 주목하여 특히 접경지역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연구소임을 표방하고 있다.

#### (라) 북한 방문 및 북한 방문자를 통한 정보 수집

1988년의 '7·7선언'을 계기로 하여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 완화되고 1990년대를 통해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민간 차원의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은 대부분이 북한 방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주로 미국, 유럽 등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학자, 종교인, 기업인들의 북한방문 소감 내지 증언을 통해서, 또는 이들이 책으로 발간한 '북한 방문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내국인으로서의 북한 방문이 아주 제한적이었으므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북한주민과 만난 사례도 적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내국인의 북한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또는 북한 방문자를 통한 정보수집에 있어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00년에 들어서이다. 2000년 남북정상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내국인의 방북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 사회·문화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생산이 보다 더 활발해진 것이다. 방북자들은 북한당국이 마련한 일정에 따라 안내원과 함께 수동적·제한적인 방문을 하지만 나름대로 시·청각을 한껏 동원하여 북한 사회·문화 실상 및 변화 동향을 파악하며 관련 서적을 구입해 오기도 한다. 북한당국은 선전을 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곳만을 안내하며 일반주민과의 만남이나 대화도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방북을 통한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북사업 내지 대북지원사업,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을 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 (마) 북한 간행물과 영상물을 통한 정보 수집

북한 사회·문화정보는 북한이 발행한 신문, 서적 등의 간행물과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을 통해서도 수집한다. 관련 전문가, 연구자들은 '로

동신문'을 비롯하여 주요 월간 문학·예술잡지, 전문잡지, 다양한 영상물 등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실상과 변화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김일성저작집'과 '김정일선집',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 등을 통해 당·국가의 사회·문화 정책 기조 내지 방향을 파악, 이해한다. 북한 간행물과 영상물은 대북사업 및 대북인도지원사업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출처이다. 북한 간행물 및 영상물은 주로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를 비롯하여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해 볼 수 있다.

(바)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 종교단체를 통한 정보 수집

북한 관련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들 가운데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단체 및 기관은 많지 않다. 북한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다수는 북한 인권, 대북지원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언론기관, 학계 등과 비교하면 북한 사회·문화정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라 하겠다. 이들 가운데 특기할 만한 단체는 NK지식인연대와 좋은벗들이다.

2008년 6월 창립한 NK지식인연대<sup>53)</sup>는 남북의 통일과 북한의 변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탈북지식인들이 모여 발족한 통일학술단체임을 표방하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600여 명 탈북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연구조직인 NK지식인연대는 탈북지식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및 정책 개선에 기여하며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 통일한국의 미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연구,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사업 자문, 북한실상 강의 및 안보 강연을 통한 북한실상 전달 등의 활동이 있다. NK지식인연대는 계간으로 발간하는 잡지 '북한사회'를 통해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3) <<http://www.nkis.kr>>.

좋은 벗들<sup>54)</sup>은 남북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도모,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재외동포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한 민족의 평화통일 달성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좋은 벗들은 국제 난민 구호사업,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을 전개하는 단체로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식량난에 대한 홍보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 조·중 국경지역 현지 활동가 파견 및 조사활동, 북한 식량난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북한사회 바로 알기, 북한주민의 생존권 및 인권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민참여의 통일사업 등을 하고 있다. 좋은 벗들에서는 ‘오늘의 북한소식’을 매주 발행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소식’은 2004년 9월부터 월간 소식지로 발행되었다가 2005년 4월 4일부터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이다. 이 소식지는 북한주민들의 생활모습, 생각, 인권 상황, 국경소식 등 북한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주로 중국 현지조사와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에서 발간한 북한 사회·문화 실상 관련 도서들로는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2001),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2000),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2006) 등이 있다.

종교단체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천주교 주교회의 민화위) 등이 있다. 1989년 창설된 한기총<sup>55)</sup>은 종교단체 고유의 사업·활동 외에 남북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사역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교회재건운동본부, 통일선교정책연구원, 통일선교대학 등 부설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0년 6월 창립된 민추본<sup>56)</sup>은 남북 화합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조계종단의 종령기구이다. 민추본은 남북 불교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 공동사업 및 연대사업 참가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위원회, 연구·조사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84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로 설립되어 1999년

54) <<http://www.goodfriends.or.kr>>.

55) <<http://www.cck.or.kr>>.

56) <<http://www.unikorea.or.kr>>.

이름이 바뀐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sup>57)</sup>는 전국 16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수도단체 및 교회내 단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대북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북한난민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부설기구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에서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한다.

## (2) 인간정보 수집 실태

인간정보 수집은 인간을 첩보수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보활동을 말한다고 할 때,<sup>58)</sup>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에 있어 인간정보 수집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수집자(정보수요자)와 북한 내부 정보원(정보제공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수집자는 직접 정보수집 활동을 하거나 북한 내부 정보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북한 내부 정보원은 정보수집자와 일정한 계약관계를 맺고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인간정보 수집은 주로 비밀출처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활동이다. 정보수집자는 현장조사와 탈북자 및 방북자 설문·면담을 통해서, 또는 북한 내부 정보원, 북한 내부 문건 및 서적 입수 등을 통해서 북한 사회·문화 관련 비밀정보 내지 비공개정보를 수집한다.

### (가)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북한당국이 공개하지 않는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정보수집자는 주로 중국 현지방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합법·불법 왕래가 비교적 잦기 때문에 비공개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방문을 통한 조사를 하게 되는 계기는 국내에서의 공개출처 정보 수집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공개출처 정보의 정확성 내지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대조 확인(cross-checking), 또는 내용 보완을 위해

57) <<http://hwahai.cbck.or.kr>>.

58)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p. 66.

현지조사를 실행하는 것이다.<sup>59)</sup>

비공개정보는 주로 심양, 연길, 단둥, 도문, 훈춘 등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통해 현장 체험과 함께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다. 정보 출처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지역 사회과학원, 또는 대학 부설 학원(연구소)의 전문가, 대북사업 및 선교사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북한당국이 외부 유출을 꺼리는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며 중국 내 탈북자, 또는 ‘방문자’(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 장사하는 사람들, 중·북 ‘사사려행자’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대학 부설 학원(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북한 사회과학원과의 교류가 더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김일성종합대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해외 교류가 보다 가능하기 때문이며 교류는 상호 방문, 공동 연구 및 집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북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정부 관리, 또는 밀무역상, 북한현지인 등으로부터 듣는 정보가 적지 않으며 선교사업 종사자들은 ‘방문자’, 탈북자 등으로부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입수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컬어 ‘조선장사’와 ‘지도원’이라고 불리며 주로 여성들이다. ‘조선장사’는 하루장을 보거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장사하는 중국 조선족과 화교들을 말하며 ‘지도원’은 북한의 외화벌이 일군 여성들을 말한다.<sup>60)</sup> 중·북 ‘사사려행자’는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 국적인을 말한다.

#### (나) ‘방문자’를 통한 정보 수집

북한은 2003년부터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여행증을 발급하여 중국 친척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중국에 오는 북한주민들을 ‘방문자’라고 부른다.<sup>61)</sup> ‘방문자’의 중국 비자 기간은 3개월이며 6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자’들 가운데 훈춘, 연길, 장백 등지를 방문하는

59) ○○○(학계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60) 위의 글.

61) ○○○(대북사업자),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4.22)



사람들은 민생과 관련하여 오는 편이며 특히 단동에는 평양에서 오는 ‘방문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편이라고 한다.

‘방문자’는 탈북자와는 달리 북한정권이나 체제와 관련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특히 50대에서 70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북한에서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62)</sup> 중국현지의 한 대북사업자에 따르면 3~4년 전부터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단기 비자를 받아서 중국으로 오는 ‘방문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가운데 60~70%는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한다.<sup>63)</sup>

중국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과정에서 정보수집자들은 ‘방문자’들로부터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다양하게 입수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인 ‘방문자’를 만나는 것 역시 중국현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공안의 감시, 전화통화 도청, ‘방문자’의 불확실한 신분 등으로 인해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인, 또는 관련 있는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한국 기업인, 대북사업자, 북한 선교사 등과의 인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sup>64)</sup>

비공개정보를 얻어내는 데 있어 정보수집자들은 ‘방문자’와의 관계를 일회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편이다. 또한 정보수집자들은 ‘방문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방문자’와 친구사이가 되면 유도하지 않아도 북한사회와 주민의 생활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정보수집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와 같은 정보수집 활동은 수집분야가 북한 사회·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방문자’들은 북한 사회·문화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치적이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상대방을

62) 위의 면담

63) ○○○(대북사업자),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4.24).

64)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경계하지 않고 부담 없이 화제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정보수집자들에 따르면 ‘방문자’는 일단 정보수집자에 대한 경계심만 없어지면 자신과 이웃들이 사는 모습, 생활의 어려움, 주민의식의 변화 등을 별 부담 없이 말하며, 따라서 정보수집자는 정보 획득을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남사업 일꾼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과 만났을 때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북한의 사회·문화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 (다)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한 정보 수집

북한의 경제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가 2만 여 명에 이르고 북한주민들 사이에 휴대전화 사용자가 점증함에 따라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의 경로 및 방법도 다양해졌으며 보다 과감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한 비공개정보 수집이다. 정보수집자들은 중국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북한주민과의 전화 통화로 식량사정, 사회 통제 실태, 주민생활·의식 변화 양상 및 추세, 외부문화 침투 및 유입 실태, 교육실태 등 북한 내부의 사회·문화 정보를 입수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도 한다. 내부 정보원은 국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단체에서는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sup>65)</sup> 이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 내부 정보원은 청·장년에 이르는 연령대와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졸업까지의 학력,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사회·문화와 관련해서는 기본 동향 조사를 주로 하며 경제시책, 각종 주민 동원 시스템, 시장실태, 의식주 실태, 국가 공급시스템을 통해 공급받는 물자의 현황 등을 수집한다.

65)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한 정보 수집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3방송'(유선방송) 녹취를 통한 비공개정보 수집이다. '3방송'은 북한당국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로 등화관계 대피훈련, 군사훈련 등과 관련된 내용, 또는 당의 방침, 정책 해설, 선전 및 지시 등의 내용 등을 전달하는 방송이다. 내부 정보원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수집자들은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도 확산됨에 따라 내부 정보원 네트워크 형성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내부 정보원을 통한 비공개정보 입수는 실시간 관련 정보 입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라) 북한 내부 문건 및 서적 입수를 통한 정보 수집

최근에는 북한 내부 문건 및 서적 입수를 통한 비공개정보 수집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사상적으로 해이해지고 사회 통제도 이완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북한으로부터의 내부 문건 입수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부에서는 전문적으로 북한의 문건을 생산해 판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sup>66)</sup> 대외비로 발표되는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 및 주요 간행물, 또는 북한 당·정·군 주요 인물들의 비공개 발언을 담은 문건 등은 북한에 잠입시킨 제3자를 통해 전달받거나, 또는 북한 내부 정보원이 입수하여 제3자를 통해 정보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국내 입국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통한 정보 수집

1990년대 이래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을 통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이 많아졌으며 특히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들은 북한 사회·문화 실상을 파악,

66) 정창현, "민간 대북정보의 생산과 해석: 화폐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제6차 NGO 포럼 발제문, 2010. 4. 13.)

이해하는 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활용하며 현장조사, 방북자, 북한원전 등 다른 경로 및 방법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대조 확인하는 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활용한다. 또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경험적 방법에 의한 실증연구가 불가능한 북한주민의 의식 및 가치관 등의 연구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국가 정보기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면접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다른 기관에 앞서 집중적으로 위장 탈북여부를 조사 하고 이 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실상 및 변화 동향을 파악한다.

### (3) 기술정보 수집 현황

기술정보수집<sup>67)</sup>이란 과학 기술을 수집 수단으로 활용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하며 영상정보수집, 신호정보수집, 징후계측정보수집 등으로 세분된다.

#### (가) 영상정보 현황

영상정보란 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촬영장비를 통해 지상의 물체를 촬영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여 생산된 정보이며 이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영상정보수집이라 한다. 오늘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매체로는 주로 항공기와 인공위성이 활용되며 일부 영상정보는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수집된다.

#### (나) 신호정보 현황

신호정보란 상대국의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통신, 전자, 레이더 등 신호를 통해 유통되는 첩보를 비밀리에 수집하여 생산된 정보이며 이와 관련된 수집활동 과정 전반을 신호정보수집이라 한다. 신호정보는 수집 대상이 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통신정보수집, 전자정보수집, 레이더정보수집 등으로 구분된다. 수집수단에 따라서는 인공위성 수집활동, 항공기 수집활동, 선박 수집활동, 지상기지 수집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67) '기술정보수집'에 관해서는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pp. 75~81 참조.

북한 사회·문화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기술정보수집이 활성화·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영상정보와 신호 정보 수집활동 및 정보생산이 가능하나 이러한 정보기관을 제외하고는 기술정보 수집을 하는 행위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정보수집의 필요성이 덜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북한 방송 수신을 통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은 국정원, 통일원 등의 국가 정보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정보수집자들의 기술정보 수집은 거의가 국가 정보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일반 정보수집자들 가운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에 잠입시킨 정보원에 의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한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수집한 사례들은 있다.

#### 나. 분석단계

정보의 분석단계는 수집된 첩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련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sup>68)</sup> 정보 분석은 일반적인 학문과 달라 진실 그 자체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분석을 통해 사실이나 진실을 얻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좋은 정보란 적시성(timeliness)이 있어야 한다.<sup>69)</sup> 정보 분석은 항상 시간적 제약을 전제로 하며, 정보소비자의 소요 요청에 잘 부합되는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잘 생산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소비자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 분석의 의미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정보소비자의 요구에 부응은 하되 분석관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 분석은 분류,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의 5단계를 거친다. 분류는 수집된 첩보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단계이고, 평가는 수집된 첩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며, 분석은 수집된 첩보에 의미를 부여

68)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15.

69) 위의 책, p. 116.

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련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단계이다. 종합은 분석된 첩보들을 통합하는 단계이며, 해석은 미래에 대해 예측, 판단하는 해석단계이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분석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위의 5단계의 과정을 따른다.

### (1) 분류단계의 실태

#### (가) 개념적 분류로서의 분석의 대상

분류단계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점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보 분석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개된 사실(known facts)이다. 공개된 사실이란 공개출처를 통해 얻어진 첩보 또는 시각적으로 확실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첩보이다. 전통적으로 정보기관은 공개출처 첩보보다는 비밀리에 수집된 첩보의 분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혁명과 민주화, 각 국가기관의 투명성, 그리고 민간단체의 연구수집 및 분석 능력의 강화 등으로 인해 공개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정보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국가기관, 학술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개별 전문가들에게 가장 의존도가 높은 분석 대상은 공개된 사실이다. 과거에는 공개사실을 주로 문헌자료에 의존하였다. 문헌자료라 함은 주로 정부기관의 보고서, 신문, 논문, 그리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북한자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의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공개사실과 북한통신방송 매체에서 수집된 공개사실이 주요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문헌자료 형태의 공개사실의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사업을 주로 하는 한 민간단체의 실무자의 경우 북한자료센터에서 『조선화보집』, 『조선예술』, 『조선문학』 등의 잡지를 자주 열람하는데, 북한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정부의 보고서나 학자들의 논문, 언론의 보도보다 훨씬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sup>70)</sup>

두 번째 분석대상은 비밀(secrets)이다. 비밀이라 함은 통상 외국정보

가 외부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일련의 현안 문제, 상황, 그리고 정책과정을 의미한다.<sup>71)</sup> 북한정보체계에서 수집은 물론이고 분석 단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석대상은 아마도 비밀 첩보일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서 나오는 첩보는 사실상 거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밀 분석이 확인상의 제약과 자체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분석대상으로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폐쇄된 국가의 경우 수집된 첩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와 모호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에 임해야 한다.

대체로 북한의 비밀은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 나온 첩보로 인식하기 쉽다. 비밀 대상으로서 사회문화 분야의 첩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최근 사회문화 분야의 첩보 중 하나가 북한의 비밀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비밀은 아마도 후계자에 관한 것일 것이다.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첩보는 일찍부터 유통되고 있었다.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9년부터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북한 내부에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노동신문의 ‘정론’에 등장하는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후계자와 관련된 ‘상징’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북한 최고의 작곡가라는 보천보전자악단의 리종오가 작사와 작곡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노래 ‘발걸음’은 3절로 이뤄져 있는데 “척척 척척척 발걸음 / 우리 김대장 발걸음” 식으로 김정은을 지칭하는 ‘김대장’의 표현이 매 절에 들어가 있다.<sup>72)</sup> 또한 『로동신문』(2009년 12월 30일) 정론 ‘승리의 전선에서 축배를 들자 - 백두영장을 따라 걸어온 2009년의 위대한 강행군을 추억하며’에서 “백두산에서 선열들이 물려준 피어린 행전을 연속공격, 연속비약의 해 2010년의 숫눈길에 적시며 척척척 발걸음 맞추라”라는 대목이 김정은이 곧 후계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70)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71)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19.

72) “北, (노동신문) 정론에서 김정은 후계자 암시,” 『통일뉴스』, 2009년 12월 30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67#>)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나는 비밀과 공개사실은 비록 각각 전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공개사실이 비밀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 분류가 아닌 상호연계적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정치 분야의 첩보만이 비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의 첩보도 얼마든지 비밀의 열쇠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역정보(disinformation)도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역정보란 적대국이 상대국 분석관들을 기만하고 오판케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왜곡된 정보를 지칭한다.<sup>73)</sup> 역정보에 대한 분석 오류는 한 국가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첩보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 평가의 정확성과 엄정성을 통해 역정보의 가능성을 철저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북한정보체계에서 역정보는 대개 군사 분야에서 주요 분석대상인 경우가 많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역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근과 아사자의 규모에 관한 첩보이다.

1995년 북한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국제사회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였다. 이 요청이 있을 후 북한당국은 유엔기구와 대북지원NGO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기근과 아사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조사팀은 평북 박천군의 한 병원에서 1995년 10월부터 1997년 3월 사이에 소아영양실조가 3배 증가하였고 감염성 설사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7년 7월 월드비전 의료팀의 방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양, 원산, 사리원, 해주, 평산 등 5개 지역의 보육원과 어린이센터에서 2세 이하의 유아 547명 가운데 85%가 영양실조 상태이고 29%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98%는 발육저하 상태에 있었다<sup>74)</sup>. 세계식량기구(WFP)는 당시 아사상태에 있는 북한 인구를 기아에 직면한 어린이

73) Berkowitz and Goodman, *Strategic intellig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 96,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20에서 재인용.

74)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1호 (1998), pp. 143~144.



260만명을 포함한 470만명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며<sup>75)</sup>, WFP의 버티니(C. Bertini) 사무국장은 한 미국 신문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의 손마디 뼈가 드러났으며 영양부족으로 머리색깔이 붉은 색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76)</sup>

이와 같은 북한의 기근 실태를 확인한 유엔기구와 대북지원 NGO들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1995년~2005년 동안에 매년 백만톤 이상의 대북식량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유엔기구나 NGO에 제공한 기근과 아사에 대한 정보들은 식량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왜곡된 정보, 즉 역정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양공급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나 대상 등을 선별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스테판 헤거드와 마커스 놀랜드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수용한 시설의 잦은 방문을 기획한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정과 더 많은 원조를 끌어내려 한 냉소적인 연극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77)</sup>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외부인들이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홍수피해 현장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기근 동안 급격히 상승한 식량가격에 대한 자료, 대규모 인구 이동과 식량을 구하러 다닌 증거, 질 낮은 식품 섭취와 같은 식단의 증거, 실제 영양 상태 및 건강 상태 혹은 사망률에 대한 조사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북한당국이 철저히 통제하였고, 북한 정부는 처음부터 홍수피해자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계속된 기간에 북한의 대외무역을 보면 교역을 통한 식량수입량은 줄이고 그 덕분에 절약된 외화로 다른 부문의 수입을 늘렸다는 점 또한 1990년대 중반 국제사회에 북한당국이 제공한 기근 실태에 대한 정보는 ‘역정보’로 의심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마지막 분석대상으로 미스터리(mysteries)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스

75) 『연합뉴스』, 1997년 3월 21일.

76) *USA Today*, July 25, 1997.

77) 스테판 헤거드·마커스 놀랜드, 『북한의 선택』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p. 144.



터리라함은 비밀정보의 수집, 분석만으로는 규명해 낼 수 없는 의문사항이나 현안을 의미한다.<sup>78)</sup> 미스터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이나 사건들이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인간행동의 의도, 선호성, 심리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분석관들은 제한적이거나 개연성의 구조와 범주를 밝혀냄으로써 돌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북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미스터리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생한 북한주민의 아사자 규모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한 북한주민의 추정치는 최대 300만명부터 최소 20여만명에 이르는 등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99년 5월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이 이 시기 북한주민의 아사자 수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통계청이 약 27만명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으나 국내외의 대북지원 관련 NGO들 대부분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증언한 약 300만명 아사설이 더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은 언론기관들과 일부 NGO들의 정보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북한의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쳐 수 백만명의 아사설이 과장되어 있음을 밝히는 시도들을 하였지만 아직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79)</sup>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관들 어디에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북한아사자 수를 밝히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아사자 수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베일 속에 감추어진 채 미스터리 정보로서 미제(謎題)로 남아있다.

78)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20.

79) 북한인구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아사자 수를 좀 더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한 시도들로는 이상식, “북한 기아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3호 (2000);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박경수, “북한의 인구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42회 정책포럼, 2010년 3월 15일) 등이 있다.

(나) 기능적 분류로서의 분석의 대상

정보분석의 대상은 기능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나라마다 기능적으로 수집과 분석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정치분석에서 민주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권력엘리트나 집권세력보다는 NGO와 같은 민간단체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거시, 미시 분석보다 산업정보, 국제통상에서의 위법적 행위, 핵심기술의 이전,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80)</sup> 이밖에도 환경문제와 보건문제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전통적인 국가안보 사안에 그 분석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 정치구조 및 동향, 그리고 경제상황 등이 주요 분석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sup>81)</sup>

대체로 북한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분석기구의 조직구성이 대체로 기능적 분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일부의 경우 정세분석국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산하에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다루는 분석 조직은 경제 정보 분석 조직과 함께 묶여 있다. 경제사회분석과가 다루는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분석 대상은 인구, 노동, 주민생활,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언론, 출판, 체육, 보건, 의료, 영양, 여성, 청소년, 자연·지리, 환경 등 매우 광범위하다.

학술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북한정보 분석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석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북한연구센터’에서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능적 분류에 의한 북한정보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언론기관들이나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형식적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전문적인 분석관이나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80) Berkowitz and Goodman, *Best Tru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102~103, 문정인, 『국가정보론』, p. 122에서 재인용.

81)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23.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한 민간단체의 경우 분석팀에는 총 13명의 분석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 경제생활, 사회, 군사 대남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적 분류는 형식에 불과하였다. 일단 어떤 북한정보가 입수되면 분류와 상관없이 모든 팀의 분석관들이 모여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관 인원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다.<sup>82)</sup>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체로 언론기관, 민간단체, 학술기관에서 분류의 범주화, 유형화, 매뉴얼, DB구축 등이 마련되지 못한 채 즉흥적이고 임의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모든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분류를 체계화, 전문화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인적 역량과 비용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평가단계의 실태

### (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

정보분석에서 평가단계는 수집된 첩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 대한 첩보의 진위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평가 단계에서는 분석대상에 대한 심층 지식 및 언어능력, 경험적 노하우와 직관 등 분석관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조직 밖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할 때도 있다. 특히, 북한정보를 다루는 대부분의 남한 출신 분석관들은 북한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정보기관 관계자, 탈북자, 국내외 방북인, 남북한과 겸임공관, 대북NGO 실무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의 경우는 겸임 공관이나 북한을 방문한 주한 대사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를 평가하는데 중요 소스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정보를 평가·분석하는데 제도적 협조보다는 네트워크가 10명만

82)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있어도 정기적으로 모여 북한정보를 취합하고 평가·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를 피력했다.<sup>83)</sup>

미국의 경우는 분석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5분 대기조와 같이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평가분석팀이 있다. 또한 각 정보기관의 분석관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분석업무를 협조하기도 하며, 정책결정자와 정보분석관 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이 외국 관리 등과의 접촉에서 취득한 정보사항을 분석관에게 제공하는 등 정책결정자들과 분석관의 상호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기관의 경우 평가단계에서 역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분석 실무자가 개인적 네트워크를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 정부 관계자의 경우는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다녀온 전문가나 외국학자, 탈북자,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과 같은 제도적 협조체계가 아니라 인간적 네트워크에 의한 협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sup>84)</sup>

#### (나) 대조확인(cross-checking)을 통한 평가

분석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 외에도 북한 첩보의 평가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대조확인이다. 대체로 대조확인을 의뢰하는 대상은 해당 첩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나 탈북자인 경우가 많다. 언론기관의 경우, 수집된 첩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체로 대조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군사적 사안이나 화폐개혁과 같이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복수의 정보원을 교차대조를 통해 첩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하지만 군사훈련과 같이 시의성이 중요한 첩보의 경우 복수의 정보원의 확인 절차없이 정부당국에 전달했다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83) ○○○(국가기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7.20).

84) 위의 글.

한 민간단체의 실무자는 2008년 함경북도 도당전원회의에 참가했던 사람이 전해준 말을 옮겨들었는데, 회의 내용 중 원래 군에서 실시하는 하계 동계 정기훈련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전군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들었다. 이 실무자는 남한의 국가안보차원에서 비상상태라고 자체 판단하여 복수의 정보원들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남한 당국에 관련 첩보를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긴급군사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다.<sup>85)</sup>

물론 원천적으로 복수의 비교대조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첩보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비밀 현지조사와 관련된 첩보가 그러한 경우인데, 김정일의 최측근으로부터 확인하지 않는 한 김정일의 비밀 현지조사와 관련된 첩보는 구조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의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북한정보의 경우 중국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활동가나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같은 사안이라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첩보와 국외의 거주자 또는 활동가들을 통해 전달되는 첩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국내의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정보보다는 국외의 NGO 활동가, 탈북자, 재외동포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를 더 신뢰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경우라도 정보를 분석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탈북자를 통한 첩보의 진위여부를 평가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역정보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과 대조확인(cross-check)해야 한다. 최근 북한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은 탈북자 단체들인데 중국이나 한국 핸드폰을 통해 통화하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sup>86)</sup>

최근 북한에서 한 민간인이 직접 찍은 영상자료를 통해 기존에 특정인의 증언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실로 알려졌던 정보가 틀렸음이 밝혀진 사례가 있다. 이제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운의 이름은 2009년 9월까지만 해도 ‘김정운’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의 존재를

85)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86) ○○○(국가기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7.20).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김정일의 전속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의 이름을 ‘김정운’이라고 잘못 증언했기 때문이다. 일본어에서는 ‘一’ 발음을 ‘丁’ 발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만의 사진작가 후양 한밍씨가 2009년 9월 원산 근교에서 김정일의 이름이 적힌 벽보사진(<그림 IX-1> 참조)을 찍어 인터넷 포털 ‘야후’의 사진 공유 사이트(www.flicker.com)에 올림으로써 김정일 3남의 이름이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임이 밝혀졌다. 이 사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하나는 대조확인 작업을 통해 북한정보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포스터와 같이 북한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북한 후계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IX-1> 김정일 선전 벽보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29868194@N08/3944502627>

이밖에도 최근에는 북한이 아이폰을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는 등 하이테크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과 다른 차원의

다양한 첩보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보기관들의 북한정보 분석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 (다) 북한방문을 통한 평가

또한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북한방문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북한 현지에서 북한 간부로부터 직접 첩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사회 문화 분야의 대북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한 민간단체의 실무자는 남한사회에서 김정은 후계자와 관련하여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는 방북할 때 북한의 간부에게 요즘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불리고 있는지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어 정말로 발걸음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출신의 한 고위간부와 밤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교가 얘기를 하다가 교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기 아들이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닌다고 하며 집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밤새 통화중이라 결국 이 간부는 교환수를 통해 아들이 밤새 PC통신을 하느라 계속 통화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는 북한의 엘리트층에서 컴퓨터의 보급 수준은 물론 통신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87)</sup>

### (3) 분석단계의 실태

#### (가)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 따른 현황

정보분석에는 세 가지의 이론적 접근이 있다. 첫째는 기술학과 시각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정보분석의 기능은 수집된 첩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분석관의 역할은 영상첩보나 암호첩보 등을 기술적으로 해석해 주고 그 의미를 정보소비

87)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자에게 전달하는데 한정된다. 이때 분석관은 단순히 기술적 조언자에 지나지 않다.

두 번째는 과학적 예측학과 시각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정보분석은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서술을 넘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미 발생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내고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예측판단을 하는데 주요 기능이 있다. 또한 분석의 대상은 단순히 비밀 첩보만이 아니라 공개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이 시각은 정보분석관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요구에 너무 주목할 경우 분석결과가 정치화되고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기회분석학파의 시각은 정보의 중립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시각에 따르면 정보분석은 정책결정자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요 적대국 지도자들의 위협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아국 정책결정자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분석관은 정책결정자들과 멀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들의 선호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분석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 (나) 분석방법의 차이에 따른 현황

##### 1) 자료형과 개념형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현황

일반적으로 기본정보의 경우는 핵심 사실의 단순한 서술로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용정보, 경보정보, 예측·판단정보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분석이론과 기법이 필요하다. 분석기법은 크게 자료형과 개념형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정보분석은 자료형 모자이크 이론에 기초해 왔다.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모자이크를 하듯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자료형 분석방법이다.<sup>88)</sup>

북한정보의 분석은 대체로 자료형 분석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상정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특징 상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88)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30.



한 두 개의 상징어들을 가지고 거시적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는 후계자와 관련하여 『로동신문』(2010년 6월 30일)은 9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당대표자회 관련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며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에 사용되었던 ‘당중앙’의 용어가 3남 김정은을 상징하는 ‘당중앙’이라는 용어로 다시 사용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 50주년’(8.25)을 사흘 앞둔 8월 22일 ‘빛나라, 선군장정 천만리여!’라는 제목의 시에서 “무적필승의 영장/우리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이/그대로 이어진 씩씩한 그 발걸음 소리”라는 구절에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9월에 개최될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였다. 이처럼 자료형 분석기법은 소수의 첩보를 가지고도 거시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현안문제에 대한 모든 첩보를 확보하기란 어렵다. 또한 부분적 첩보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상존한다.

따라서 자료형 분석방법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개념형 방법이다. 개념형이란 분석관이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근거로 세부적인 첩보수집과 분석에 임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어떤 사안에서 있어서도 완벽한 정보란 없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이론에 의거하여 추정,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분석기관들은 자료형 분석에서 개념형 분석으로 전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89)</sup>

개념형 분석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상황논리에 기초한 내재적 접근이다. 내재적 접근이란 분석 현안에 대해 보편적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분석 현안의 맥락에서 분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89) 위의 책, p. 131.

분석해야 북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내재론적 시각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두 번째는 보편이론적 접근이다. 이 접근방법은 분석 현안에 대한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보편적 경향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지어 최근 북한붕괴론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내재적 시각에서 북한의 체제내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이행국가의 전환기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측하는 시각이다.

마지막 분석기법은 비교역사 모델이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명제가 이 모델의 기본가정이다. 비교역사 모델은 분석 현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동시에 과거의 역사적 사례가 현재의 분석 현안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비교역사 모델은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이행모델이나 시민사회론,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론 등을 북한에 적용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북한사회에서 비공식부문이나 사적 부문이 빠르게 형성·확대되고 ‘부르주아문화’ 또는 ‘황색바람’으로 경계하던 외부문화를 소비하는 북한주민들이 급속히 늘어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러한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민사회론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sup>90)</sup> 이러한 주장들의 공통점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할 수 있었던 동력의 하나를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서 찾고 비공식부문의 활성화와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의 유입 등이 시민사회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데 있다.

## 2) 질적분석과 계량적 분석에 따른 분석 현황

수집된 첩보들을 검증하는 방법은 질적 방법론과 계량적 분석방법론

90)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한 연구들로는 안정시·김근식,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가능성,”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3호 (1994);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민족과 문화』, 제4집(1996);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4권 1호 (2001) 등이 있다.

으로 대별된다. 질적 분석방법은 주어진 이론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지만 계량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사례연구나 역사분석, 또는 역사구조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 사안에 대한 서술을 하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예측하는 방법론적 경로를 거친다. 또한 이 방법은 정치, 사회현상의 규칙성, 반복성, 보편성보다는 분석관의 직관과 분석 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적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둔다.<sup>91)</sup> 대체로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분석은 질적 방법론에 의존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가치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질적 방법론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서진영의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는 북한의 소설이나 탈북자의 수기 등을 분석하였으며, 서재진의 『또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는 북한의 소설과 탈북자 증언 등을 분석하였다. 이종석 외의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는 20명의 탈북자를 면접하여 분석하였다.

한만길의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서울: 우리교육, 1999)는 16명의 탈북자의 수기를 분석한 것이고, 문옥륜의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수원: 아주남북보건의료연구소, 2001) 역시 탈북자들을 심층면접하여 분석한 것이다. 오유석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가부장제”(『경제와 사회』, 제49권, 2001)는 탈북자의 수기와 6명의 탈북자를 심층면접하여 분석하였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는 북한문헌을 통해 북한의 일상생활, 도시와 건축, 체육, 민속문화,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을 분석하였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은 북한문헌과 42명의 탈북자의 구술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북한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북한사회를 설명한 연구들도 최근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노귀남, “가정생활: 소설 속의 모습을 중심으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지속과 변화』(서울: 해남, 2006) 등이 북한 소설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91)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33.

계량적 분석방법론은 자연과학적 방법에서처럼 사회과학에서도 수많은 사회적 현상을 계량화하여 변수와 변수간의 관계를 서술, 설명,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량분석은 귀납적 통계분석, 연역적 방법, 시물레이션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귀납적 통계분석이 가설을 설정하고 총량 자료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개연적 관계를 통계적 상관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면, 연역적 방법은 하나의 명제를 설정하여 그 명제를 개별적 사례에 적용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밝히는 것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물레이션 방법은 통계적 개연성이나 논리적 일관성, 인과관계 규명 보다는 주요 분석 대상의 결정과정을 인공지능 등 통계기법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자기학습적 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계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가장 큰 장애는 계량화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량적 방법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는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2만명을 넘을 정도로 통계적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 중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로는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65명의 탈북자 설문조사), 좋은벗들 편,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서울: 정토출판, 2001, 1,527명의 탈북자 설문조사), 이철수, 『북한사회복지』(서울: 청목출판사, 2003, 101명의 탈북자 설문조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08년부터 탈북자 300~400명 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주민의 통일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남북통합지수를 산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또 다른 사례들은 북한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다. 과거에 북한 사회문화 정보와 관련된 통계들 중 대표적인 것은 조선중앙통신사가 내년 발행했던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부록이었다. 사회문화 관련 통계는 ‘문화’로 분류된 부분에 각급 교육망의 학생수, 보통교육 부문의 학교수, 학생 수, 교원수, 대학, 중등 전문 학교 수 및 학생수, 문화시설, 출판물 발행, 의사

및 보건 시설, 휴양소 및 요양소 등의 통계자료가 제시되었다.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북한의 통계당국이 공식통계를 대내외에 발표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주의 통계국이 매년 발행했던 공식적 『통계연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92)</sup> 그러나 1963년 이후에는 더 이상 북한의 공식문건 어디에도 통계자료가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 사회문화 정보에서도 통계자료에 토대로 한 계량적 분석방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북한의 통계자료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인구관련 통계이다. 1980년대 들어 북한당국은 자국 최초의 인구센서스 실시를 목적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재정지원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1983년 처음으로 자국의 출생률, 사망률, 평균 수명 등 각종 인구관련 통계를 담은 *The Health Statistic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통계보고서를 영문으로 발간하였으며, 이후 1987년에는 이를 보다 개정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노력으로 1989년 UNFPA와 북한 사이에 최초의 인구센서스에 대한 재정지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기초 조사의 일환으로 같은 해 1946~1987년까지 자국의 주요 인구통계를 UNFPA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sup>93)</sup> 이 인구통계에는 인구개요(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인구구조), 출생과 사망, 기대수명, 직업별 인구구성, 가구 수와 가구 규모, 결혼 및 이혼, 인구이동, 교육과 의료, 보건 등 북한 인구 구조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전체가 망라되어 있다. 이 통계 보고서의 제출을 계기로 UNFPA는 북한 인구센서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1993년 인구센서스 통계(원제: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이다. 이 센서스의 결과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던 북한의 모든 연령층과 모든 지역에서의 구체적 인구구조가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인구추세를 보다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모델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sup>94)</sup>

92) 이 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36~37.

93) 위의 책, pp. 54~55.

94) 위의 책, p. 57.

이밖에도 2002년 북한이 UN에 제출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는 당시까지의 주요 북한통계를 수록한 일종의 통계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16 July 2002) 보고서에 첨부된 통계부록에는 북한의 기본 인구와 GDP, 출생 및 사망, 기대수명 등과 같은 기초지표부터, 산업별·성별 고용구조, 출생 및 사망, 전문가·기능인의 수, 의사 수, 외채 규모와 실업 등과 같은 세부 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다시 UNFPA의 기금을 받아 실시된 2008년 인구센서스 통계자료가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 통계자료에는 1993년 인구센서스에는 없던 가내 경제활동이나 장애인구, 주거환경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 인구 관련 통계자료들은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 (다) 분석조직 구조에 따른 분석 현황

정보분석에서 분석조직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대별된다. 첫 번째는 분산형(confederal)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정부의 각 부서가 각자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갖추고 부서간 교류 없이 해당 부서의 활동에만 활용하는 분석기구유형이다. 이 모델은 각 부처의 정책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분석의 중복과 소요자원의 분산투자에 따른 정보 활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중앙집중형(centralized)이다. 이 모델은 분산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착안된 것으로, 각각의 정보기관의 분석 대신에 주요 사안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 정보기관의 대표들이 합의하여 정보를 예측하고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중복투자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각각의 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정보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정책소요에 필요한 유용성 측면에서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경쟁적 분석(competitive

analysis)을 특징으로 하는 절충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정보기관들로부터 분석관들을 모아 팀을 나눈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경쟁적으로 분석케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정보분석 부서들이 대개는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다량의 정보분석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 간의 합의를 거친 중앙집중형보다는 각 정부의 부서가 각자 첩부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분산형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는 각 정보기관이 기초정보를 함께 공유하되,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우, 정부의 각 기관마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학술기관,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경우 대체로 형태적으로는 분산형 분석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능적으로는 분석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 민간단체의 경우 10여 명의 분석관을 보유하고 있고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를 분석하는 팀으로 나누어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첩보가 들어오면 거의 모든 분석관들이 첩보를 공유하고 합의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실태는 학술기관이나 언론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 (라) 분석단계에서의 정보실패 현황

정보실패는 언제든 있기 마련이다. 정보실패는 주로 분석관의 실패와 조직상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분석관으로부터 유래하는 정보실패는 인지상의 실패와 능력상의 실패이다. 인지상의 실패는 주로 분석관 자신이 처한 현실인식을 분석 대상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분석관의 인지상 실패로 발생하는 정보실패의 한 사례를 들어보면, 한 연구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젊은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그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단적인 노동을 당했고, 자신의 애인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탈북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연구자는 그 탈북자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치고 손이 너무 깨끗하고 돈 씹씹이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알아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증언을 신뢰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탈북자는 기획탈북자였고 정치범 수



용소에 관한 이야기가 허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sup>95)</sup>

또한 인지상의 실패는 집단적 사고의 경직성과 편견에서도 비롯된다. 특히, 정보기관의 경우 조직적 특성 때문에 분석관 개별적 의견이나 판단이 허용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 궁극적으로 집단사고는 대안적 사고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정보분석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sup>96)</sup>

분석관의 인지구조와 더불어 분석관의 자질 역시 중요하다. 분석관이 잘못된 가정, 부적절한 분석기법, 그리고 왜곡된 첩보자료를 비판적 여과 없이 수용, 적용했을 때 심각한 정보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sup>97)</sup> 대부분의 정보실패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다. 또한 첩보자료의 관리 미숙도 정보실패를 초래한다. 엄청난 첩보의 유입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실패는 대개 분석관의 언어적 능력과 직관력의 부족, 집중력 결여, 그리고 역정보 식별 능력의 한계 등이 주된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분석단계에서의 정보실패는 조직 또는 제도상의 경직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특히 정보분석의 정치화가 문제이다. 정보기관의 정보 분석은 최고 지도자의 선호성에 따라 정치화될 수 있고, 이러한 정치화 현상은 정보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보실패는 관료정치에 이해관계에 맞물려 비롯되기도 하고, 정보기관간에 흥정과 타협을 통해 정보가 왜곡되기도 한다.

#### (4) 종합단계의 실태

분석된 첩보들이 통합되는 과정은 대체로 북한전문가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종합단계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정부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학술기관 등)에서 분석된 첩보들이 통합되어 비교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한 하나의 북한정보로 생산되게 된다.

95)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96)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145.

97) 위의 책.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협조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각 정부부처는 자기 조직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독자적으로 종합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학술기관이나 민간단체, 언론기관들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다양한 채널과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된 결과들을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종합 단계를 거치는 분석이 꼭 신뢰할 만한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경험을 사례로 들면, 2005년경 한 정부기관은 각계 대북단체 활동가들을 불러 모아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다. 이때 다른 모든 단체관계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한명은 자신이 최근 방북하였을 때 북한의 민화협 관계자로부터 북한에는 친중교류파와 친남교류파가 경쟁하고 있는데 6.15이후 친남교류파가 우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다수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였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한명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자문회의가 있는 후 바로 다음 주에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져 금강산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sup>98)</sup>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험을 한 일부 연구자나 활동가들의 경우는 방북 또는 현장조사 중심의 정보 수집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수의 분석된 첩보를 통합하기 보다는 철저히 개인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인 수준에서 종합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 분석된 북한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 (5) 해석단계의 실태

분류, 평가, 종합 단계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예측판단을 주로 하는 해석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와 다른 인식과 접근이 이루어진다.

해석단계에서는 기관의 정책기조, 사업의 목적, 진보 또는 보수 성향

98)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등에 따라 같은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의 차이에 따른 다른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보의 왜곡을 초래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정보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 정책결정자와 정보분석관 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관이 정보의 ‘정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해석 단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학술단체나 민간단체의 경우 정치적 평가를 의식이나 활동에 이롭게 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특정 집단에 이롭게 해석해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정보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거시적(전국적, 정책적) 접근과 미시적(지역적, 현상적) 접근의 결합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지위, 계층, 지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라도 추가 첩보가 입수될 경우 이전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신속하게 변경해야 할뿐만 아니라 사후 해석의 정확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 진보적 시각을 떠나 교차확인, 복수의 정보를 통해 ‘검증된 정보’에 기반한 북한 분석이 필요하다.<sup>99)</sup>

#### 다. 활용단계

정보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생산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대상국가 또는 조직의 역사, 지리,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고정된 기초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기본정보 또는 기초서술정보(basic descriptive)이고, 둘째는 최근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현용정보(current reportorial)이다. 세 번째는 적의 동향을 부단히 감시해서 얻어지는 공세적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보정보(warning and indication)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예측, 판단해 주는 예측 판단 정보(speculative evaluative)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생산물은 현용정보의 성격을 띤다. 현용정보는 통상 보고 당일 또는 전날의 사건에 대한 분석보고를

99) 정창현, “민간 대북정보의 생산과 해석: 화폐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일일주요정보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용보고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형 분석보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정보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 (1) 용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실태

#### (가) 기본정보의 활용 현황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 분석해 놓은 것을 정책결정이나 연구, 대북사업 활동에 참고하는데 활용되는 기본정보는 모든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관과 언론기관의 경우 정치, 군사, 경제 등과 관련된 기본정보의 활용이 활발한 반면에, 민간단체의 경우는 정치와 군사와 관련된 기본정보보다는 경제, 인권, 인구,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기본정보에 더 관심이 많다.

학술기관의 경우는 시의성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용정보, 경보정보, 예측정보 등에 비해 기본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학술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기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는 경제 분야의 기본정보에, 세종연구소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경우는 정치, 군사, 외교의 기본정보에,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경우는 북한의 사회문화나 일상생활 등의 기본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북한동향』의 경우, 사회문화 분야의 정보는 ‘대내동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마저도 김정일 및 주요 정치인물의 동향과 경제관련 주요 사건 및 정책 등에 대부분이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사회문화 분야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월간북한동향』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북한정보는 대체로 기본정보와 현용정보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통일부가 1년에 1회 발간하고 있는 『북한의 이해』의 경우, 2010년 발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사회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정보는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과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북한의 이해』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정보의 경우 연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현용정보의 기능보다는 기본정보의 성격을 지닌다.

(나) 현용정보의 활용 현황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현용정보의 경우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는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현용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고, 민간단체의 경우 대북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현용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보생산기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심분야에 따라 NGO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006,  $p < 0.01$ ). 특히, 북한의 인권과 사회문화가 주요 관심 분야인 응답자의 경우에 NGO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타 기관이 생산한 북한정보의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생산, 배포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000,  $p < 0.001$ ). 특히 정부기관에 소속된 응답자의 경우가 소속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업, NGO, 학계 순서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역설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파급력 가진 언론기관은 정작 소속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다) 정보정보의 활용 현황

사회문화 분야의 북한정보의 경우 이상 징후나 동향 변화를 즉각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보정보는 주로 군사적 동향 변화, 통치자의 건강 문제, 전국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시책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는 해당되는 정보가

거의 없다. 공개처형, 주민들의 향의 집회, 체제비판의 전단지나 벽보 등장과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며 정보정보의 수준은 아니다.

또한 정보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라고 판단되어 공유한 정보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에서는 정보정보의 성격이 약하다. 하지만 최근 신의주 지역의 홍수피해 실태와 같은 정보는 즉각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보정보의 성격을 갖는다.

#### (라) 예측정보의 활용 현황

국가기관, 언론기관, 학술기관에서 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북한정보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인 경우가 많아 예측정보로서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언론기관, 민간단체, 학술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전문가나 전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정보팀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측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복수의 기관이나 분석가들에 의한 합동작업을 통해 나온 예측정보보다 오랜 교류나 사업을 통해 북한의 대남관계자들을 통해 사적인 자리에서 우회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개인의 예측정보가 오히려 더 정확한 경우가 종종 있다.

### (2) 정보의 공유

#### (가) 기관에 따른 정보 공유

##### 1) 정부기관의 정보 공유 현황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수집·분석한 정보를 대부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웹사이트(www.nis.go.kr)를 통해서 공개되는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는 다른 언론매체나 학술기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북한의 이해’ 수준의 교과서식 단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 분야의 북한정보는 북한의 문예, 언어, 보건의료, 사회복지, 체육, 방송언론, 여가생활, 문화생활, 관혼상제 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설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도 일반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비공개적인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본정보에 해당되며, 현용정보·경보정보·예측정보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에 비해 통일부의 북한 사회문화 정보 공유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의 정보 공유 형태는 주로 발간물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발간물의 경우도 기관의 웹사이트(www.unikorea.go.kr)에 탑재되어 있다. 발간물의 경우 『북한의 이해』(연간)와 『월간북한동향』 등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정보가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2010년 발행된 『북한의 이해』에서 다루어진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북한의 교육(교육정책과 교육제도, 교육과정과 방법, 학교생활), 문학과 예술(문예정책, 문학·음악·무용·미술·영화 및 연극·텔레비전 드라마), 계층구조(계층구조, 계층이동),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가치관, 하루생활, 생애과정, 의식주 생활), 일탈과 사회통제(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사회통제)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정보는 모두 통일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누구나 무료로 공유할 수 있다.

『월간북한동향』의 경우 역시 발간물과 웹사이트를 통해 병행 공유되고 있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정세분석국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와 같은 방송매체와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의 보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사건과 활동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일부 내용에는 자체 해석을 부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대내동향>, <대남동향>, <대외동향>, <주요인물동정>으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는 <대내동향>에서 다루어지는데, 대부분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정보들로 채워져 있고, 사회문화 분야의 정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종종 보건, 환경, 언론, 문예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활동, 사업 등이 소개되는 수준이다.

## 2) 학술기관의 정보 공유 현황

학술기관의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 공유는 대개 연구물의 발표 및 배포를 통해 공유된다.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공개정보이나 때때로 연구의 주제와 분석대상, 활용정보 등에 따라 대외비로 처리되어 제한된 범위와 대상에게만 공유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체로 학술기관에서 생산된 정보 경우에는 무상 공유보다는 판매가가 정해져 유상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더 많다. 판매가는 일종의 저작권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기관에서 제공되는 북한정보 중에서 사회·문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술기관들에서 공유하는 정보도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대외관계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문화 분야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기관의 연구정책, 연구비용 지급자의 요구, 연구역량의 부족 등 다양하다. 특히, 개인 연구자의 경우에 정보 공유는 연구비용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공유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자비로 수집·분석된 북한정보의 경우는 활용 범위와 형태에서 비교적 제약이 없고 자유로우나, 타인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조달받았을 때 정보 공유의 범위와 형태는 비용을 조달한 측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개인 연구자는 학술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수집·분석한 북한정보를 내부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소속기관을 나온 이후의 연구는 자비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집·분석된 정보는 민간단체 활동을 하면서 에세이 형태로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 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정보의 구매나 제공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다.<sup>100)</sup>

최근 3년간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배포하고 있는 현황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사례를

100)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들어 살펴본다. 이 세 학술기관들은 북한정보를 학술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세 기관 모두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북한의 사회문화 관련 자료들을 이용자들이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북한정보를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학술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1991년에 개원한 통일연구원 는 자체 생산한 북한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배포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의 경우는 대체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한 대상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정보를 외부와 공유하고 있지만, 공유되고 있는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양적으로 매우 적은 현실이다. 최근 3년간(2008~2010년) 발간된 연구보고서 57건 중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보고서는 1건<sup>101)</sup>에 불과했다. 북한에서 발간된 특수자료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 소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목록이 소개되고 있는 특수자료의 내용은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소장목록은 단행본 『김일성 저작집』과 『김정일선집』, 연속간행물 『경제연구』, 『철학연구』, 『력사과학』, 『천리마』, 『조선예술』, 『조선문학』, 『조선여성』, 『조선영화』, 『조선의학』, 『근로자』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설립된지 30여년이 된 북한연구소는 민간 학술기관으로 역시 광범위한 북한정보를 다루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월간북한』, 『북한총람』 등을 통해 북한정보를 외부와 공유하고 있다. 공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유료 배포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목록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정기간행물 『월간북한』에서는 “북한실상”, “새터민이 증언하는 북한정보”, “화보”, “지금 북한에서는” 등의 아이টে을 통해 북한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정치와 경제 분야의 북한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북한

10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의 사회문화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월간북한』(2009년 9월호~2010년 8월호)에서 다루어진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북한의 소방대 실태와 조직」(2010년 6월호), 「북한의 우표」(2010년 2월호), 「평양민속예술단」(2010년 3월호), 「이름난 평양음식들」(2010년 4월호), 「북한의 조선식 건축물」(2010년 5월호) 등과 같이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전달 수준의 정보에 해당되었다. 또한 북한연구소는 특수자료 취급기관이지만 자체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조차도 온라인을 통해 소개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2006년에 설립된 신생 학술기관으로 대학내 연구기관이다. 통일평화연구소는 자체 생산한 북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유·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08~2010년) 통일평화연구소가 발간한 20건의 저서 중 5건만이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다루고 있다.<sup>102)</sup> 통일평화연구소 역시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대학내 연구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자료들은 대중적 장서보다는 학술적 장서의 특징이 강하다.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은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전집』, 『김정일선집』, 『조선중앙년감』, 『조선의 민속 전통』 등 다수가 있고, 정기간행물로는 『로동신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연구』, 『경제연구』, 『천리마』, 『조선녀성』 등 다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술기관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한 가지 유형은 해당 학술기관이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통해 재생산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북한에서 직접 생산된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유무상으로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특수자료취급지침’

102) 이연숙 외, 『통일한국의 어린이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윤여창 외,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Daniel Schwekendiek,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Demography, Society, Economy* (IPUS, 2009); 김대행, 『통일이후의 문화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에 따라 제한된 정보소비자 대상에게 제한된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 3) 언론기관의 정보 공유 현황

언론기관은 정보의 공유가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대체로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기관들은 북한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공유의 형태는 조금씩 상이하다. 공유 형태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언론기관들도 있고, 온라인만을 통해 공유하는 언론기관들도 있다. 국내 대부분의 종합일간지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병행하여 북한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온라인만을 통해 북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기관들은 오마이뉴스, Daily NK, 통일뉴스 등과 같이 인터넷 전문 언론기관에 해당되었다.

또한 방송매체 역시 북한정보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종합방송채널에 해당하는 KBS나 MBC는 일상적으로 북한관련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남북의 창’(KBS)이나 ‘통일전망대’(MBC)와 같이 북한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열린북한방송은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열린북한방송의 경우는 ‘남북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다루어지는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북한의 맛집, 점보기, 신혼집 구하기, 소풍, 운동회, 인기 직업, 해수욕, 여행, 생일축하, 연애 등과 같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로 남북한 사회문화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비교할 수 있다.

북한관련 기사가 어떻게 분류되는가도 언론기관에서 북한정보의 위상과 활용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대부분의 종합언론기관에서는 정치파트의 하위 파트로 북한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이 <NKchosun>와 <북한네트>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북한정보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전자의 분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가 다른 분야의 정보와 뒤섞여 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분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가 별도의

메뉴로 분류되어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이런 언론기관의 경우 일부 북한 정보에 한해서는 멤버십을 획득한 정보소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발생한 정보 공유의 형태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북한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기관들은 자체에서 생산한 북한정보를 국내와 국외의 대중적 정보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공유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 지역 내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주로 다루는 일부 언론기관들의 경우는 대중적 정보소비자에게 북한정보를 무상으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외국(특히 미국과 일본)의 연구기관이나 언론기관, NGO들에 유상으로 정보를 배포하기도 한다. 대체로 외국의 정보수요자의 경우는 북한의 정치, 경제 정보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의 NGO의 경우는 북한의 보건, 교육, 시장경제, 인권 시책 등 사회문화 분야의 정보를 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sup>103)</sup>

#### 4) 민간단체의 정보 공유 현황

북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공유하는 민간단체는 대개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의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정보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정보를 소식지나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나 좋은벗들과 같은 큰 규모의 대북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정보를 배포하거나 세미나와 같은 형식을 통해 북한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우에는 최근 2008년에 유엔기구에 의해 실시된 ‘북한 인구총조사’ 자료를 자체적으로 입수하여 세미나를 통해 공개하기도 하였다.

좋은벗들의 경우는 북한 현지의 정보원을 통해 북한정보를 수집하여

103)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오늘의 북한소식」을 통해 북한사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과 정책들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북한소식」은 북한의 전국적 범위의 식량가격 및 시장물가의 변동사항을 거의 매일매일 전달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중요 정책이나 조치들, 그리고 주민반응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남한문화의 유입과 당국의 단속 강화와 관련된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북한소식」 355호는 2010년 7월 10일 함경북도 도당 선전부가 회령시의 불량녹화물 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 첫날 총 9세대가 한국 영화 CD 소지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357호에서는 함경북도 청진시 109불법녹화물 단속 보안원들이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던 도예술학원 학생 3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 탈북 지식인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경우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정보를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는 「북녘마을」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까지 다루어진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보건의료, 종교, 언론, 아리랑공연, 연애와 결혼 등이며, 종종 ‘북한갤러리’를 통해 동영상과 사진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북한 지역 내 자체 정보원을 두고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이 민간단체의 경우, 정보소비자는 다양하다. 국내 언론사의 경우는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퍼가는 수준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은 유료로 월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집단은 미국NGO이다. 또한 종종 적절한 비용을 제시하면 국내 정부기관에게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나 기관마다 관심분야나 요구정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문적인 정보, 예를 들어, 김책기업소, 농장의 시비체계, 간부들의 군사훈련, 군사정보 등을 매우 자세하게 요구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보건, 교육, 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나 일본처럼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주로 정세보고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정보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sup>104)</sup>

그런데 이 민간단체의 정보 공유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쌍방향이라는 점이다. 먼저 웹사이트 내에서는 ‘북한정보주문’이라는 메뉴를 통해 정보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주문하면 답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단체는 북한지역 내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생산한 북한정보를 남한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의 정보소비자와 공유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북한 밖의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주민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활동의 특성은 이 단체의 활동 목적이 북한정보 조사보다는 북한사회의 민주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북한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정보는 남한의 인기 드라마나 영화, 노래, 영어사전 등이며 USB나 CD에 담아 유입시키면 북한 지역 내에서 시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생산하여 확대된다.<sup>105)</sup>

한편, 민간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북한 현지방문과 직접 경험, 또는 북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현장감은 있지만, 제한된 지역과 분야의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부족하여 북한사회에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활동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경우 민감한 북한정보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공유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자신의 단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유하지 않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는 같은 동종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와 경쟁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북한방문을 자주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대중적 정보 공유 외에도 특별한 정보 공유의 한 형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방북결과보고서를 통해 북한 현지방문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방북결과보고서에는 방문목적, 방문경위, 방문지역 및 기간, 방문경로, 방문결과 개요(활동 및 협의사항),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북한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104) 위의 글.

105) 위의 글.

정부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에 별 관심이 없다는데 있다.

한 민간단체에서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의 경우 방북결과보고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지만 사회문화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정부기관의 무관심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문화예술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북한정보 중 사회문화 정보가 매우 취약하여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기관에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석관이 있어야 북한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토론했다.<sup>106)</sup>

#### (나) 공유정보의 신뢰성

북한정보의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공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공유 및 배포 체계와 네트워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유하려는 정보 또는 정보를 배포하는 기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공유하려는 북한정보나 배포 기관이 신뢰성이 없다면 아무리 개방적 공유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보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대북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한 민간단체의 실무자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언론이나 정부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랜 방북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더 의존하여 최종판단을 한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정부기관보다 기업이나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북한정보가 활동에 더 유용할 때가 많다고 한다.<sup>107)</sup>

이처럼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북한정보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도가 낮은 반면, 민간에서 생산한 북한정보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경향은 몇몇 개인의 경험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팀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공개정보의 신뢰성

106)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107) 위의 글.

에 대한 응답을 분산분석(ANOVA)해 본 결과 공개정보의 유형에 따라 신뢰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에 따라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획득한 공개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041,  $p < 0.05$ ). 특히, 기업에 소속된 응답자의 경우에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획득한 공개정보의 신뢰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언론, NGO에 소속된 응답자의 순서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정부보고서와 서적, 인터넷 자료, 국제기구보고서, 민간보고서 등을 통해 획득한 공개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문제는 공유되는 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과의 신뢰관계에도 관련이 있다. 특히, 대북사업을 활발히 하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의 경우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신뢰관계가 깨져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실무자는 북한 방문 중 북한 실무자와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평소 친분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사석에서 비밀을 전제로 전했는데 그것이 기사화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sup>108)</sup>

### (3) 정보의 관리 현황 - 민주적 통제와 비밀보호

원칙적으로 국가정보는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국가정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정권안보와 체제안보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심지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의 중립성 문제는 주요 논쟁점 중 하나이다. 정보의 독점, 은밀성, 지휘감독체계의 집중성 등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보기관은 자의적으로 오용·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북한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데서 민주적 통제로 기능하는 것은 국

108) 위의 글.



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특수자료취급법 등과 같은 법률들이다. 먼저, 국가보안법에서는 제7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거나, 이상의 “행위들을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북한정보를 취급, 관리하는데 통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에서 국정원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13조에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특수자료취급법 제2조는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 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①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②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③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④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자료 중에서 정치적 이념성이 없는 자료를 특수자료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많은 특수자료취급기관에서 모든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북한자료를 특수자료



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sup>109)</sup>

한편, 특수자료취급기관의 활용 현황을 보면 북한정보의 공유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주요 이용대상자들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표 IX-1>에서 보이듯, 북한자료의 활용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연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북한자료센터이고, 다음으로는 1만명 내외의 지역 통일관들이었다.<sup>110)</sup>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로 거의 모든 기관들에서 북한자료 활용도가 대체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정보의 공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X-1> 통일부 산하 특수자료취급기관 특수자료 활용실적

(단위: 명/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150,528/37,430	134,729/35,637	85,932/55,007
통일교육원	1,650/25	-	-
평화문제연구소	11/76	15/63	13/46
북한연구소	14/32	9/18	11/2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26/101	14/25	3/9
남북경제협력재단	6/10	4/5	-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1/200	1/150	1/5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1/5	2/6	11/14
오두산통일전망대	10,435/149	16,708/186	11,886/144
서울통일관	-	281/6	10,208/388
광주통일관	6/35	5/25	1/19
부산통일관	8,410/48	8,416/56	16,611/94
11인천통일관	26,488/254	27,879/306	25,377/187
경남통일관	4,541/39	4,051/32	2,722/22
제주통일관	205/2	543/3	402/3
청주통일관	3,213/40	3,896/55	3,818/52
충남통일관	2,613/21	7,074/145	7,184/151

출처: 송승섭,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2010), p. 82.

109) 송승섭,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제41권 2호 (2010), p. 74.

110) 위의 글, p. 82.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36개 대학도서관의 특수자료 활용은 더욱 저조하다. <표 IX-2>에서 보여지듯,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36개 기관들의 특수자료 활용실적은 통일부 산하 기관들의 특수자료 열람현황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부 산하기관 중에는 대국민 홍보용으로 특수자료를 활용하는 기관이 많은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학술적 사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통일부 산하 기관들 중 가장 활용실적이 높은 북한자료센터의 경우 특수자료의 학술적 이용은 전체 이용자의 15% 내외에 불과했고, 이용자의 대부분은 북한영화 상영 등 단체관람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1)</sup>

<표 IX-2>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 산하 기관들의 특수자료 열람현황 비교

열람횟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2006년)		통일부 산하(2009년)	
	기관수	열람률(%)	기관수	열람률(%)
100회 이상	2	5.6	5	29.4
50~99회	2	5.6	3	17.6
30~49회	5	13.9	1	5.9
10~29회	4	11.1	4	23.5
1~9회	10	27.8	2	11.8
0회	13	36.1	2	11.8
계	36	100.0	17	100.0

\* 출처: 송승섭,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p. 81.

또 대학도서관의 특수자료 활용 실적이 낮은 이유는 특수자료취급기관의 설립이 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서관 정책의 집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기관의 의지나 선도적 역할을 한 소수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지속적인 장서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이용 확대보다는 관리적 측면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탓도 있다.<sup>112)</sup>

111) 위의 글, p. 83.

112) 위의 글, pp. 83~84.

1999년 4월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민간단체인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상대로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국정원이 예산, 인사, 조직 등을 제외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관한 주요문서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일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압력은 나날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을 떠나 자유로운 유통과 선택, 정보의 독점금지를 통해 지식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며, 정치·행정과정의 비밀주의 폐해를 막고 책임행정을 정착시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sup>113)</sup> 미국의 경우는 비밀해제된 문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경우는 국정원, 군,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비밀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학술기관의 경우는 정보의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특수자료취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법률들을 통해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정보의 관리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정보관리의 통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연구자들의 경우 대체로 국가보안법을 의식하여 ‘자기검열’ 형태로 정보관리의 통제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아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발하게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연구자는 정보기관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스스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14)</sup>

북한 방문을 자주하는 민간단체의 활동가 또는 실무자의 경우 북한정보 관리의 통제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북한 방문을 한 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나 북한방문결과보고서(아래 서식 참조)를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획득한 북한정보를 정부가 통제할 뿐만 아니라 공유하게

113)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599.

114)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된다. 아래에 제시된 서식과 같이 북한방문결과보고서에는 방문목적, 방문경위, 방문지역 및 기간, 방문경로, 방문결과 개요(활동 및 협의사항),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자율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방문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주소·연락처	(전화 : )			
	소속 및 직위	(전화 : )			
② 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경 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 방문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경로					
⑦ 방북결과 개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이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통일부장관 귀하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4) 정보의 환류

일단 유통된 왜곡된 북한정보의 경우 대체로 언론기관을 통해 사회로 확산되고, 왜곡된 정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기관, 특히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의 발표를 통해 정보의 진위여부가 판단되고 수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보의 환류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국내 언론기관에 의해 확산되는 왜곡된 북한정보의 출처가 외국 언론기관(특히 일본의 언론기관)에 있다는 점이며, 검증되지 않은 외국 언론기관들의 북한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또는 맹목적인 유입과 의존이 국내에서 왜곡된 북한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언론기관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나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며, 첩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약하며, 지나친 언론기관 간 보도경쟁 때문이다.

언론기관의 경우, 남북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보도행태는 흔히 ‘아니면 말고 식’의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1990년대 중반 ‘오늘자 특종, 내일자 오보’ 현상에 대한 반성도 최근에는 유아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길재경 망명 보도(사실은 이미 사망하였음)와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보도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정보의 경우 ‘정보의 유희’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보의 유희 현상은 남한에서 생산된 북한정보가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다시 재생산되는 경우, 국내에서 획득된 첩보를 외신이 보도하면 다시 국내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경우,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생산된 정보가 방북자나 유엔기구들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면서 정부기관, 언론기관, 학술기관 등을 통해 재생산되어 다시 사회에 유통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4.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사례분석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1995~1998년)에 식량난으로 인해 사망한 북한주민 아사자 규모는 북한사회문화 정보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회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첩보들이 수집, 분석, 활용 단계를 거침으로써 상이한 결과의 북한정보로 재생산되었으며, 그 진실 여부가 여전히 논쟁상태로 남아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주민의 아사자 수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첩보들이 수집되고, 어떤 과정과 기법을 통해 분석되었고,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사례의 수집, 분석, 활용 단계에서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짚어볼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에 의해 사망한 북한주민의 아사자 수에 관한 국내외 추정치들은 <표 IX-3>에서 보이듯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추정치들 간의 격차 또한 매우 크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제시된 추정치들은 크게 남북한의 정부 기관 및 관계자, 국내 NGO, 국내 개인연구자, 마지막으로 해외 기관 또는 개인 연구자로 분류된다.

먼저, 국내의 정부기관으로는 국정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추정치들이 있고, 북한 정부기관의 경우는 최수현 외무성 부상과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조선노동당 전 비서가 제시한 추정치들이 있다. 국내 NGO의 경우 좋은벗들과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제시한 추정치들이, 국내 연구자의 경우는 이삼식, 이석, 박경숙의 추정치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경우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Peter Hyes, Anderw Natsios, Goodkind and West에 의해 제시된 추정치들이 있다.

&lt;표 IX-3&gt; 북한기근 시기 사망자 수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

	추정 기관 또는 개인	추정 사망자 수(기간)
남한 정부	국정원 통계청	약40만명(1995~1998) <sup>a)</sup> 약27만명(1995~1998) <sup>b)</sup>
북한 간부	최수현(외무성 부상) 황장엽(조선노동당 전 비서)	22만명(1995~1998) <sup>c)</sup> 150만명(1995~1996)~300만명 (1994년~1998) <sup>d)</sup>
국내 NGO	좋은벗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350만명 (1995. 8.~1998. 7.) <sup>e)</sup> 300만명(1995. 8.~1998. 3.) <sup>d)</sup>
국내 연구자	이삼식 이석 박경숙	23만명(1995~1997) <sup>g)</sup> 58~112만명(1994~2000) <sup>h)</sup> 34만명(1993~2008) <sup>i)</sup>
해외기관 및 연구자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Peter Hyes 존스홉킨스대학 공중보건연구소 Andrew S. Natsios Goodkind and West	200만명(1995~1997) <sup>j)</sup> 연평균30~80만명(1995~1997) <sup>k)</sup> 90~240만명(1995~1998) <sup>l)</sup> 20만~200만명(1995~1998) <sup>m)</sup> 천명당 42.8명 사망(1995~1997) <sup>n)</sup> 약 245만~250만명(1995~1997) <sup>o)</sup> 60~100만명(1995~2000) <sup>p)</sup>

출처: a) “이종찬 전 국정원장, 북한 아사자 40만명 추산”, 『연합뉴스』, (1999년 5월 31일); 『월간조선』, (1999년 9월호)

b) 통계청, 『북한인구추계 결과』, (1999년 8월 27일)

c) “95~98년 식량난 때 북한주민 22만명 숨져”, 『중앙일보』(2001년 5월 16일)

d)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e) 법률 편,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f)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1998년 5월)

g) 이삼식, “북한 기아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3호(2000.4)

h)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4)

i) 박경숙, “북한의 인구나 자료: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42회 정책포럼(2010년 3월 15일)

j) 이삼식, 위의 글

k) 이삼식, 위의 글

l)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n Catastrophe and Its Lesson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January 2002)

m) Woo-Cumings, 위의 글

n) W. C. Robinsons, M. K. Lee, K. Hill,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strospective Study,” *The Lancet*, vol.354(July, 1999)

o) 나초스,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서울: 다홀미디어, 2003)

p) D. Goodkind and L. West,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Jun. 2001).

## 가. 수집단계

먼저 국내 정부기관에 의해 발표된 북한 아사자 추정치들은 인간정보와 공개출처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시되었다. 국정원의 추정치 경우, 1995~1998년 동안 북한 아사자 수를 40만명으로 보고 있는 그 근거로 탈북자를 통해 얻은 첩보와 북한 인구센서스를 기초하고 있다. 1999년 5월 30일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KBS 제2TV의 ‘정수복의 세상읽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재 학자들까지 동원해 아사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단체들이나 언론에서 “2백만~3백만명이 죽었다는 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15)</sup>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인구추계 결과』보고서(1999년 8월 30일)에 의하면, 1995년~1998년 기간에 기아사망자 수가 약 27만명으로, 이 수치는 이 기간 총 사망자 1백2만명의 약 2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추정치의 근거는 북한이 1994년에 발표한 인구센서스와 북한당국이 국제기구 및 외국방문단에 제시한 보고 자료와 통일부와 국정원 등에서 파악한 탈북자들을 통한 정보 및 기타 해외정보를 유추, 종합한 것이다.<sup>116)</sup>

다음으로 살펴볼 북한 정부에 의해 제시된 추정치는 외무성 최수현 부상이 2001년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 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그에 의하면 19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22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근으로 숨졌다. 이것은 북한의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식량난에 대한 실상을 공개한 것이었다.<sup>117)</sup>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닌 남한으로 망명한 후에 언급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주장한 북한 아사자 추정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된 첩보들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통계자료를 직접 보고 획득한 첩보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단체의

115) “이종찬 전 국정원장, 북한 아사자 40만명 추산,” 『연합뉴스』, 1999년 5월 31일,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53170049](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53170049).

116) “북한 아사자 수의 진실 찾기,” (월간) 『말』 (1999. 10), pp. 100~103.

117) “95~98년 식량난 때 북한주민 22만명 숨져,” 『중앙일보』, 2001년 5월 16일,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915772](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915772).



조사를 통해 공개된 첩보이다. 먼저 그는 『조선일보』(2004년 3월 24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탈출하기 직전인 1996년 11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내부통계자료를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그 통계자료에 식량난이 시작됐던 1995년에 당원 5만명을 포함해 50만 명이 아사했으며, 그 다음해 11월까지 통계에서도 100만 명이 추가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다시 1996년 이후의 아사자 수까지도 언급하는데 1996년 이후에는 북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단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1994~1998년까지 300만명 이상이 굶어죽었다고 주장하였다.<sup>118)</sup> 황장엽 전 비서는 또 그의 저서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에서 “조직부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난 95년에는 당원 5만명을 포함하여 50만명이 굶어죽었고, 올해(그때는 1996년 11월 중순이었다)에는 벌써 100만명 가량이 굶어죽어 간다고 합니다”<sup>119)</sup>라고 증언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민간단체들에 의해 제시된 추정치를 살펴본다. 대체로 민간단체들이 제시한 추정치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간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먼저, 북한 아사자 수에 대해 국내외의 언론기관들이나 연구자들에서 북한 아사자 가장 자주 인용,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좋은벗들이 제시한 추정치이다. 좋은벗들은 1997년 9월 30일부터 98년 5월 19일까지 8개월에 걸쳐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 1,694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근 사망자 수를 추정했다.<sup>120)</sup> 조사자들은 주로 북중 국경지대인 압록강, 두만강변의 중국 길림성 장백, 연변지역에 탈북자들이 피신해 있는 곳을 찾아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혹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초청하여 며칠을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북한의 식량난민 770명을 면담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구의 27%가 사망했다고 추정했다.<sup>121)</sup> 이 단체는 다른 보고서에서 탈북자 중 한명이 북한에서 노동당원

118) “북한 아사자수 왜 애써 줄이려하나,” 『조선일보』, 2004년 3월 24일.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03/200403240061.html>).

11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286.

120) 범문 편,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pp. 173~210.

교육 중 “지난 고난의 행군 동안 우리는 인적 손실이 200~250만명 정도 였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증언을 전하기도 하였다.<sup>122)</sup>

국내의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아사자 수를 살펴보면, 먼저 이삼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첩보들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는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 탈북자 진술 자료,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조사자료, 마지막으로 황장엽 전 비서의 주장을 토대로 1995~1997년 기간의 아사자 수를 추정했다. 그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이유로 첫째, 북한의 사망통계는 작성체계 미흡 및 정치적·국제적 이유에 의한 허위 발표 등으로 신뢰도가 낮고, 국제기구 등이 북한당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역시 정확도가 낮으며, 중국 국경에 거주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탈북자 일부 또는 북한내 일부 지역의 주민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들도 표본선정의 부적절성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up>123)</sup>

이석은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와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UN과 EU가 공동으로 실시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이석은 1993년 센서스는 북한당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일제조사 작업이었으며, 북한의 인구추세와 관련해 이제까지 발표된 그 어떤 자료보다도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sup>124)</sup> 그리고 또 그는 UN 등 국제기구가 실시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자료는 북한기근과 관련된 데이터로는 아주 드물게 기근 기간 동안의 지역별 식량사정 차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sup>125)</sup>

박경숙은 북한 중앙통계국이 2009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원제: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를

121)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1998. 5), p. 26.

122)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보고서,” (1997년 9월 30일-1998년 1월 31일), p. 12.

123) 이삼식, “북한 기사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p. 66.

124)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성』, p. 61.

125) 위의 책, p. 77.

토대로 새로운 북한 기근 사망자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2008년 인구센서스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요구로 추진되었으며 인구 동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당국이 협력하여 실시되어 이전 인구자료들과 질적으로 매우 개선된 것이다. 2008년 센서스는 1993년 센서스와 달리 범위와 분류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유엔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집계에서 전산 입력에 이르기까지 정확성을제고하는 방법들을 활용했다. 조사항목 또한 처음부터 유엔권장 방식에 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sup>126)</sup>

마지막으로, 해외의 기관 및 연구자들이 제시한 추정치들은 대체로 북한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기초로 하는 경향성이 보인다. 먼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998년 8월 북한지역을 방문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로 제시한 추정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95~1997년 기간에 연평균 30~80만명이 식량난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추정치가 있고<sup>127)</sup>, 다른 하나는 1995년~1998년 기간에 아사했거나 기아에 의한 질병에 의해 사망한 북한주민들이 90만명~2백40만명에 이르며, 1997년에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는 추정치가 있다.<sup>128)</sup>

비영리단체인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의 소장인 Peter Hyes는 북한을 자주 방문하면서 기근 사망에 관한 다양한 첩보들을 수집하여 1995년~1998년 시기의 아사자 수가 최소 20만~30만명에서 최대 2백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sup>129)</sup> 그리고 존스 홉킨스대학의 공중보건연구소는 중국으로 탈출한 440명의 성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1998년 6월~9월 동안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1994년 중반부터 1998년 중반 시기 동안 그들의 가구 및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난 출생, 사망, 이주 패턴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sup>130)</sup>

이밖에 해외의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제시한 추정치들 중 북한지역을

126) 박경숙, "북한의 인구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pp. 7~8.

127) 이삼식, "북한 기사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p. 65.

128)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n Catastrophe and Its Lesson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January 2002), p. 46.

129) *Ibid.*, p. 21, p. 46.

130) W. C. Robinsons, M. K. Lee, K. Hill,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strospective Study," *The Lancet*, Vol. 354 (July, 1999), p. 291.

직접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여 첩보를 수집한 경우가 아닌 기존의 공개된 첩보들을 활용하여 사망자 수를 추정한 것들이 있다. 먼저,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1998년 연례보고서 북한편에서 1995~1997년 기간 동안 전체 인구 중 총 200만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첩보는 믿을 만한 공식 통계가 아닌 몇몇 민간단체에서 주장한 것들이다. 앤드류 나초스(Andrew Natsios)의 역사는 위에서 언급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제시한 정보를 토대로 자기 평가와 해석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추정치(약245만명~250만명)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Goodkind와 West는 사망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북한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식량난민의 면접조사를 통해 나온 사망률-와 간접적인 자료-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의 사망률과 북한아동의 영양실태조사를 통해 획득-를 활용하여 1995~2000년 시기에 60만명~100만명이 기아로 인해 사망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sup>131)</sup>

Goodkind와 West가 사망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라고 언급한 두 개의 정보원 중 하나는 1993년 북한 센서스에서 언급된 사망자 수를 토대로 추정한 사망률(1995년~1998년 조사사망률은 1000명당 6.5~9.3명)이고, 다른 하나의 정보원은 중국에 건너온 식량 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사망률이다. 그런데 Goodkind와 West가 언급한 식량난민조사는 앞서 살펴본 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구팀들이 1998년 6~9월에 실시한 440명의 면접조사이다.<sup>132)</sup> 따라서 Goodkin와 West는 독자적으로 정보를 개발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Goodkind와 West는 기아사망률에 관한 간접적인 자료로 중국의 대약진운동시기의 사망 모델과 1997년 8월 북한정부의 허락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지역에서 실시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기아사망자 수를 추정하였다.<sup>133)</sup> 따라서 간접적 자료들 역시 이미 공개출처정보에 해당된다.

131) Goodkind and L. West,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June 2001), p. 220.

132) *Ibid.*, pp. 225~227.

133) *Ibid.*, pp. 229~230.

&lt;표 IX-4&gt; 북한 아사자 추정치별 정보 수집의 실태

	추정 기관 또는 개인	수집정보의 유형
남한 정부	국정원 통계청	인간정보&공개출처정보 인간정보&공개출처정보
북한 간부	최수현(외무성 부상) 황장엽(조선노동당 전 비서)	수집경로 파악 안됨 인간정보&공개출처정보
국내 NGO	좋은벗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인간정보 인간정보
국내 연구자	이삼식 이 석 박경숙	공개출처정보 공개출처정보 공개출처정보
해외기관 및 연구자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Peter Hyes 존스홉킨스대학 공중보건연구소 Andrew S. Natsios Goodkind and West	공개출처정보 인간정보 인간정보 인간정보 공개출처정보 공개출처정보

## 나. 분석단계

국정원의 추정치는 정확하게 분석방법 및 분석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월간조선』 9월호 인터뷰에서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학자들이 합동으로 추정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계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대조확인을 통한 평가과정을 거쳐 다양한 첩보들을 종합하는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경우 역시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 정부기관들에 의해 파악된 탈북자 증언, 국제기구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계량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통계청은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 사망자가 1995년부터 대량발생하기 시작해 1997년까지 연간 7만~8만명, 98년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4만명 정도 발생하였으며, 1995~1998년 간 약 27만명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외무성 최수현 부상이 밝힌 아사자 수는 분석방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주장한 아사자 수는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직접 보았다는 당조직의 내부 통계자료와 탈북자 증언과 국내외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망자 관련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최수현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사망자 수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어느 한쪽이 과장되게 확대 또는 축소했을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 기관 및 개인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북한 기근 사망자 추정치들이 존재한다.

국내 민간단체에 의해 제시된 아사자 수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탈북난 민을 면접조사하여 계량적 분석을 통해 추정되었다. 좋은벗들과 ‘우리민 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제시한 아사자 수는 자신들의 면접조사한 경험적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면접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나온 첩보나 대조확인, 북한방문 등의 종합적 분석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아사자가 추정되기까지의 분석 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이삼식은 여러 정보들을 이용하여 네 가지의 가정, 즉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가정I), 귀순자 진술(가정II),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보고서(가정III), 황장엽씨의 주장(가정IV)을 설정하고, 이 추정 결과들을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와 대차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5~1997년 동안 23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sup>134)</sup>

이석은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와 유엔기구의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 북한 인구규모를 추정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1994~2000년 북한기근으로 인해 발생한 ‘총인구손실규모’를 58~112만명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의 공식인구통계에 기초하여 1994~2000년간 북한의 인구손실 규모를 추정한 후, 동일한 추정을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한번 더 반복함으로써 북한기

134) 이삼식, “북한 기사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pp. 65~69.

근의 인구학적 충격의 정도를 최종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 아사자 수를 추정했다.<sup>135)</sup>

박경숙은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와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1993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굶어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34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경제난과 기근으로 북한 인구변동은 출산을 하락, 사망률 증가, 이주자 증가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국외 이주자 크기를 무시한다면 출산율과 사망률 동태의 변화크기에 따른 인구손실은 1993년 이후 약 63만명 정도로, 이중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손실은 29만명이고 사망률 증가에 따른 인구손실은 34만명 정도로 추정하면서 일부 단체에서 제기해 온 200만~300만명 아사 주장은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sup>136)</sup>

위의 이삼식, 이석, 박경숙의 연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첩보들을 비교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계량적 분석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삼식의 경우는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탈북자 증언과 같은 경험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반면에, 이석과 박경숙의 연구는 철저하게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에만 의존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기관 및 연구자들이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사면위원회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제시한 아사자 수의 경우는 분석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존스 홉킨스대학, Natsios, GoodKind와 West의 연구가 제시한 추정치들은 공개출처정보를 토대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먼저, 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구자들은 440명의 북한난민의 면접조사를 통해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난민 가구들에서 나타난 조사망률(crude death rates)이 인구 1000명 당 42.8명이며, 이 사망률은 1993년 북한센서스에서 나타난 1000명 당 5.5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년 평균을 냈을 때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135)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성』, pp. 60~84.

136) 박경숙, “북한의 인구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p. 81.



서 인구 1000명당 131.8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고, 이 가운데 60~6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000당 12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 난민이 3년 기간동안 1000명당 49.8명이 사망한 반면에 여성 난민은 1000명당 35.4명이 사망하여 남성 난민의 희생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난민들 중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조사사망률은 같은 3년 기간 동안 1000명당 43.4명으로 탈북한 난민보다 더 사망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sup>137)</sup>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구자들은 440명의 북한 난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기초로 1995~1997년 시기에 북한주민이 기아로 사망한 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추정치는 중국 지역을 방문하여 북한의 식량난민이라는 표본을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계량적 분석을 통해 북한 전체 기근 사망률을 산출하는 분석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분석한 결과를 다양한 기관들에서 분석된 첩보들과 비교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하려는 종합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연구팀의 경험적 첩보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보고서에서 면접한 난민들의 가족과 친척들에 한정하여 추정한 출생률과 사망률을 제시했을 뿐, 보고서 어디에서도 이 추정한 사망률을 기초로 3년 시기 동안의 전체 북한주민의 아사자 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유일하게, 1993년 센서스에서 밝혀진 공식적인 함경북도 인구(2,060,725명)를 토대로 난민들의 면접조사 결과 추정한 조사사망률(1000명당 40명 사망)에 근거하여 3년 동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약24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을 뿐이다.<sup>1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초스(Natsios)는 그의 저서에서 존슨 홉킨스대학이 발표한 사망률을 적용하여 245~250만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그는 1,900만명의 북한 인구(여기에는 300만명의 평양주민과 120만명의 북한군인이 제외됨)에 존슨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사망률 12.9%를 적용

137) W. C. Robinsons, M. K. Lee, K. Hill,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strospective Study," p. 293.

138) *Ibid.*, p. 294.



시켜 기아로 발생된 사망자수가 245만명이 되고 이 수치는 황장엽이 발표한 사망자수와 근접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도시지역 인구를 1,200만명을 추정했을 때 사망자 수는 약 250만명이 된다고 주장했다.<sup>139)</sup>

그런데 나초스가 그의 저서에서 존슨 홉킨스대학이 발표한 사망률이라고 언급한 12.9%는 앞서 살펴본 존슨 홉킨스대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다. 존슨 홉킨스대학 연구자들이 분석한 1995~1997년 3년 기간의 평균 사망률은 4.3%이고, 12.9%의 사망률을 나타낸 것은 연령층이 60~64세에 해당하는 난민 응답자 집단에 해당된다. 그런데 나초스는 이 고령의 응답자 집단에의 사망률을 전체 인구에 적용하여 사망자 수가 245만명에 이른다고 제시하였다.

Goodkind와 West는 먼저, 1993년 북한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한 사망률과 존슨 홉킨스대학의 연구자들이 440명의 북한 식량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해 추정한 사망률을 가지고 1995년~2000년 시기 동안 기근으로 사망한 수를 23만7천명~260만명이라는 1차 추정치를 산출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2차 분석정보인 중국의 대약진 시기 기근 사망률 모델과 1997년 8월 WFP가 북한지역에서 실시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5년~2000년 기간동안 북한의 기근 사망자 수가 최소 605,458명에서 최대 1,042,021명라고 추정했다.<sup>140)</sup>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Goodkind와 West의 추정치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 활용하여 북한의 상황논리에 기초한 내재적 접근과 계량적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활용, 분석한 자료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종합적 평가를 했다거나 대조확인(cross-checking)을 한다거나 또는 연구자들이 직접 북한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평가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아사자 수를 분석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정보의 분석 실태를 종합해보면, 분류, 평가, 분석, 종합, 해석과 같은 체계적인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139) 나초스,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pp. 287~288.

140) Goodkind and West,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 pp. 230~232.

첩보들을 가지고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석의 단계에서 분석 주체들의 이해관계나 목적에 따라 아사자의 수가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과소평가되기도 하는 경향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 기근 사망자수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 NGO들이 제시한 추정치들은 대체로 추정치가 크고, 북한 정치인들이 제시한 추정치들은 그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또한 개인의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추정했느냐에 따라 다른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로 해외의 개인연구자들의 추정치는 큰 반면에, 국내 연구자들의 추정치는 작은 경향을 보인다.

#### 다. 활용단계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분석단계를 거쳐 생산된 북한의 아사자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표 IX-5>에서 보이듯, 북한 아사자 정보는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시기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기아 또는 아사, 영양실조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 분석해 놓은 것을 정책결정이나 연구, 대북사업 활동에 참고하는데 활용하는 기본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 분석된 북한 아사자 정보(이삼식, 이석, 박경숙, Peter Hyes, 존스 홉킨스 대학, Natsios, Goodkind&West의 사례)는 시의성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시의적 성격이 강한 현용정보, 경보정보, 예측정보보다는 기본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정부기관이나 NGO가 제시한 북한 아사자 정보의 경우 대체로 최근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현용정보의 성격과 첩보대상의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보정보로 활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NGO의 경우 북한 아사자 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파악해야 대북식량지원 또는 긴급구호사업을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가와 같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표 IX-5>에서 보이듯 국정원, 북한

외무성, 좋은벗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북한 아사자 정보는 기본정보 외에도 현용정보, 경보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사회정보 체계의 사례분석에서 거론된 다양한 북한 아사자 정보 중 미래에 북한에서 얼마나 더 많은 아사자가 생길 것이고 예측, 판단해주는 예측정보까지 활용될 수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보 활용의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북한 아사자 정보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 즉, 1990년대 중반 시기에 식량난으로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죽었는가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정보로 발전시키려는 데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아사자 정보가 예측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규모 아사자를 발생시킨 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X-5> 북한 아사자 정보의 용도별 활용 실태

	추정 기관 또는 개인	정보 활용 실태
남한 정부	국정원 통계청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북한 간부	최수현(외무성 부상) 황장엽(조선노동당 전 비서)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국내 NGO	좋은벗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국내 연구자	이삼식 이 석 박경숙	기본정보 기본정보 기본정보
해외 기관 및 연구자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Peter Hyes 존스홉킨스대학 공중보건연구소 Andrew S. Natsios Goodkind and West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기본정보 기본정보 기본정보 기본정보

다른 한편, 북한 아사자 정보의 활용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 중 하나는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 ‘정보의 유회’ 또는 ‘정보의 환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새로운 수집방법과 분석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가 재생산되거나 기존의 정보가 새로운 첩보들이나 분석에 의해 검증,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회 또는 환류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북한 아사자 정보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는 황장엽의 증언, UNICEF나 WFP와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존슨 홉킨스대학의 면접조사 결과, 일부 NGO의 탈북난민 조사 보고서 등이 유회 또는 환류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석은 객관적으로 획득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정이나 편향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41)</sup> 여기서 편향된 자료는 황장엽씨의 증언과 같은 특정인물의 증언이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작성한 북한내부통계자료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북한아사자 정보 활용 및 공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점 중의 하나는 정부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민간의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표 IX-3>에서도 나타나듯, 대체로 남한 정부기관이든 북한 정부기관이든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북한 아사자의 수는 국내 민간단체나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추정치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민간단체들은 정부기관이 발표한 북한 아사자 정보가 ‘정치화’되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1998년 10월 북한 주민 아사자 수가 최소 3백만명이라고 발표해 국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좋은벗들은 1999년 8월 통계청이 북한 아사자 수가 27만명이라고 발표하자 “정부가 북한 식량난 실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아사자 수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142)</sup>

반대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수백만명의 아사 주장 역시 과장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좋은벗들의 비판에 대해 “좋은벗들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아

141)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성』, p. 194.

142) “북한 아사자 수의 진실 찾기”, 『말』 (1999년 10월호), p. 101.

사자들의 숫자를 추정하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 온 ‘식량난민’으로 그들의 증언을 북한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정확한 통계분석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통계청은 “통계조사에서 표본집단의 대표성이 핵심”이라며, “북한에서 식량배급 상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은 산간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경도 지역인데, 좋은벗들의 조사가 주로 이들 지역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sup>143)</sup> 오히려 통일부, 국정원, 통계청 등의 정부기관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수백만명의 아사설은 “북한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주관적 분석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sup>144)</sup>

또한 북한 식량지원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 실정을 파악해 온 세계식량계획(WFP)와 같은 국제기구 관계자 역시 “북한 식량사정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수백만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sup>145)</sup>

결과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 아사자 정보를 둘러싼 논쟁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을 통해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검증보다는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여, 협력적인 분석 과정 및 정보의 공유 과정이 없이, 정치화된 해석의 문제를 갖고 있다.

## 5.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가. 정보순환 절차에 따른 문제점

#### (1) 수집단계

(가) 정보수집자의 수집 분야(항목)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이해 부족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내지 이해가 없이 공개출처정보,

143) 위의 글, p. 102.

144) 위의 글, p. 103.

145) 위의 글, p. 103.

또는 비밀출처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는 정보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은 자료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정보수집 단계에서 정보수요자가 필요한 수집분야(항목)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및 이해가 없이 정보출처에 접근하는 것은 정보왜곡 및 정보실패를 초래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개출처보다도 비밀출처정보 수집 활동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비정부기구(INGOs)의 중국 현장조사에서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6)</sup> 이를 테면 INGOs의 관계자들은 북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 또는 ‘방문자’들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정보수요자가 북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 내지 이해가 없이 공개출처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개출처정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 또는 극소수의 탈북자 증언을 통한 정보이므로 객관성 및 정확성이 매우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기본 지식 내지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한 정보로서 수집하게 되면 정보왜곡 및 정보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간행물과 영상물을 통한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사전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면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간행물과 영상물을 사전 지식 없이 보게 되면 정보왜곡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정보왜곡 및 정보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생산, 활용하게 되면 이를 통해 북한 사회·문화 실상을 파악, 이해하려는 정보수요자, 또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북한의 실상을 인식하게 하는 증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 (나) 과도한 비용문제

정보수집자들이 예외 없이 토로하는 것은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보수집자가 개인일 경우에 더욱 그러

146)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하며, 특히 중국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보다 심각해진다. 예를 들면 중국 현장조사를 할 때에 정보수집 과정에서 정보제공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급박하게 피신처를 찾는 경우에 정보수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추가되어 비용부담이 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수집자들에 의하면 중국 현장조사에서 ‘방문자’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지만 특히 개인 정보수집자가 이들을 만나 정보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방문자’들은 남한 사람 만나지 말 것, 교회사람 만나지 말 것 등을 교육받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중국 방문 목적은 경제적 이득에 있으며, 특히 중국비자 발급을 위해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대한 금전적 대가 여부에 따라 정보수집자를 만나기도 한다. 따라서 ‘방문자’를 만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가들이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장 정보수집가들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관심 및 동기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며, 따라서 활동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특히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을 하는 학계의 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현장정보 수집 활동의 제약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수집력 약화를 초래하며, 이로써 다른 관련 국가들과의 정보 경쟁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문제는 중국내 조선족 학자(교수)들에게도 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 북한 연구·조사를 위해 만난 북한주민들이 연구·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경제적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더 이상의 관계유지가 어려웠다고 한다. 국내의 언론기관들 가운데는 북한정보 관련 센터(부서)를 설치, 운영하다가 외부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해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그러한 언론기관은 정보수집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보수집에만 집중할 경우, 정보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며 이로써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다.<sup>147)</sup>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이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설문·면접 사례비도 높아지는 추세인바, 이도 역시 정보수집자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다) 실정법(국가보안법) 위반문제와 중국 공안의 단속에 따른 위험부담  
중국현장조사를 하는 정보수집자들이 중국에서 탈북자, 또는 ‘방문자’를 만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정법(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물론 정보수집자들은 사전, 아니면 사후에 당국에 보고함으로써 법적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자들은 믿을만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특히 ‘방문자’ 같은 정보제공자들과는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실정법 위반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 연구자들은 탈북자, ‘방문자’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입수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정법 위반문제는 중국, 또는 북한에서 북한 간행물 및 영상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당국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함으로써 문제발생을 막을 수는 있다.

중국현장조사를 하는 정보수집자들에게는 중국 공안의 단속에 따른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 현장조사중에 예기치 않은 중국 공안의 단속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신변안전 문제, 중국 공항에서의 공안에 의한 여권 검사 등으로 인해 정보수집자들이 갖는 위험부담은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 민주화문제, 빈부격차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더욱 크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에 있어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수집과 관련해 중국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 한 개인 연구자는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현장조사 정보수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중 관계에 갈등 내지 마찰이 생기면 정보수집 활동에도 지장이 있는바, 때를 맞추어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148)</sup>

147)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148)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 (라) 국내·외 탈북자를 통한 정보수집의 문제점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 사회·문화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은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 내 탈북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대북사업, 선교사업 등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사회·문화 실상을 축소, 또는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며 같은 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증언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부 탈북자들은 자신이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하였으며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 말하지만 외모와 행동, 전달하는 정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sup>149)</sup> 또한 탈북자들은 같은 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와의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또는 면접조사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의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남한 사회에 재정착한 탈북자들의 대표성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식량난이 극심했던 동북부 지역 출신이며 탈북을 결행할 만큼 생활환경 및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했다. 따라서 동북부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북한 사회·문화 실상을 근거로 하여 평양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의 사회·문화 실태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실제에 있어서도 평양에서 살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평양 주민과 국경지역 주민의 증언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평양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만이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50)</sup> 중국에서 대북사업 및 선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평양은 아주 특별한 곳이며 동북부

149) 위의 글.

150) 북한이탈주민 ○○○, 2010. 7. 30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0. 6. 8 면접.

지역의 주민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둘째, ‘탈북자’라는 신분에 따른 특수성이다. 어떠한 이유, 어떠한 동기에서든 살던 곳을 몰래 떠난 탈북자들은 사선을 넘는 탈북 체험으로 인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는 다소 다른 심리 내지 정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전하는 북한 사회·문화 실상은 부분적으로 과장,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하나원 교육과 남한사회 재정착 이후의 학습으로 인한 증언의 편파성 내지 사실의 가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북한 체제와 사회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의식이 형성된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되면서 보다 더 강화되며, 이로 인해 이들의 증언과 관련해 편파성, 또는 사실의 가감이라는 지적이 따르기도 한다.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남한에서의 학습’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마) ‘방문자’를 통한 정보수집의 문제점

‘방문자’를 통한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적극 감안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방문자’들의 정보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대북사업자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라고 지적한다.<sup>151)</sup> 이는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통신수단의 이용이 제약적이며 내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게 하는 사회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같은 일, 같은 사안에 대해 ‘방문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뿐만 아니라 ‘방문자’들도 처음 중국에 나오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증언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진위 판단을 위해 정보의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sup>152)</sup> 이중정보원의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정보수집자에 따르면 10여 차례 한 ‘방문자’를 만나면서 그가 이중정보원임을 감지하였다고 한다. ‘방문자’는 자신이 이중정보원임을 밝힌 적은 없으나 ‘방문자’가 한국정서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남한

151) ○○○(대북사업자), 2010. 4. 22, 중국 단둥에서 면담.

152)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듯 보였고, 북한식당 종업원이 ‘방문자’를 환영하는 태도가 다른 손님들에 대한 태도와 달랐는바, 그가 이중정보원일 가능성이 낮지 않음을 감지했다는 것이다.<sup>153)</sup> 이 외에도 ‘방문자’를 통해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기만정보를 유포하는 사례, ‘방문자’와의 만남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조선족(브로커)들 가운데 금전 사기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사례 등도 ‘방문자’를 통한 정보수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바) 방북자를 통한 정보수집의 문제점

공개출처정보 수집 방법의 하나인 방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 또는 북한방문기 역시 감안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다른 아닌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감시와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방북자의 제한적인 방북 활동에 기인한다.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일정에 따라 방북자들이 특정지역 방문, 특정행사 진행 및 참석, 특정인물 만남 등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되면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있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개출처정보의 하나인 내·외국인과 해외동포의 북한 방문기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언론인, 작가, 학자, 종교인, 기업인, 정치인 등 다양한 신분의 내·외국인과 해외동포들의 북한 방문기는 대체적으로 내용상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시각과 논리로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 평가한다. 다른 한 부류는 탈이념화된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 평가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제각기 나름대로의 시각과 논리를 견지하면서 자신들의 관찰과 판단이 객관적임을 강조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상반된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평가로 인해 그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해 북한 사회·문화를 인식, 이해하려는 정보수요자들은 혼란을 겪게 되며 편향된, 또는 왜곡된 정보를 수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53) ○○○(대북사업자), 2010. 4. 24 중국 심양에서 면담.

(사)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한 정보수집의 문제점

북한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사회·문화 관련 비공개정보를 입수하는 정보수집자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제약은 내부 정보원의 지역적 편중에서 비롯된다. 내부 정보원의 대부분이 양강도, 함경북도 등 접경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정보 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정보원의 대부분이 동북부 접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주로 탈북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동북부 지역 출신들과의 연고로 정보제공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또한 접경지역에 사는 내부 정보원들은 북한당국의 단속과 통제로 인해 내륙으로의 지역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실태 및 동향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평양을 비롯한 내륙의 주요 대도시에 정보원을 두고 비밀출처로 활용하는 정보수집자들이 없지는 않으나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 정보원을 통한 정보수집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내부 정보원이 변동되는 경우에 발생한다.<sup>154)</sup> 이는 내부 정보원이 나름대로의 ‘정보라인’을 가지고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정보라인’의 책임자가 바뀌면 구성원들도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원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정보수집자들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얻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일 가능성이 낮지 않으며 북한 사회·문화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고급정보를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당국의 단속 및 통제로 인해 내부 정보원들은 신변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지 않으며, 내부 정보원의 신변 보호문제로 인해 정보수집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를 테면 자주 단속에 걸리는 내부 정보원은 정보수집자가 탈락시킴으로써 신변 보호를 꾀하기 때문에 비공개정보 수집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부 정보원의 기본 통신 수단은 휴대전화인바, 통신 수단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입수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54) ○○○(대북사업자), 2010. 4. 22, 중국 단둥에서 면담.

## (아) 기술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 생산의 부족

북한 사회·문화정보는 주로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며 거의 모두 인간정보 수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무엇보다도 기술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생산에 있어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기술정보수집 및 정보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원 등을 충당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시설, 인원 등의 개선과 이에 필요한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집된 기술정보를 해석·판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문제도 기술정보 수집 활동 및 정보생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정보수집 주로 비밀출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며 기술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보수집 행위자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기관은 북한 사회·문화 정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북간 정치·경제·군사·외교 현안이나 정책 관련 정보에 더 관심이 있으며 정보수집에 적극적이다.

## (자) 국가기관의 북한 사회·문화 정보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소극적 정보수집 활동

한 정보수집자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의 북한 사회·문화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며, 따라서 개인적으로 입수한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관련 사이트나 담당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sup>155)</sup> 이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이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와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정보에 중점을 둔 정보수집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 사실상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에 있어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정보활동도 소극적이다. 국가기관은 민간단체·기관의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 활동 및 정보 생산에 대해 관심이

155)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크지 않으며 회의적·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 북한 사회·문화 정보 관련자(기관·단체)들의 서로에 대한 불신  
 북한 사회·문화 정보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정보 수집 및 분석, 활용을 둘러싸고 서로에 대해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정보수집자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 관련 기관·단체들의 정보, 중국 내 탈북자와 국내 입국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정보 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이들은 특히 국내 언론매체의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 및 분석,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과장된 측면도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말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민심 동향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그러하며 특정 방송의 경우에는 60%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156)</sup> 이와 관련해 한 조선족 학자도 한국 내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에 따른 내부 혼란이 과장되어 알려진 것 같다고 지적한바 있다.<sup>157)</sup> 중국에서 활동하는 정보수집자들은 특히 북한 관련 통계치에 문제가 많으며 굶주림과 관련된 수치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sup>158)</sup> 중국 현장 조사를 하는 전문가, 연구자 등도 언론매체에 대해 유사한 지적을 한다. 예를 들면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 정치성·사상성이 없는 문예작품들이 가끔 발표되는 데 대한 한국 언론의 평가는 북한의 변화를 과장하는 편이며 이와 같은 정보의 과장 내지 왜곡으로 인해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편견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sup>159)</sup> 또한 중국을 방문하여 사업대상 북한인들을 만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 대북사업자는 국내 언론에서 유통되는 북한 관련 정보는 50%이상 틀린 것이라고도 지적한다.<sup>160)</sup> 국내 언론매체들이 북한의 일부지역(동북부)만을 근거로 하여 북한 상황을

156) ○○○(대북사업자), 2010. 4. 24, 중국 심양에서 면담.

157) ○○○(학계), 2010. 4. 24, 중국 심양에서 면담.

158) ○○○(대북사업자), 2010. 4. 22, 중국 단둥에서 면담; ○○○(대북사업자), 2010. 4. 24, 중국 심양에서 면담.

159) ○○○(학계),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160)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일반화하는 무리를 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현장조사를 통한 북한 사회·문화정보 수집자들에 따르면 중국 내 대북사업자, 북한선교사 등 민간활동가와 북한에서 온 ‘방문자’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내 조선족 학자들마다, 선교사업 관계자들마다, 한인회 관계자들마다, 그리고 대북사업자들마다 특정한 일 내지 사안에 대한 정보가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내 NGO들의 북한 사회·문화 관련 정보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NGO들이 중국에 온 탈북자를 면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듣는데 자신들의 관심분야만을 자세히 듣고 사회·문화 관련 정보는 대강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1)</sup>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보수집자가 현장정보를 각색해서 제공하거나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말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sup>162)</sup>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정보수집자들은 국가기관이나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며 주로 자신들이 북한방문, 또는 중국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존한다. 또한 이들은 관련 보고서, 논문 등을 발표하는 학계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이는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의 성향, 또는 의도에 따라 생자료(raw data)가 가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이는 곧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정보를 수집 및 분석, 활용하는 편향된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도 정보의 수집·분석에 있어 특히 정보수집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편차로 인해 객관적인 정보 생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대북사업자는 학계에서 발표되는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서 북한 사회·문화정보를 수집하기는 하나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갖게 되어 북측의 사업상대와 소통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sup>163)</sup>

161)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162) ○○○(대북사업자), 2010. 4. 24 중국 심양에서 면담.

163)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27).



다양한 공개출처들 가운데 최근 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검증,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도 인터넷상에는 유언비어, 의도적으로 생산된 기만 정보 및 허위 정보, 역 정보 등이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생자료를 이념적으로 가공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 (2) 분석단계

### (가) 전문역량과 인프라의 부족

북한정보체계의 분석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과 인프라의 부족이다. 특히,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분석관이나 전문가가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수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분석 인프라의 부족은 정부기관이나 학술기관 보다 민간단체의 경우에 가장 절실하다. 대체로 민간단체의 경우 조직 내에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팀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외부의 학술연구자나 북한전문가들에게 정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 인프라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정보실패를 초래한다. 분석단계에서 정보실패로 인해 어렵게 수집된 많은 첩보들이 폐기처분될 수 있다. 정보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보예측 및 판단 노력이 있어야 하는 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석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보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분석관의 자질 향상과 수준 높은 분석관의 충원이다.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이나 국가와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을 가진 노(老), 장(壯), 청(靑) 분석관의 균형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과거에는 축적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학술기관에 그러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164)</sup>

164) ○○○(국가기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7.20).



또한 충원된 분석관들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충분히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학술, 언론, 민간단체 등에서 분석된 북한정보가 기술화파적 시각의 기능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은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기관만이 보유하고 있고 여타 다른 기관들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독점할 뿐 민간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협력적 분석 네트워크의 부재

분석단계에서 협력적 분석네트워크가 부재한 점 역시 문제이다. 분석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정보실패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적 분석네트워크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열악한 분석 인프라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분석을 해낼 수 있다. 현재 협력적 분석네트워크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잘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에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부기관에서는 정책결정자와 분석관 간의 상호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정책결정자와 분석관 간 정례적인 피드백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술기관들 간에도, 언론기관들 간에도, 민간단체들 간에도 협력적 분석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북한정보체계에서 협력적 분석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의 정보분석국의 경우 10명 정도의 분석관이 북한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각자 5명 가량의 자문관을 두고 활용하고 있다. 대북지원NGO의 경우, ‘북민협’(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을 통하여 대북지원사업의 상호 협력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학술기관에서는 학제적 연구나 정부기관과의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협력적 분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정보에 대한 독점 경향 때문에 협력보다는 배제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협력적 분석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구의 조직개편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분석조직은 개방적이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 자체의 수집과 분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분석방법과 분석틀의 다양화 필요

북한정보의 분석방법과 분석틀이 더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수집된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위장, 맥락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개념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계량적 분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분류 단계에서 수집된 수많은 첩보들이 DB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부의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정보의 DB구축 목표는 아이폰으로 김정일을 치면 관련 정보가 나오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들은 노드시스템-관계성 분석, 시맨틱 웹-인공지능 등의 수준까지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있다.<sup>165)</sup>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술기관과 민간단체 등 대부분의 민간기관에서 북한 첩보의 DB구축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개인 연구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소요비용을 조달할 재정적 능력의 부족이다.

이밖에도 개인연구가나 분석관들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은 정보분석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거나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험이 적은 젊은 분석관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 정보의 해석에서 관료화, 정치화 지양

마지막으로, 정보의 해석에서 관료화, 정치화 현상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기관에서 자주 발견된다. 정부기관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대북포용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보 해

165) 위의 글.

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 정부에는 대북강경정책을 정당화하는 정보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언론기관도 마찬가지로이다. 동일한 첩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 정권에 따라 북한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언론기관마다 다르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활동 지향점이나 목적,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정보 해석이나 분석의 초점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대북지원NGO들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부족 수준이나 아사 상태를 다른 기관들보다 더 심각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탈북자 중심의 민간단체들의 경우는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을 더 부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 (3) 활용단계

#### (가) 분석된 정보의 공유 문제

사회문화 정보의 활용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석된 정보가 잘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보기관과 정부내 타부처간의 정보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협력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요구로 각 기관의 많은 북한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배포되는 정보는 대체로 희소성이 없다. 고급 정보 또는 희소 정보일수록 매우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유통된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은 가장 희소적인 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비밀보호라는 명분으로 외부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 학술기관의 경우도 일부 고급 정보는 유료화하거나 일정한 멤버십을 갖춘 회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정보의 속성상 많이 공개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는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적 노하우를 가진

정보소비자들의 검증으로 인해 정보실패 또는 왜곡된 정보의 환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미국에서처럼 정부정보보호법을 만들고 정보의 경중에 따라 공유의 등급을 세분화하면 유출대서는 안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다.

(나)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다음으로 정보의 활용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본 연구팀이 실시한 북한정보체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국내에 활용되거나 배포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산분석을 해 본 결과 신뢰성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 활용되는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정부와 학계, 그리고 NGO에서 활용되는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유의확률 0.003  $p < 0.01$ , 학계-유의확률 0.017  $p < 0.05$ , NGO-유의확률 0.005  $p < 0.01$ ). 반면에, 언론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정보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표기한다. 분석관은 판단근거(경험, 정보 등)와 모르는 내용(gap) 등을 명시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보를 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표시해줘야 한다.<sup>166)</sup> 특히, 왜곡된 첩보자료를 비판적 여과없이 수용하거나 적용했을 때 심각한 정보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비록 정보분석의 예측과 판단이 정확했더라도 정보소비자에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정책수립에 반영되지 않을 때도 발생한다. 배포에 따른 정보실패는 제도의 미비로 배포 채널상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적시에 배포되지 못해 시의성을 놓침으

166) 위의 글.

로써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정보분석관과 정보소비자 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분석관의 보고서가 정보소비자에게 적시에 배포,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북한정보의 유희 현상이 정보 활용 단계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 나. 개선방향

### (1) 수집 단계

#### (가) 민간단체·기관의 정보수집 능력 배양 및 강화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은 대부분 민간단체·기관, 또는 개인 정보수요자 내지 정보수집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기관보다 민간이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을 주도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사회·문화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정치적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정치성이 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도 정보수집자의 목표 접근 및 정보 입수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신변안전의 위험부담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가장 비중 있게 수집하고 있는 한 관련 단체도 사회·문화 정보가 가장 얻기 쉬운 정보인바, 이는 북한 당국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내용이 비정치적이어서 내부 정보원이 극한 처벌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67)</sup> 민간이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을 주도하고 있음은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 여력의 한계에서도 연유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주로 국가 안보와 이익 실현의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 차원에서 생산, 활용되는 국가정보를 다룬다고 할 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역시 북한 사회·문화보다는 정치, 군사 등의 정보 수집에 치중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보 수집에 있어 사회·문화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문화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어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도 여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67)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그러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의의 및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사회·문화 정보 수집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정보수집자를 포함한 민간단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 배양 및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5장의 ‘문제점’에서 논하였듯이 국가적 지원체계는 특히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을 하는 민간인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수집 비용, 신변 안전, 실정법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간 정보수집자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는 정보 수집력 및 정보 경쟁력 강화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나)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비용문제 개선 모색

북한의 현지조사나 북한주민과의 자유로운 접촉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 사회문화 첩보를 수집하는 비용은 다른 지역의 첩보를 수집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북한 공간(公刊)자료의 경우는 대부분 체제선전용 목적 하에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보의 왜곡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활동 역시 ‘표본의 대표성’ 문제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탈북자 조사에서 경쟁구조가 형성되면서 조사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앞의 두 수집 경로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정보수집가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현장조사나 북한 지역의 방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수집방법은 과도한 비용부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문화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비용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수집된 첩보 활용에 대한 정보수요자의 목적이 일정하게 달성된 후에는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다) 수집 경로의 제도적 개방

북한 사회·문화정보 실태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 중 상당수는 수집 경로에 대한 폐쇄성 때문에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수집 경로를 상당 부분 제약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첩보에 대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가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험부담을 안아야 한다. 특히 북한 내부 정보원이나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방문자’를 통한 첩보 수집은 북한당국의 단속과 통제뿐만 아니라 남한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폐쇄성은 첩보 수집에서 절차적 비용을 그만큼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 실태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기술 정보의 수집 경우 역시 장비, 시설, 인원 등을 충당하는 데 비용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특수 장비를 갖춰 첩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키고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적 절차나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 (라) 수집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 지식 함양 및 이해를 통한 수집활동

북한 사회·문화 정보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이해가 없이 수집 대상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정보 왜곡 내지 정보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따라서 정보수집자는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항목)을 포함하여 북한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전 지식 내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공개출처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기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밀출처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첩보의 희소성을 유지하려는 것 때문에 검증절차가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보수요자가 첩보의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비밀출처 정보수요자는 그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집 대상(항목)에 따라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수집자들은 북한 사회 및 체제 전반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 및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보편화되어 가는 방법의 하나인 북한이탈주



민으로부터의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설문·면접대상인 북한 이탈주민, 즉 ‘탈북자’라는 신분에 따른 특수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필요하며 설문·면접조사에 있어서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개출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수집자가 이념적 편향, 또는 편견 내지 선입관을 배제하고 수집 대상(항목)을 객관적으로 파악,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정보수집 행위자들의 상호 불신 지양

정보수집자들이 수집된 정보에 대해 서로 근거 없는 부정적 평가를 하거나 거짓 정보라고 단정 짓는 등 상호 불신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는 정보수요자들을 포함한 일반대중들 사이에 북한 사회·문화 정보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자의 능력 자체를 크게 폄하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수요자 내지 정보수집자들의 이념 및 성향, 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생자료(raw data)가 다소 가공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보를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거짓정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하여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상호 보완적 내지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보 수집 및 활용의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중국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수집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인 ‘방문자’, 또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인 대북사업자 및 선교사들과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널 구축을 통한 정보 수집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정보수집자들이 상호 불신을 지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기술정보 수집 활동 확대, 강화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거의 모두가 인간정보 수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기술정보 수집 활동 및 정보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관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 수집 및 정보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수요자 및 정보수집자들은 공개출처 정보보다는 비밀출처 정보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를 하는바, 이들은 기술정보 수집을 통한 비밀출처 정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기술정보수집 및 정보생산은 관련 장비, 시설, 인원 등의 개선과 이에 필요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기술정보수집이 가능한 정보수집 행위자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민간인 정보수요자 내지 정보수집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회·문화 정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분석단계

### (가) 체계적 분석 매뉴얼 구축

분석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분석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과정은 세부적으로 분류, 평가, 분석, 종합, 해석 단계를 거치지만, 앞서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부분의 정보들은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은 채 단편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분류단계에서 수집된 첩보를 개념적, 기능적으로 분류하면서 정보수요자는 수집된 첩보가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분류된 첩보는 다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대조확인 등의 평가단계를 거침으로써 첩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혹은 첩보에 오류는 없는지를 평가, 검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보분석자는 평가된 첩보를 어떤 이론적 시각에 따라 어떤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의도한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정보들은 분석작업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초기 분석설계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나 분석틀 등을 마련하려는

데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또한 분석방법에서도 자료형 분석과 개념형 분석 그리고 계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 등이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석방법에 편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 분야에서는 자료형 분석방법과 질적 분석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설령 분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종합단계와 해석단계에서 정보수요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목적성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정보실패 또는 정보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요자는 최대한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수요자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종합단계와 해석단계에서 정보의 오류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다음으로 분석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인적 인프라 차원에서 북한 사회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민간 모두 관심도 저조하다. 또한 북한의 사회문화 정보는 정치, 군사, 경제의 하위 정보 수준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전문 분석관을 두기보다는 정치, 군사, 경제 정보를 다루는 분석관이 분석의 영역을 확장하여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 사회문화 정보 분야에서도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정보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는 비용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의 협조체계를 갖추거나 민간 내부에서도 공동 투자, 공동 이용, 공동관리 등의 원칙하에 집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 활용단계

#### (가) 정보의 개방적 공유체계로 전환

정보의 활용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폐쇄적인 공유체계를 개방적인 공유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북한정보를 DB화하여 활용의 목적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공유를 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공공목적의 북한정보의 DB체계가 구축된다면 같은 대상의 첩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중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수요자들에 의해 기존 정보가 검증되기 때문에 정보의 실패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정보에 대한 ‘사후 책임’ 노력

다음으로, 공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왜곡된 정보의 환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자기 정보에 대한 ‘사후책임’을 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활용되거나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이후에 새로 수집된 첩보나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정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기존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추후라도 시정하는 책임성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북한정보 체계의 현실은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가 팽배하다. 특히, 가장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고 가장 우월한 분석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정보의 ‘사후책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잘못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 잡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다) 현용정보·경보정보·예측정보의 기능 강화

마지막으로, 정보의 활용 차원에서 현용정보, 경보정보, 예측정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사회문화 정보는 대체로 기본정보의 기능에서 머물고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수립이나 연구 및 사업 활동 등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용정보와 경보정보의 기능까지 확보해야 한다. 특히, 날로 북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북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 판단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측정보의 기능을 갖춘 정보의 생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제10장

## 북한 인권정보체계 실태조사



# 제10장

## 북한 인권정보체계 실태조사

### 1. 문제제기

북한인권정보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말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회 국제인권위원회,<sup>168)</sup> 국제사면위원회<sup>169)</sup> 등 국제인권단체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들 인권단체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공개처형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고,<sup>170)</sup> 1997년<sup>171)</sup>과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인권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지속적으로 채택되었으며,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관련 활동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인권압력을 강화하였다.

168)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169) 1988년 12월 아시아워치(현 휴먼라이트워치/아시아)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을 발간했고 1989년 국제사면위원회(AI)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김병로, “기존 북한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소,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2008.9; AI는 1983년부터 연례인권보고서에 북한을 포함하여 왔으며, 1992년 러시아연방 내 북한 벌목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Concerns in Europe: May 1992 – October 1992, December 1992, AI Index: EUR 01/04/92 1993년에는 평양에서 일어난 편집장으로 일하다 1964년 10월 7일 ‘간첩’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1990년 말까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시바타 고조와 부인(신성숙)과 3자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North Korea: Prisoners of conscience: the Shibata family, 30 September 1993, ASA 24/004/1993.

170) North Korea: Prisoners of conscience: the Shibata family, 30 September 1993, ASA 24/004/1993;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3 October 1993 ASA 24/003/1993; North Korea: New information about political prisoners, 31 May 1994, ASA 24/005/1994.

171) 인권소위 전문위원 가운데 미국의 와이스브로트, 프랑스의 주아이에네, 벨기에의 보쉬, 그리스의 다예스 등 7명의 전문위원이 공동발의하여 13:9(기권 3)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국가 및 국내적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에 관한 유엔결의안(결의안 1997/22)을 상기하면서 국제적으로 악명높은 인권유린국가 리스트(결의안 1997/33)에 북한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환시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관리소 내에 대규모 인원을 구금함으로써 심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일차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해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보장, 인권이 사회 정기보고서 제출 등 4개항의 대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김병로, 위의 글, p. 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1995년 이전까지는 북한 내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남북 간 체제 경쟁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개인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도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구체적인 인권침해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정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 들어 러시아지역 별목노동자 및 동구권 유학생들의 탈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북한인권정보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 및 탈북자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중국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면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의 방북 및 상주지원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한적이거나 북한에 대한 정보획득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공론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국무부 등을 통해 북한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면서, 북한인권정보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내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조직들이 설치되었고, 북한인권정보의 범위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는 북한인권관련 국내외적 관심의 제고로 북한인권정보 관련 활동주체들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북한인권정보관련 수집, 분석,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북한인권정보체계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단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전략은 비난 및 압력, 포용 및 협력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전략들은 특정국 내의 구체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유엔 및 국제기구들은 이미 인권을 주요한 원칙으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도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인권분야의 향상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북한 내 인권침해 양태에 대한 정보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북한인권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 가. 북한인권정보의 개념 및 특징

북한인권정보는 북한정보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정보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권리침해양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권리침해가 북한인권정보의 범주로 규정될 수 있다.<sup>172)</sup> 따라서 북한당국의 사회통제로 인

172) 국제인권규약에 의하면 자유권 규약(1966년)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노예상태 및 강제노동 금지, 자유적 체포 및 구금 금지, 거주 이전 및 주거 선택의 자유,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 형벌의 소급적용 금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공무 참여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회권 규약(1966년)은 근로권, 노조결성 및 가입의 권리,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의 권리, 문화생활 영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자결권, 발전권, 문화적 유산 존중, 인도주의적 원조, 평화권 등이 3세대 인권 범주로 간주된다. 서보혁, 『북한인권』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41~42.



한 권리침해의 경우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여행증제도, 시장단속, 검열제도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경우에는 식량에 대한 접근권, 사회보장권 등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북한의 경제, 사회문화 분야 정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정보는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나, 다만 개인의 권리침해의 관점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국가의 인권정보는 국제사회의 인권규약에 기반하여 검토되어 왔으며, 북한인권의 경우에도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협약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sup>173)</sup> 이 밖에도 고문철폐, 강제구금 및 실종, 인신매매 등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이들 협약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침해실태에 대한 정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는 다른 북한정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인권정보는 일반적인 북한정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분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지체되었으나, 최근 들어 관심도가 크게 제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는 주로 북한당국에 의한 주민들의 권리침해로 규정될 수 있으나, 식량난 이후 북한의 기본적인 사회체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권리악화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정보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정보와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라는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정보는 북한 주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정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북한정보와 차별성을 갖는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개념

173) 이는 북한이 가입한 협약들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논의할 때 주로 논의되는 근거규약이다.

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침해도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정보는 북한사회전반의 정보와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정보와는 달리 피해사건 및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도 정보수집이 주로 피해자의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북한정보의 정보 신뢰성 교차확인 자체의 한계가 다른 북한정보 분야 보다 크다는 점이다.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정보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있으나, 특정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정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교차확인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구류시설에서 조사과정에 일어난 인권침해 등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황자체를 목격한 다른 증언자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나. 주요 세부분야

### (1) 자유권

#### (가) 공개처형

북한인권정보 중 가장 관심 사안중의 하나는 공개처형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공개적으로 개인을 처형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사회일탈범죄가 급증하면서,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을 강화하여 왔다. 즉 시범적인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는 인권적 차원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강조하여 왔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처형은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인권정보와 달리 공개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목격한 개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비교적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개처형 정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처형장소, 처형시기, 처형절차, 처형죄목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정치범수용소

북한정권이 정치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도 주요한 인권사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 정치범 수용소 내 수용규모, 폐쇄된 수용소의 명칭 및 위치, 폐쇄 배경, 정치범 처벌 절차, 정치범 석방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개인의 구체적인 신상 및 죄목 등도 주요한 정보수집 항목이다.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는 소수의 수감자 본인, 수감자의 가족, 수용소 내 관리인력 등의 증언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수용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수감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규정할 뿐이다.

#### (다)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고문·구타)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로서 자의적인 구금은 북한 인권 정보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다.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로서 영장 없는 구류장 수감, 구류장 내 규제 및 가혹행위 등이 있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문, 구타, 몸수색,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이다.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침해시기, 침해 장소, 침해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위부 구류장, 보안서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북한정권이 활용하고 있는 구금시설의 종류 및 위치, 규모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인권정보이다. 증가하는 사회일탈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들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종교의 자유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회, 성당, 절, 러시아정교 사원 등 종교시설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종교가 체제위협의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종교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왔으며, 강제송환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 접촉여부 및 성경소지 등을 조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종교탄압에 대한 보고서들이 출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 내 종교행위 처벌 혹은 지하교회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또한 북한이 미신행위로 규정하는 점, 사주, 관상 등 역술인 혹은 무당에 대한 처벌 사례들도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 (2) 사회권

### (가) 식량에 대한 접근권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중앙배급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아사자의 규모에 대한 추정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온 1996~1997년 경에는 실제 북한의 식량난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 외부세계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주민들의 식량권은 중요한 인권정보로 규정되어 왔으나, 주로 북한의 식량생산량, 식량소요량, 식량 수입량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식량수급실태 추정을 넘어서서, 북한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실제 시장에 식량이 충분히 유통되고 있더라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북한 식량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아사자의 규모 추정 혹은 아사자의 신상 정보, 아사시기, 아사지역 등으로 수집되어 왔다.

### (나) 보건권

예방의학 및 무상치료를 표방하던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1990년 중반이후 경제난으로 거의 마비된 상태로 알려져 왔다. 의약품 및 물자 부족 등 일반적인 보건의료 실태와 함께 구체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들이 보건의료 관련 인권정보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

의 건강권 실태도 주요한 보건의료 정보로 취급된다.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 통계정보로는 영아사망율 등이 활용된다. 또한 북한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병명, 치료내용, 병원비 부담여부, 의약품 지급여부, 환자식사, 냉방 등)들을 파악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의 얼마나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정보일수도 있으나, 북한 주민의 보건권을 측정하는 주요한 자료이다.

### (3) 기타

#### (가) 탈북자 처벌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중국 내 인권유린 실태와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벌이 알려지면서, 북한인권의 주요한 사안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조사과정, 처벌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동, 탈북자가족에 대한 감시 등이 북한인권정보로 수집되어 왔다. 지역별로 탈북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양태로 변화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와 함께 국경단속 유형, 탈북관련 중개인 실태 및 단속내용, 탈북비용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항목이 된다.

#### (나) 납북자·국군포로·귀국자

납북 간 인도주의 사안으로 다루어진 납북자·국군포로들의 거주지 및 체류유형, 북한에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남한출신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생활수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본인이 탈북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북한에서 목격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확대될 수 있었다. 귀국자 및 화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생활수준 등도 북한 내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취급되어 왔다.

#### (다) 아동권

북한아동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출석율, 강제노동 동원(농촌동원), 군사훈련, 학용품 및 교과서 지급실태, 학교급식여부, 학교가 요구하는 학부모 부담내역 및 미부담시 불이익여부, 강제노동 및 아동매매, 아동 유기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식량난으로 유랑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유형 및 보호내용도 관심 사안중의 하나이다.

#### (라) 여성권

여성권은 여성에 대한 차별내용 및 정도,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사회에서의 남편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자 및 보호내용, 여성의 건강, 출산 등 모성보호 여부 등이 주요한 정보로 다루어져 왔다. 즉 여성차별철폐가 여성인권운동의 목표라는 점에서, 북한여성들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차별의 피해자로서 조망하게 된다. 또한 식량난이후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성권의 관심 사안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번히 이루어지는 동원노동도 여성권 침해정보로 취급된다.

### 3. 북한인권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 가. 수집단계

북한인권정보도 일반적인 정보수집 경로 및 방법인 인간정보 수집(HUMINT), 기술정보 수집(TECHINT), 공개출처정보 수집(OSINT)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정보출처에 따라 인간정보 수집과 기술정보 수집으로 분류되며, 인간정보는 공개출처와 비밀출처로, 기술정보는 영상

정보와 신호정보로 구분하기도 한다.<sup>174)</sup> 북한인권정보도 북한사회문화정보와 동일하게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로 구분하여 정보수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간정보 수집 실태

인간을 첩보수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보활동을 지칭하는 인간정보 수집에 있어 북한인권관련 주요 행위자는 정보수집자(정보수요자)와 북한 내부 정보원(정보제공자)으로 구분된다. 정보수집자는 직접 정보수집 활동을 하거나 북한 내부 정보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북한 내부 정보원은 정보수집자와 일정한 거래관계를 맺고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인간정보 수집은 주로 비밀출처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활동이다. 정보수집자는 중국 등 현장조사와 탈북자 설문·면담을 통해서, 또는 북한 내부 정보원, 북한 내부 문건 및 서적 입수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 관련 비밀정보를 수집한다.

#### (가) 현장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주민 면담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압력에 대해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며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여 왔다. 또한 중국도 탈북자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내 인권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인권정보 수집자들의 중국 등 제3국내 현장 활동에는 단속 및 처벌의 위협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sup>175)</sup> 이러한 차원에서 단순한 사회문화실태에 대한 정보획득과 달리 면담자와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침해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인권정보는 실제 권리침해를 경험한 개인의 증언에 기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174)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p. 89.

175)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19).

정보 없이는 수집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조사는 대상자가 어떤 인권관련 정보를 증언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176)</sup> 인권정보는 간접적인 유도질문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sup>177)</sup> 인권분야는 사회·문화 분야와는 달리 사사려행자, 방문자, 조선장시, 지도원 등을 통해서 획득하기는 어려우며, 주로 강제송환을 경험한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은 강제송환이후 중국공안 및 북한보위부조사를 거쳤으며, 로동단련대 및 교화소 등의 수감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증언할 수 있다. 현지조사에게 활용되는 정보원으로는 북한보위부 요원 등 북한 법기관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계층들이 활용되기도 한다. 북한 내 단속실태 등 인권관련 정보는 보위원이나 보안원이 법기관과 대화하는 사건이나 사례들을 통해 수집될 수 있다.<sup>178)</sup> 현지 탈북자조사는 대부분 구호활동을 통해 탈북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현지 활동단체 및 개인들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여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현장 정보 수집활동은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면 미국 및 일본은 현지 활동 민간단체에게 의뢰하여 탈북자 실태 및 북한 내 인권정보 수집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 (나) 내부 정보원을 통한 정보수집

북한인권정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내부 정보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수집활동이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북한인권정보에 대한 정부와 언론차원의 수요가 커지면서, 북한 내 인권실태를 제보하는 정보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수

176) Kay Seok,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8.26).

177)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178)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5.7).



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거액을 벌기 위해, 외부의 요구에 맞춰 인권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전문브로커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전문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보위부원, 탈북경험이 있는 북한주민 등 내부 정보원들이 조사기관의 구타, 공개처형, 노동단련대, 정치범수용소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언론이 고액의 사례비를 지급함에 따라 북한영상을 합성하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북한 내부의 인권관련 문건들을 조작하는 경우도 포착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 17일자로 적힌 탈북자 강제송환 과정에서 취조시 구타장면 동영상은 국가보위부원이 실제 2002~2003년경에 촬영하여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sup>179)</sup> 2004년 10월 경 함경북도 회령의 한 공장 건물 구석에 자유청년동지회명의로 ‘김정일 타도’라는 반체제 내용을 담은 벽보와 성명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었으나, 중국에서 합성된 것으로 밝혀졌다.<sup>180)</sup>

NK지식인연대, 임진강, 열린북한통신 등은 북한 내 정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인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핸드폰을 들여보내 통신을 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위성전화를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통신원을 통한 정보수집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벗들은 ‘오늘의 북한소식’을 위해 내부 통신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신원 보호차원에서 구체적인 정보수집 경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포고문, 재판기록 등 비밀 문건 및 기록도 내부정보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 (2) 기술정보 수집 실태

기술정보수집<sup>181)</sup>이란 과학 기술을 수집 수단으로 활용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하며 영상정보수집, 신호정보수집, 징후계측정보수집 등으로 세분된다. 북한인권관련 기술정보는 주로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

179) 김병로, “기존 북한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p. 11.

180) 위의 글.

181) ‘기술정보수집’에 관해서는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9), pp. 75~81 참조.

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위성사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2003년에 미북한인권위원회가 출간한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의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는 기존 탈북자의 증언에서 파악된 정치범 수용소 정보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기술정보를 첨부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정보기관만이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상업용 위성이 발달함에 따라 민간단체나 개인도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비용문제로 인해 소규모의 민간단체나 개인이 북한인권 관련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인권관련 신호정보나 징후계측정보 수집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공개출처정보 수집실태

북한 인권정보 수집의 한 방법은 언론매체, 탈북자 수기 등 서적, 국가 및 민간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한 공개출처정보 수집이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상용정보망 등 디지털 매체도 공개출처정보 수집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개출처정보 수집은 비밀출처정보와는 달리 공개출처정보 수집은 위험부담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인권분야의 공개출처정보는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수집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언론 매체들이 북한인권 실태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언론은 중국 내 취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다루기도 한다. KBS - 일요스페셜,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은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 실태 등을 다루기도 하였으며,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취재하여 ‘천국의 국경을 넘다’는 기획보도와 다큐멘터를 제작하였다.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활발한 정보수집을 하는 언론인 Daily NK, 임진강, 열린북한방송 등도 공개출처정보 수집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Daily NK<sup>182)</sup>는 북한의 당·군·정, 주민동향 등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도 보도한다. 이 기관은 중국에特派원을 파견하여

북한 내부의 증언과 영상을 제공하며 일본과 미국에도 특파원과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다. ‘임진강’<sup>183)</sup>은 북한 내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격월로 출판되고 있다. 임진강은 기자 및 기고자를 원칙적으로 북한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외부인들은 수집된 정보를 입력, 정리, 편집, 발행하는 일을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진강의 기자는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거쳐 합의된 원칙 하에서 행동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자유기고가는 신분위협을 의식하여, 본인의 자세한 정보를 노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북한 내부의 기자는 비디오 촬영, 녹음 기록 혹은 북한내부 공식문서나 증명서를 기초로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또한 아시아 프레스(임진강 사무국) 취재팀이 북·중국경에 가서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은 내부 기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혹은 북한 내에서 기자가 한국, 일본, 중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내용을 질의응답, 독백,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 프레스 취재팀이 북·중국경 지역에 가서 일시적 월경자나 탈북자 인터뷰 혹은 취재하기도 하며, 북한 내부 혹은 해외 거주 북한주민에 의한 기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열린북한방송<sup>184)</sup>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다양한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을 발행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2009년 창간한 열린북한통신은 주간으로 발행되며 내용은 북한의 최신기사,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소식, 북한바로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북자 단속, ‘르포-북한인권’ 등 북한인권 관련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양강도 소식통”, “고위급 소식통” 등 북한 내부 통신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인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 (나) 국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김

182) <http://www.dailynk.com/korean>, 2004년 12월 창간.

183) <http://www.asiapress.org/korea>, 2008년 1월 창간.

184) <http://www.nkradio.org>, 2007년 12월 방송개시 ‘열린북한통신’은 2009년 주간 발행.

영삼정부부터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기관의 북한인권정보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당시 민족통일연구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활용하도록 의결하였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부처 및 정부기관이 수집한 북한인권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매년 국영문 백서 발간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림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공식화하였다. 다만 수집된 정보의 출처 및 수집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다. 국내입국 탈북자의 규모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입국탈북자 대상 심문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원을 통한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탈북자의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 국내입국자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개설되었고, 통일부 북한인권환경팀의 주도로 북한인권실태조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북한인권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은 북한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심문에도 부분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정보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북한인권정보로 분류되거나 관련부처 간 공유체계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주요 대북정책목표로 설정되면서, 북한당국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 보여 온 북한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표명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은 북한정보에서 우선 관심사안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으며, 일부 수집된 정보들도 활용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어 왔다. 2008년 정부 내 북한인권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부처의 북한인권활동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를 지원한다는 근거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지원하여 왔다. 국정원은 2007년부터 국내입국 탈북자 설문조사에 인권항목을 포함시켰으며, 2010년부터 정

부합동신문센터 내에서 북한인권기초설문조사 및 개인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관련 정보수집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인권관련 업무와 연관된 정부기관은 통일부(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국가정보원, 법무부(법무실 통일법무과), 외교통상부(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평화외교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 북한인권팀) 등이 있다. 이들 기관 중 북한인권관련 현지 및 탈북자 면접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 유일하며, 최근 법무부가 국내입국자 면접을 통한 정보수집작업에 참여하였다. 통일부는 2007년까지 통일연구원 등 외부소속 연구자들을 통해 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부터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하나원에서 탈북자 기초설문과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연구용역 형식으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며<sup>185)</sup>, 해외 탈북자 보호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sup>186)</sup>는 직접 수행하여 왔다. 외교통상부는 직접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주관하고 있다. 위 기관들의 북한인권정보수집의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지속하

185) 용역과제 발주를 통한 북한인권 현황 파악 및 정책방안 모색으로는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2004),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2005),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직업실태를 중심으로(2007),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2008),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2009), 북한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2009),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을 중심으로'(2010).

186) 현지조사(현지 조사를 통한 북한인권 모니터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년에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논의 모니터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북한보고 모니터링, 탈북자 실태조사자 복경 출장, 탈북자 실태조사차 연변·선양 일대 출장, 미국 출장(워싱턴, 뉴욕), 2006년 유럽출장, 2007년에는 재외 탈북자 현황 파악을 위한 몽골·중국, 태국 출장, 2008년에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출장을 다녀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권고, 일본 납북자 문제 관련 일본 출장(2008.12), 주 북한인권 국제회의의 관련 출장(2009.3), 재중 탈북자 문제 관련 중국 출장(2009년 8월 10-15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및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미국출장(2009년 9월 19-28일), 북한인권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관련 제네바 출장(2009.12), 조영국, "북한인권정보체계 자문회의," 2010.7.21.

여 왔다. 1996년 북한인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진되다가,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통일부 북한환경인권팀이 구성되면서 양 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하나원 내 북한인권실태 조사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8년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재추진하면서, 인권침해사례 수집을 위한 탈북자 면접 규모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침해 정보를 사안별, 시기별, 지역별로 통계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0년부터 국내입국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인권정보 수집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정부합동신문센터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입국자 전원에 대해 기초인권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신지역, 생년월일, 성별, 학력, 탈북일자 등 입국자의 기본인적정보와 강제송환, 구금시설(로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수감, 재판, 법 기관 단속 및 조사, 성폭력 경험여부를 파악한다. 이러한 기초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접대상자를 선별하고, 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설문과 면접조사가 입국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유사한 면접이 반복될 경우 대상자들의 면접 협조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신변위험 등을 이유로 조사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연구원의 면접조사가 입국초기에 이루어지고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대상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수집한 북한인권정보는 연례 북한인권백서를 통해서 공개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 (라) 민간단체를 통한 정보수집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관련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자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족하였고,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현 좋은벗들)도 대북지원

및 탈북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독교 교단 및 개별교회를 중심으로 탈북자 구호 및 현장정보 수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sup>187)</sup>는 1999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목표로 창립한 북한인권 단체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서 국제적 연대 중요성을 인식해 2005년부터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sup>188)</sup>는 탈북자 수기 및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북한인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며, 미국 NED, 국무부, 통일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 향후 인권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북한인권통계백서(북한인권백서) 및 북한 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다. 인권운동사랑방<sup>189)</sup>은 북인권대응팀과 북인권모니터링팀을 두고 진보적 인권론 차원에서 북한인권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및 해석, 소식지 발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탈북인단체총연합<sup>190)</sup>은 탈북인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북한독재를 타도하고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다하여 투쟁하며 또한 국외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입국을 원하는 탈북자구출운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남한에서 탈북인 단체들과 탈북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에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하에 북한자유인권위원회, 해외탈북자구출위원회, 국내정착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북한인권정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sup>191)</sup>은 1996년 5월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해외탈북자 지원운동을 전하여 왔다. 특히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 인권운동

187) <<http://www.nknet.org>>.

188) <<http://nkdb.org>>.

189) <<http://sarangbang.or.kr>>.

190) <<http://www.enku.kr>>.

191) <<http://www.nkhumanrights.or.kr>>.



가들과 함께 활발한 국제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공론화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좋은벗들<sup>192)</sup>은 “남북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그리고 재외동포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좋은벗들은 북한식량난에 대한 홍보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조·중 국경지역 현지 활동가 파견 및 조사활동, 북한식량난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다. 2004년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은 1996-200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중국활동 당시 수집한 증언자료와 200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중 제3국 체류기간이 짧은 이들의 증언을 사용하였다. 또한 증언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권보고서 및 북한관련 국내외문헌자료들을 비교검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는<sup>193)</sup> 외부단체에 의뢰하여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한 인권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였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상당수가 잠재적으로 인권침해와 연계될 소지가 있는 북한정보 즉 비사회주의구루빠 등의 단속실태, 장마당 단속실태, 국경 단속 실태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왔다. 영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북한 내 영상정보 수집지원을 위해 외국언론과 연계 등을 추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내에서 장마당 혹은 구금시설 외부 등 영상 촬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일본언론사 등을 연계하고, 자체적으로는 영상자료의 일부만을 활용하게 된다.<sup>194)</sup>

#### (마) 탈북자를 통한 북한인권 정보 수집

탈북자를 통한 북한인권정보 중 공개정보는 탈북자의 수기이다. 강철환·안혁의 ‘대왕의 제전(1995)’, 강철환의 ‘평양의 어항(2003)’, 신동혁의 ‘세상밖으로 나오다(2007)’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공개정보이다. 탈북자들의 수기형태에 포함된 북한

192) <<http://www.goodfriends.or.kr>>.

193) <<http://www.koreanbar.or.kr>>.

194)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0.15).



인권정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 침해사건 발생 시기 및 지역, 침해의 주요한 내용 등의 정보가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인권정보를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서는 한계를 갖게 된다.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북한인권정보는 관련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 (바)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를 통한 정보수집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sup>195)</sup>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필요한 경우 그 가족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보통은 회보·연례보고서·배경자료 등에 정부의 비행을 밝히는 일을 하지만 주요활동은 전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정위원회는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심수’에 관한 일정수의 사건을 맡아 석방 때까지 관계 정부에 항의편지를 낸다. 런던 본부에 있는 조사부는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 및 관련당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활동정보망을 구성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sup>196)</sup>는 1988년 북한인권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탈북자, 개성공단 노동권, 아동권, 여성권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sup>197)</sup> 미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2001년 이래 연구용역 방식으로 개인연구자를 통한 북한인권정보를 수집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여 왔다.

195) <<http://www.amnesty.org>>.

196) <<http://www.hrw.org>>.

197) 공통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나온 시기의 있던 지역의 물가(이는 나온 시기와 장소에 대해 진실하게 말 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또한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사정, 의료 서비스 상황, 간략한 성장 과정, 정치적 배경, 직업적 배경, 이전에 나왔다가 체포, 송환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중국 쪽과 북한쪽에서 취조, 수감 중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수감 시설에 대한 묘사, 어떤 일상을 보내게 되는지, 고문이나 학대를 체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성적 학대와 차별의 경험, 공개처형을 목격한 경험,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에서의 장사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 특이한 직업을 가진 경우, 그 직업에 대한 자세한 묘사, 어떤 이유로건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묘사, 재판 절차와 법적인 지식, 변호를 받을 권리를 누렸는지, 이혼을 한 경험, 정치적 신분이 직업과 거주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외국 방송이나 영화 등을 접한 경우가 있는지, 중국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 기독교 등 종교를 가진 경우, 일반 주민들의 권리 의식의 변화: “인권”이란 말을 들어 본 경우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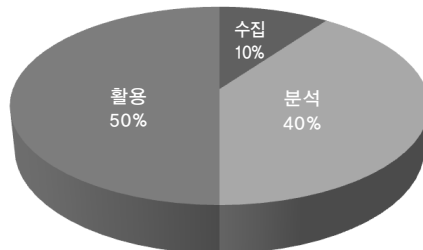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유럽 연합 및 미국 등 결의안 발의국들은 결의안 작성과정에서 관련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과 함께, 북한인권 정보 수집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요청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주로 탈북자 및 관련전문가와의 면담 등의 방식으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

#### (4) 설문조사 결과

북한인권정보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 80%, 여성 20%, 연령대는 40대 40%, 50대 35%, 30대 25%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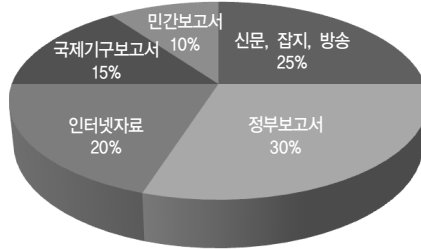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NGO 45%, 학계 25%, 정부 20%, 언론 5%, 기업 5%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력은 5-10년 미만 41%, 10년 이상 27%, 20년 이상 14%, 1-3년 미만 14%, 3-5년 미만 4%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하게 된 계기로는 탈북자로서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북한인권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북한사회 및 변화과정 연구의 연속, 탈북자 구축, 대북지원 활동 등이 작용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정치범 수용소와 종교, 식량난 등 경제사회적 인권, 전반적인 인권실태, 북한여성인권, 아동권, 교육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인권상황 등 매우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그림 X-1> 북한인권정보관련 응답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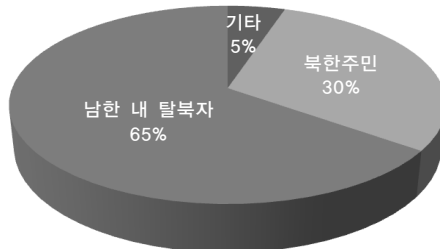
북한인권정보체계 차원에서 설문응답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50% 활용단계, 40% 분석단계, 10% 수집단계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정보 수집단계부터 관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X-2>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는 정부보고서 30%, 인터넷자료 20%, 신문·잡지·방송 25%, 국제기구보고서 15%, 민간보고서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X-3>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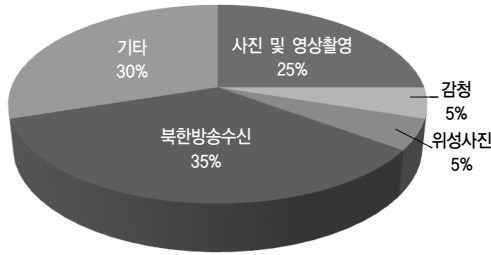


북한인권 분야 관련하여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는 남한 내 탈북자 65%, 북한주민 30%, 기타 5%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사회 자체에 대한 자유로운 외부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경험하고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 등에서 북한주민들을 통한 북한인권정보 수집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북한주민이 아닌 다른 인간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외부 방문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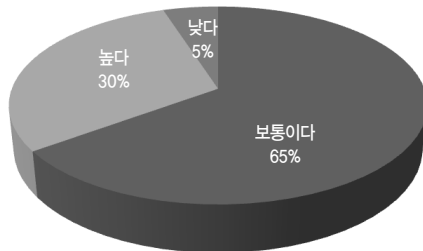
구급시설 등 인권침해 현장에 접근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주민의 권리침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등에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접자 및 조사자의 신변안전보호가 주요한 원칙이 되어 왔다.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자들은 사전 교육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또한 정보수집단계에서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하여 조사자 선정 및 조사항목 등을 보완하게 된다.

<그림 X-4>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그림 X-5>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



설문조사에서 관련자들은 소속기관의 북한정보수집 능력에 대해 높다 30%, 보통이다 65%, 낮다 5%로 응답하고 있다. 보통이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보수집 능력이 높다는 응답의 비율은 30%에 그치고 있어, 소속기관들의 정보수집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설문응답자들의 소속기관의 주요역할이 정보수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에 그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수집 분야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 물가, 북한 내 동향, 탈북자 면담, 노동신문을 통한 북한사회 동향, 북한의 생활상, 고문사례, 보건의로 실태, 북한사회문화 변화, 인권 의식, 영유아 성장상태, 북한환자 치료실태, 북한주민의 식사횟수와 식사량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타났다.

## 나. 분석단계

### (1) 단계별 분석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분류단계는 공개된 사실, 비밀, 역정보, 미스터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북한인권정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국제기구, 민간단체, 개별국 정부기관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된 사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밀은 북한당국이 외부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현안으로서,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정치범수용소가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폐쇄된 북한사회 내에서도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된 경험자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문제제기 등을 계기로 폐쇄 및 통합을 시도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 확인상 제약과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보의 역정보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외부의 정책적 판단을 어렵게 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미스터리는 수집된 정보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현안을 지칭한다. 즉 정치범수용소의 경우에도 매우 극소수이지만 수감경험자, 경비대 등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는 있으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심지어 수감자의 가족들조차도 수용소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수집된 정보를 평가하는 분석관이 북한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력 즉, 정보기관 실무자 및 탈북자 등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게 된다. 제도적인 차원의 협력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주로 기관차원 혹은 개인차원의 인적네트워크가 활용되게 된다. 수집된 정보의 신뢰

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는 교차확인이 있다. 특정지역의 인권정보를 수집하면, 그 지역 출신 탈북자 등을 면접하여 수집된 정보의 진위여부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탈북자가 함경북도 등 국경지역 출신이며, 입수된 정보도 주로 국경지역의 소식이기 때문에 교차확인이 가장 손쉬운 정보평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입수된 정보의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 내부 통신원 등 북한주민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본정보의 경우에는 주요 사실의 단순서술 방식에 그칠 수 있으나, 현용정보, 경보정보, 예측·판단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보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을 모자이크 이어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특히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서는 대체로 이와 같은 자료형 분석법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료형 분석법만으로 계층 및 지역 간 차이가 현격한 북한사회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형 분석방법은 자료수집이전에 큰 틀을 상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내재적 접근, 보편이론적 접근, 비교역사 모델 등이 있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질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이 있다. 질적 분석은 사례연구나 역사분석을 통해 분석사안을 서술하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현상의 규칙성, 보편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맥락적 특수성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대체로 북한인권정보의 분석은 질적 방법론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를 들면 국내입국 혹은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소개하는 방식의 접근이 일반적이었다.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들이 질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계량적 분석방법론도 북한인권정보 분석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인권침해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하면서 계량적 분석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질적분석과 달리 북한인권정보를 연도별, 지역별, 계층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변화과정을 파악하기에는 계량적 분석방법이 효과적이다. 또한 북한인권침해의 구조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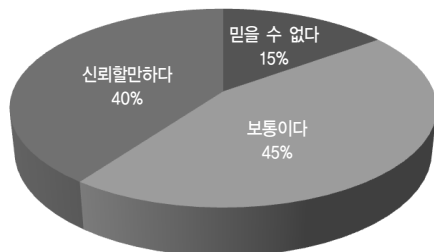
해하기 위해서도 변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집된 북한인권 관련 첩보들이 통합되는 과정은 주로 북한인권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분석한 첩보들이 통합비교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북한정보로 생산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인권 관련 정보공유체계는 제도화되지 못하였으며, 북한인권 관련 정부부처 내에서도 정보 분석을 위한 제도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게 북한인권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정보분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집된 정보의 분류, 평가, 종합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정보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정보의 해석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판단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기조나 사업목적, 분석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분석과정에서 정보의 ‘정치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특정정보를 정책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기 쉽다. 특히 북한의 상황이 지역적, 계층적, 시기별로 매우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단계에서 정보 왜곡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결합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인권정보는 주로 탈북자들의 출신지역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북한인권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예측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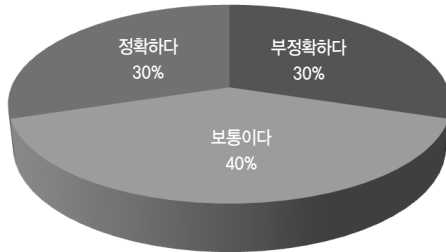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X-6> 국내 북한정보의 신뢰성



국내에서 활용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5%, 신뢰할 만하다 40%, 믿을 수 없다 15%로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0%, 정확하다와 정확하지 않다가 각각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북한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X-7> 국내 북한정보의 정확성



북한인권 관련하여 주로 생산하는 정보는 실태에 관한 기본정보 50%, 현용정보 40%, 예측정보 10%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정보를 재확인하는 경로는 탈북자와의 인터뷰, 관계기관, 탈북인권활동가, 신규 입국자, 일간지 정보, 부처발표, 논문, NGO보고서, 북내부인/중국에 여행나온 여권소지자, 인권관련 북한의 제도적 현황조사, 각종 문헌 자료조사, 북한의 복수관계자 확인, 우리정부 정보와 비교확인, 연례적으로 200여명 단위 탈북자 면접조사, 중국을 통한 북한가족과의 전화통화, 타 NGO와 정보교환, 북에 직접 방문하여 북한 관리자나 주민접촉 등으로 응답되었다. AI는 좋은벗들의 정보를 인용하여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내 공개처형 건수가 15건이었다고 보도하였다.<sup>198)</sup> 북한인권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다른 기관의 정보와 차이가 있는 경우 교차확인을 철저히 거친 후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단체들의 교차확인의 방법은 북한 내 다른 지역, 다른 정보제공자에게 직통 전화를 통해

198)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CT53/002/2008/en/d1ddd1a4-0b05-11dd-badf-1352a91852c5/act530022008eng.pdf>>.



우선적으로 확인을 거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 정보기관에 의뢰해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sup>199)</sup>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 여부에 관해 단체 내에서 근무하는 탈북자들과 유관 탈북자단체 관계자에게 사실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미 공개된 비슷한 정보와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북한인권 정보수집이후 분석을 담당하는 자체인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비공개역할을 하는 수집 및 분석담당자와 비교적 장기간의 경험을 가진 인권조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정보에 대한 분류와 분석에 있어서 국제 표준화 모델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활용 대상에 맞는 조사 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자료축적과 자료활용에 제한이 있다고 평가 하에 일부 민간단체는 인권 위반 사례에 대한 Data Base 구축 작업을 국제적 NGO들이 사용하고 있는 「HURIDOC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이나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표준양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sup>200)</sup>

#### 다. 활용단계

정보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생산물은 크게 기본정보, 현용정보, 경보정보, 예측 판단정보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정보 또는 기초 서술정보(basic descriptive)는 대상국가 또는 조직의 역사, 지리,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고정된 기초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최근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현용정보(current reportorial)이다. 경보정보(warning and indication)는 적의 동향을 부단히 감시해서 얻어지는 공세적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 판단 정보(speculative evaluative)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예측하고 판단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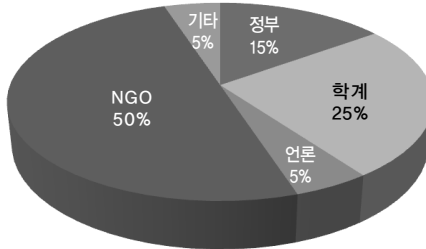
199)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0.15).

200)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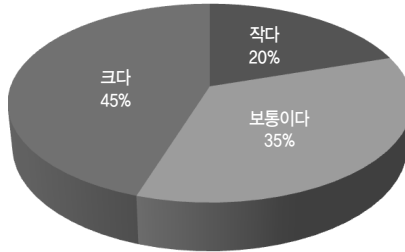
북한인권정보는 대부분 북한인권 실태를 기술한 기본정보 혹은 기초 서술정보의 형태로 활용된다. 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6차 원칙에 따라 기록된 정보이다. 이러한 기본정보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북한당국의 탈북자 단속실태 및 동향과 같은 정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현용정보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북한당국의 사회통제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도 현용정보로 활용된다. 북한인권 관련 경보 및 예측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대량탈북의 가능성 혹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소개처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사태를 경보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정보관리 및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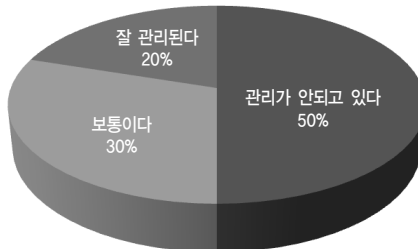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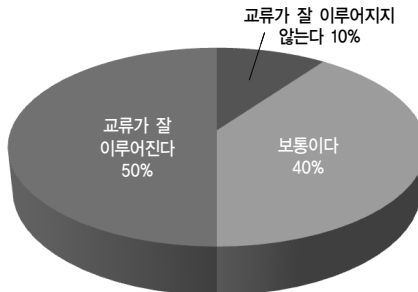
<그림 X-8>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생산정보의 주 활용처로는 NGO 50%, 학계 25%, 정부 15%, 언론 5%, 기타 5%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가 주로 NGO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에 참여한 북한인권관련자들은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북한정보의 정책적 영향력에 대해 크다 45%, 보통이다 35%, 작다 2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X-9>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북한정보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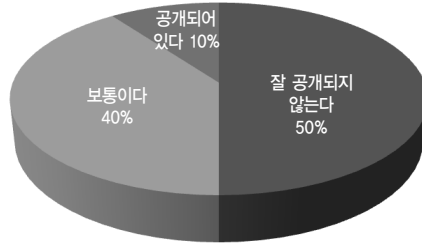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관리현황에 대해 관리가 안되고 있다 50%, 보통이다 30%, 잘되고 있다 20%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설문응답자의 소속기관들이 인권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그림 X-10>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관리현황****<그림 X-11> 타 기관과의 정보교류**

북한인권관련 타 기관과의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50%, 보통이다 40%,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0%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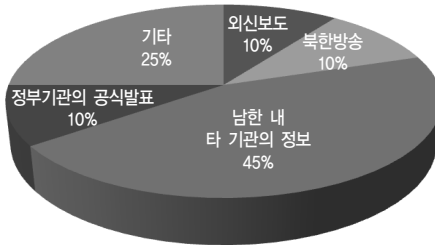
났다.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정도에 대한 견해는 잘 공개되지 않는다 50%, 보통이다 40%, 공개되어 있다 10%로, 정부 내 북한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X-12>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정도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가 환류를 거치는 과정에 대해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 45%, 정부기관의 공식발표 10%, 북한방송 10%, 외신보도 10%, 기타 25%로 응답하였다.

<그림 X-13> 이미 유통된 정보가 거치는 환류과정



북한인권단체들의 정보활용은 우선 내부적으로는 상근자 및 중요 회원에게 우선 제공하여 다양한 의견과 검증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후 일반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웹진, 이메일, 기관지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sup>201)</sup> 또한 필요시 정보의 중요성 정도를 따져 관련 언론사에 독점 제공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 보도를 유도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를 수집하는 민간단체들은 정부기관, 미국과 일본의 정부기관과 북한관련 단체

201)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0.15).

등과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휴먼라이트워치, 프리덤하우스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관과 단체와도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침해사례집 및 백서 등 조사 자료를 책자로 발간·활용 노력은 예산 부족과 자료 활용의 한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단체들은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조사와 연구에 관심을 보여 왔다.

북한인권관련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온 국제인권단체는 수집된 북한인권정보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sup>202)</sup> 북한인권정보 수집자체의 한계로 인해 사전에 활용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수집된 정보결과를 검토한 후 활용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정보활용방식은 보도자료, 공개서한, 신문 기고문, 에세이, Q&A, 혹은 짧은 보고서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주로 새로운 패턴, 과거와는 변화를 보이는 부분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게 된다. 인권침해 사실은 국제인권협약들과 관련한 북한법령을 참고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기관의 연구원이나 학자들과 발견한 문제점이나 변화상을 논의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보고서의 경우는 그 형태가 거의 유사하여, 배경-문제의 패턴-개별 경우에 대한 묘사-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단체의 법률전문가가 검토한 후에 홍보실에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가 사전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각각 사안에 대한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정보수집의 활용을 단순히 보고서 발간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인권관련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그 자체로서도 기록으로 의미가 있지만 자체 보고서를 근거로 홍보(advocacy)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은 관련 당사국이나 기구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법적인 변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202) ○○○(국제인권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9.21).

역할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당사국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 그 국가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부와 기구 등과도 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민간단체들과 연계해서 공동 서한이나 공동캠페인을 통해 활동하기도 한다. 유엔의 대북결의안 문구를 제안하기도 하고, 각 국가별 관련 법안이 초안 될 때 평가의견을 개선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회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 혹은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한다.

#### 4. 북한인권정보체계 사례분석 - 정치범수용소

##### 가. 정보 수집

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가 거론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한 최초 정보는 1979년 입국 탈북자 강형순(국가 정치보위부원)과 1982년 입국 탈북자 김용준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sup>203)</sup> 그러나 이들은 직접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한 경험이 없고 다만 관련 교육 또는 방문경험을 통한 간접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2년 입국한 강철한과 안혁은 자신들이 경험한 함남 요덕 제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 실태를 담은 단행본을 발간하였고,<sup>204)</sup> 수용소 경비병출신 안명철은 제13호(함북 온성)와 제22호(함북 회령) 관리소 실태를 공개하였다.<sup>205)</sup>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치범수용소 경험자들의 증언도 늘어나게 되었다.

203) "파쇼 독재산물 복괴의 독재구역" 『조선일보』, 1982년 4월 13일, 2면,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2009, p. 3에서 재인용.

204) 강철한·안혁 공저, 『대왕의 제전(1-3권)』 (서울: 향실, 1993)

205) 안명철, 『그들이 울고 있다』 (서울: 천지미디어, 1995)

〈표 IX-6〉 정치범 수용소 경험자의 정보자료

구분	증언자	경험유형	경험시기	주요내용	주요 자료
관리자 및 방문자	강형순	보위일/국가정치보위부 교육	1976-1977 (보위원교육)	정치범수용소규모	『조선일보』, 1982년 4월 13일자 1,2면 기자회견 자료
	김용준	보위부정보원/12호 수용소 방문	1962.5. 1978.9	은성군 12호 외곽통제, 생활 등	『조선일보』, 1982년 4월 13일자 1,2면 기자회견 자료
	신영만	일본밀파간첩/밀파직전 11호 견학	1972.봄	11호 수용소(경성군) 견학시 견문내용	1982년 4월 13일자 1,2면 기자회견시 보도자료에 포함
	안명철	수용소 경비원 (11·13·22·26호)	1987.7-1994.9	13호 및 22호 실태	『그들이 울고 있다』 외 다수 인터뷰 자료
	최동철	수용소 경비원(11호)	1983.5-1985.2 1885.2-1986.2	11호 수감자 생활, 탈출사건	인터뷰 자료(『일간조선』1996년 4월호)
수감경험자	신동혁	14호 출생	1982-2005.1	14호 수감자 전반적 생활실태	『북한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 구역, 세상 밖으로 나온다』 외 다수 인터뷰 자료
	김영순	15호 설립초기 가족수감	1970.10-1979.1	15호 설립초기 실태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가족수감	1977.8-87.2	15호 입석리 수감자 실태	『수용소의 노래』 외 다수 인터뷰 자료
	안 혁	15호 대숙리 독신수감	1987.11-1989.2	15호 대숙리 독신자	『대왕의 제전』 외 다수 인터뷰 자료
	이영국	15호 대숙리 독신수감	1994.1-1997.1	15호 대숙리 독신자 실태	『나는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다』
	강명도	18호 혁명화 독신수감	1992-1994	18호 혁명화 작업반 실태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김 용	14호, 18호 수감	1993.8-1995.10 1995.10-1998.9	14호, 18호 실태	『일간조선』, 2000년 5월호 인터뷰 자료
	김태진	15호 대숙리 독신수감	1998-1992	15호 대숙리 독신자구역 실태	다수 언론 인터뷰 자료
	김은철	15호 서림천 독신수감	2000-2003	15호 서림천 독신자구역 실태	『생명과 인권』 제41호(2006.가을)
	김수철	15호서림천 독신수감	2000-2003	15호 서림천 독신자구역 실태	Daily NK, 2005년 11월 12일 기자회견
	미상	18호 수감자	1994 -?	18호 수감자실태	『임진강』 2호 (2008.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pp. 5~6.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감경험자들이 대부분 특정지역 내 일부 정보만을 갖고 있을 뿐, 전반적인 정치범수용소 운영체계나 규모, 위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범 수용소 내 수감자 규모도 1996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백서에서 언급된 20만 명이 지속적으로 반복 인용되어 왔다.

## 나. 정보 분석

정치범수용소가 극단적인 북한인권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정치범수용소는 국내외에서 독일의 유테인 수용소 혹은 소련의 gulag과 유사한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며, 한 번 수감되면 평생을 수용소 내에서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생화학무기 등을 생체실험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체실험이관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접수기관 등에 의해 위조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sup>206)</sup> 이러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유포된 정보는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왔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충분히 수감자들을 비인도적으로 활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부분적인 경험정보만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현황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인 규모나 운영체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자체가 매우 미흡하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국내입국 탈북자들 면접조사와 인공위성사진으로 분석한 데이비드 호크의 연구는 전반적인 체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실제 체계를 보여주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사회 전체가 거대한 정치범수용소라는 비유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 데이비드 호크의 연구를 지원한 미 북한인권위

206)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0.1).



원회도 당시의 분석이 실제 수용소 체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07)</sup> 즉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모두 종신수감시설이 아니며, 특정형기를 마치고 ‘해제’된 이들이 사회로 나오지 않고 수용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기존 정보와 차이가 있는 현상들이 알려지고 있다. 명칭면에서도 청진 수성에 위치한 시설은 교화소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들이 폐쇄된 배경과 과정도 일부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확인 및 분석작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수감시기가 대부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정치범수용소 체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다. 정보 활용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어느 기관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용소 규모를 발표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정보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부에서 정치범 규모를 15만 5천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정치범수용소 관련 정보는 오랜 기간 단일한 정보가 유통되어 왔으며, 다만 국내입국자들의 수기 및 증언들이 더해지면서 인권침해 사례들이 축적되어 왔다. 심지어 1990년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을 갖고 있던 탈북자가 마치 자신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였던 것처럼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보완절차 없이 오랜 기간 국내외 기관의 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실태를 별도 사안으로 처리하다가, 정보의 신뢰성 등에 대한 의문으로 구금시설 등으로 통합하여 정리

207) Chuck Downs, “김정은 후계체제공고화와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워크숍, 2010.11.5.).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언급내용이 국내외 보고서에 계속 환류 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표 IX-7> 정치범 수용소 위치 및 현황

명칭	위치	수용규모	수용자	운영여부 및 특징
11호	함북 경성군 주을리 관모 봉 아래	15,000여명	본인	1989.10 해산
12호	함북 온성군 창평리	15,000여명	본인, 가족	1980-1989년경 해산 (기존자료) 1991.10(신규 증언)
13호	함북 온성군 종성구 동포· 풍계·풍천리	20,000여명	본인, 가족	1990-92년경 해산
14호	평남 개천군 외동리와 5개 골안	50,000여명	본인, 가족	현재운영
15호	함남 요덕군 룡평·평진· 립석·대숙·구읍리	50,000여명	본인, 가족	현재운영 (혁명화구역 운영)
16호	함북 화성군 부하리 일대	20,000여명	가족	현재운영
18호	평남 북창군 석산리 일대	10,000여명	본인, 가족	현재운영 (인민보안성 관리기관으로 정치범수용소성격 추가 분석 필요, 혁명화구역 운영)
22호	함북 회령군 증봉·낙생· 굴산리 일대	50,000여명	가족	현재운영 (1973년 설립, 1990년 확대)
25호	함북 청진시 송평구역 수 성동	5,000여명	본인	현재운영 (수성교회소로 명명됨, 마을 형태가 아닌 교회소 형태)
26호	평양시 승호구역	소규모	본인	1991.1 해산 (정치범 교회소)
27호	평북 천마	15,000여명		1991년 해산
미상	자강도 동신	17,000여명		현재 미상
미상	함남 단천	10,000여명		현재 미상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p. 31.

&lt;표 IX-8&gt; 정치범 수용소 관련 주요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

구분	제목	저자	발표기관	발표시기
국내 논문	주체사상과 북한정치범 수용소와의 상관관계	오가와 하루히사	통일로 5월호	2000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인권: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허만호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2002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오경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연구	허선행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국내 보고서	잊혀진 이름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04
	북한인권백서 2010		통일연구원	매년(1996-)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격년(2006-)
	2010 북한인권백서 <sup>208)</sup>		북한인권정보센터	매년(2007-)
국외 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 연례인권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	매년
	휴먼라이츠워치 연례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매년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	매년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ous in DPRK		국제사면위원회	1979
	Human Rights in DPRK		미네소타변호사국제인권위원회	1988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 on North Korea		국제사면위원회	1993
	New Information about political prisoners		국제사면위원회	1994
	The Hidden Gulag	David Hawk	미 북한인권위원회	2003
	Concentrations of Inhumanity	David Hawk	프리덤 하우스	2007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세계기독교연대	2007
	The Hidden Gulag II	David Hawk	미 북한인권위원회	예정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p. 31 일부 재정리.

208) 2007년에는 『북한인권통계백서』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 5. 북한인권정보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 정보 순환절차에 따른 문제점

#### (1) 수집단계

##### (가) 정보수집체계<sup>209)</sup>

북한인권관련 정보는 대부분 인권침해를 경험 혹은 목격한 탈북자들의 개별 증언에 의해 수집된다. 자신들이 경험한 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증언이 가능하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되는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탈북이후 중국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북한 내 침해시점이 오래 경과된 경우에는 심지어 침해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북한정보와 달리 구체적인 경험 및 목격 증언이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내 통신원들이 영상물 혹은 관련문건들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들 정보들은 반드시 교차확인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나) 정보조작

북한인권관련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북한인권관련 정보조작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북한문건을 조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생체실험기관서’와 같이 파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문건 조작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기관들은 문건조작 여부에 상관없이 현상을 있는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 내 탈북자 이송명단의

209) 차문석, “북한의 경제적 분배구조와 사회권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2008.9; 김종욱,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2008.9.

경우에도 정보조작의 징후가 있어 수집기관이 발표이전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10)</sup>

#### (다) 정보 신뢰도

실제 북한인권정보가 대부분 탈북자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다는 점에서 면접조사의 신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먼저 국내입국자들 중에서 인권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정보수집은 가급적 입국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입국이후 시간이 경과 될수록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듣거나 지면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자신이 경험한 정보와 혼동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면접자의 증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접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함으로써,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의 보도내용은 일단 교차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파장력이 큰 사안들로서 주목을 끌기 위해 별도의 검증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외신이 국내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을 국내언론이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재보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7월 31일 영국 주간지 더 선은 월드컵 경기이후 북한의 김정훈 축구감독이 3연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아 평양건설노동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7월 27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신호섭) ‘사상투쟁회의’ “‘김감독이 당에서 쫓겨나 평양건설노동자로 하방되었다’는 소문도 있다”하더라는 식의 보도를 7월 26일자 자유아시아방송이 “청년장군 믿음 저버린 북한축구팀, 사상 비판받아” 조선일보를 정당한 정보원으로 간주하고 인용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외신보도가 국내에 보도되어 새로운 형태의 정보인 것처럼 보도되게 되었다. 이는 북한사회가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저지를 개연성에 근거하여 추론된 것으로 이를 우리 집단인식의 오류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11)</sup> 이와 같이 김감독 강제노역에 대한 정보에 대해 북한이 “김감독을 처벌해도 본선진출 당시 수여 받은 ‘인민체육인’ 칭호를 박탈하는 수

210) ○○○(민간단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0.1).

21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2>>.

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것이 평양 현지 주민 다수의 반응이다”라는 보도도 있었다.<sup>212)</sup> 8월 10일 열린북한방송의 김감독 재신임, 아시아컵 준비훈련 보도<sup>213)</sup>에 이어, 아시아투데이가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북한 축구대표팀 김정훈 감독의 ‘강제노동설’을 전면 부정했다고 3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을 보도하였다.<sup>214)</sup>

FIFA(국제축구연맹)도 북한축구협회에 “최근 월드컵에 출전했던 축구대표팀 감독과 선수단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서신을 보냈으며, 8월 12일 조선일보는 열린북한방송을 인용하여 김정훈감독의 재신임을 보도하였다.<sup>215)</sup> FIFA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북한축구협회의 답장이 도착했다. 북한축구협회는 선수단과 사령탑에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sup>216)</sup>

세계일보는 김홍태 피스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북한 평양에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아틀레티코 소로카바(브라질 상파울로 주 A2 그룹)와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마치고 31일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해 “김정만 북한축구협회 서기장에게 김정훈 감독의 거취를 물으니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정훈 감독은 북한 A대표팀 사령탑 부임 전 4·25 스포츠 클럽에 몸 담고 있었다고 보도함으로써, 김정훈 감독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다.<sup>217)</sup> 이후 베트남축구협회(VFF)컵에 참가하고 있는 복수의 북한대표팀 관계자는 “김정훈 감독이 월드컵 직후 4.25팀으로 돌아갔다고 재확인하였다.”<sup>218)</sup>

#### (라) 증언자 보호체계

북한인권침해정보수집에 대한 관심으로 증언자의 보호체계는 제대로

212)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0400&num=8571>>.

21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0100&num=85994>>.

214)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84197>>.

2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2/201008120086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2/2010081200862.html)>.

216)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0400&num=86280>>.

217)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Sports/Soccer/Article.asp?aid=20101101001505&subctg1=10&subctg2=00>>.

218) <<http://isplus.joinsmsn.com/article/233/4622233.html?cloc=>>>.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기관에서는 증언내용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통해 활용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의 침해사실에 대한 면접 사례비 지급을 명목으로 증언내용을 별도의 보호절차없이 활용하게 된다. 증언자의 보호를 위해 증언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에 대한 엄격한 준수 여부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인다.

## (2) 분석단계

### (가) 계량화된 정보 분석

북한인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분석에 활용하는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계량화된 북한인권정보는 각각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일차적으로 활용된다. 통일연구원은 분석통계를 각 항목별로 산출하기 위해 2010년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연도별 인권상황을 계량화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수집단계에서부터 분석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수집과 분석단계 관여자가 상이할 경우 의도한 결과분석에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인권 특성상 정보수집 단계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포착될 수 있으며, 계량화된 정보수집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정보 수집 및 분석단계 전반에서 북한인권침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나) 지역 및 계층 간 차이 해석

북한은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지역과 계층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매우 상이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탈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국경지역과 강원도, 황해도 등

내지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이 속해 있는 계층에 따라 형벌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북한사회 현실상 뇌물로 처벌을 피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계층들은 주위인물들의 교양사업을 명목으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질적 연구 보완적 활용

인권침해 사례 정보는 대부분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단답의 형식을 띤다. 이는 침해의 내용을 코드화하여 통계처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성폭력’과 같은 분야의 정보는 질적 연구방식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sup>219)</sup> 여성폭력에 관한 질적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과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개인의 충격적 체험은 대부분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다. 정신적 상처와 결합된 성폭력의 경우 다양한 방어기제를 통해 망각되거나 분절화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신체화되거나 혹은 분절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인권의 정보를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즉 면접자의 증언을 통해 언어화된 사실만이 아니라 행간을 읽고 해석하는 가설추론적 텍스트 재구성 방법은 분절된 체험으로 존재하는 인권침해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분석과정의 협력체계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정에서 기관을 넘어선 제도적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분석관들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내부의 인력에 의존하며, 기관 간 정보경쟁 등으로 인해 민간기관 간의 협력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특히 대북방송사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북한 내 소식을 방송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 내용들이 검증절차 없이 단순히 북한내부의 사건사고 형식의 방식으로 보도되고, 이를 연합뉴스가 다시 받아서 보도함으로써

219) 이희영, “북한의 여성권 및 아동권 접근방법”, 국가인권위원회·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2008.9.



국내언론들에게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19일자 보도에서 “혜산시 송봉고등학교에 다니는 강모군 등 학생 3명이 중국에서 폭약을 들여오다 붙잡혀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국경도 일시 봉쇄됐다”면서 “왕덕역(김정일 전용역)으로 통하는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폭약을 밀반입했다는 소문 등이 돌고 있으나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북자 출신 다른 기관의 분석관에 의하면 폭약반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폭약사건 가담자가 “노동자 집안 출신의 자녀들”이나 “정확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는 중학교로 개칭되었는데 고등중학교로 언급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오히려 김정은 후계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상의식을 공고화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였다.<sup>220)</sup> 이와 유사하게 10월 19일자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당국이 당창건일에 김일성 사후 최대규모 ‘명절공급’을 하여 음주사고가 급증하고, 반체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또한 북한당국의 선전목적을 위한 역정보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sup>221)</sup> 연합뉴스가 NK지식인연대를 인용하여, 혜산시 내부 소식통이 김정은 후계체제관련 ‘곰 세 마리’ 노래를 패러디한 쪽지와 낙서가 오산덕중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보안당국이 ‘반동유인물’로 규정하여 수거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현실상 쪽지로 유포될 가능성이 낮으며, 화장실이 수세식도 아닐텐데 쪽지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검열을 화장실까지 확대했는가 하는 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혜산시 해방고등학교와 천진수담구역에서도 ‘곰세마리’, ‘새끼돼지, 어미돼지’ 낙서가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도는 인위적인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 내 소식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과 같은 대북방송이 역으로 북한의 선전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역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0) ○○○(민간단체 전문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워크숍, 2010.11.5).

221) 위의 토론.

### (3) 활용단계

#### (가) 정보공유 미흡

북한인권정보는 피해자 개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침해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발간된 보고서를 참고하고 인용하는 방식의 정보공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도 증언자의 보호를 위해 성명이나 인적사항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되는 정보의 원래 출처와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인권과 관련한 일반 북한정보들이 구체적인 언급없이 ‘하더라’는 식의 정보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를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정보는 각 개별기관이 별도의 탈북자 면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탈북자가 다수의 면접조사를 거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과 과장의 소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 (나)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북한정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 낮은 신뢰도는 인권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특별한 경험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한 교차확인 등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국내입국자들의 경우 입국초기 국가조사기관에서 ‘북한출신’임을 검증하기 위해 합동신문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내용은 교차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합동신문내용이 비밀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간기관과 공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기관이 북한 내 인권관련 첩보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협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순환되는 정보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유통한 전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신뢰도에 치명

적인 손상을 입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및 기관들이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북한의 소식을 전달하여 오고 있다.

## 나. 개선방향

### (1)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북한인권정보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의 북한인권정보들이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될 필요가 있다. 물론 통합관리시에는 보안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부처 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인권 관련 수집정보의 항목, 수집의 방식, 분석,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면접조사를 초기심문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종합 관리하는 것이 정보왜곡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반복되는 인권침해조사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초기 인권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함으로써 정부가 대북인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최근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부처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의 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조사하여,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 교차확인 다변화

북한인권정보의 교차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다변화하여 민간기관 간, 민간과 정부기관 간에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정기적으로 북한인권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간에 정보분석회의 방식의 협력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정보확인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인권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개별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정보분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정보해석의 정치화를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3) 정보공유 활성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들이 직접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가 환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고서 발간차원을 넘어서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통계의 경우에도 증언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북한인권침해 정보는 개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세부통계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1장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 제11장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 설문조사를 통해서

## 1. 설문조사 개요

이 설문 조사는 북한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설문 내용 전반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진 추천 방식으로 197명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설문에 응한 대상자는 140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X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정부기관 및 NGO단체 근무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북한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20년 이상이 19%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북한정보 관련 역할에 비추어볼 때는 정보의 분석(55%)과 활용(37%)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업무의 특성 상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lt;표 XI-1&gt; 설문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 특성별		비율(%)	응답자 특성별		비율(%)
연령별	30대	18%	역할별	수집	8%
	40대	46%		분석	55%
	50대	36%		활용	37%
소속별	정 부	18%	경력별	1년 미만	3%
	학계	46%		1년~3년	10%
	언론	10%		3년~5년	11%
	NGO	15%		5년~10년	16%
	기업	2%		10년 이상	41%
	기타	9%		20년 이상	19%

이 설문 조사는 2010년 6월 7일부터 30일까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설문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모두 3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인적 사항,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문항은 성별, 연령, 근무 기관, 업무 경력, 주요 관심 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정보의 수집에 대해 묻는 부분에서는,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그것에 대한 선호도 및 신뢰도 및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정보의 분석에 대한 질문은 북한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의 특성과 그것의 문제점 및 극복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정보의 활용 부분에서는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의 생산기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정보 생산기관의 영향력, 정보 관리 수준 및 공개와 교류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다음의 장에서는 북한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문 결과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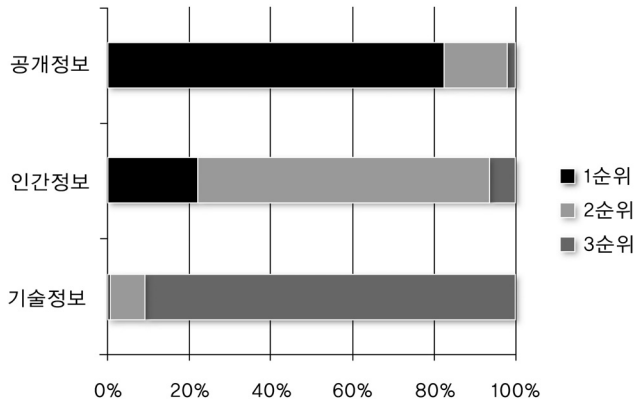
## 2. 북한정보 수집 실태

### 가. 북한정보 수집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요원 등 공작원이나 망명자, 여행객, 학술회의 참석 학자 등 인간 출처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의미하는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인공지능, 정찰항공, 도감청, 레이더 등 과학기술 장비를 동원하여 수집한 정보를 의미하는 기술정보(TECHINT: technical intelligence), 그리고 신문, 방송, 인터넷, 서적, 학술지, 학술논문, 국제회의의 결의문이나 협정 등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서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거쳐서 생산된 정보를 의미하는 공개정보(OSINT: open-source intelligence)가 그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정보 취득 방식 중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 <그림 XI-1>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응답자들은 공개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차적인 방법으로 인간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술정보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개정보의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에,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XI-1>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1순위 응답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정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79.3%로 나타났으며, 인간정보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0%로 나타났고, 기술정보의 경우는 0.7%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공개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차적으로 인간정보를 활용하는 현상은 응답자의 성별, 경력 등과 무관하게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소속기관 및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소속 기관별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공개정보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이 학계(90.8%), 정부(76%), NGO(61.9%), 언론(5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기업의 경우에는 인간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기업들은 자체적인 정보망을 활용하여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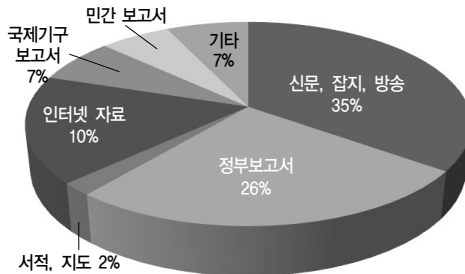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응답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정보의 분석과 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공개정보에 대한 의존도(각각 83.1%, 82.7%)가 가장 높은 반면에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는 인간정보를 통한 정보 취득의 비중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나. 공개정보 수집 실태

### (1)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공개정보의 출처

북한정보의 수집 방법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공개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신문, 잡지, 방송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정부보고서(26%), 인터넷 자료(17%)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국제기구 보고서(7%), 민간 보고서(6%), 서적·지도(2%)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XI-2>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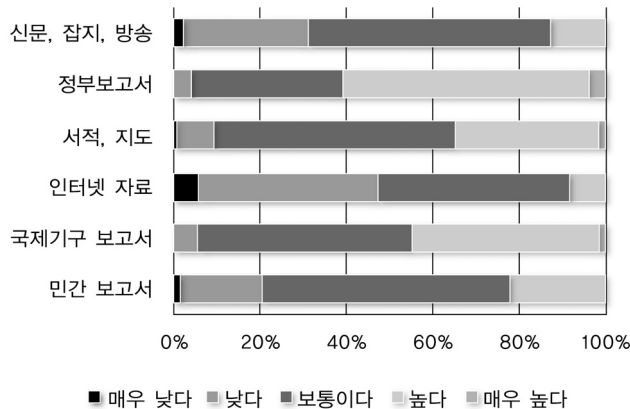
공개정보 출처에 대한 응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신문, 잡지, 방송을 이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학계(40%), NGO(38.1%), 언론(35.7%), 기업(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보고서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기업(66.7%), 정부(44%), 언론(35.7%) 순이다. 이외에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에서는 NGO(23.8%), 정부(20%), 학계(1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쪽 응답자는 정부보고서를 가장 많이(44%) 이용하고, 신문, 잡지, 방송(24%), 인터넷 자료(20%)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계는 신문, 잡지, 방송(40%), 정부보고서(20%), 인터넷 자료(15.4%)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언론계는 신문·잡지·방송(35.7%)과 정부보고서(35.7%)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는 신문, 잡지, 방송(38.1%)과 인터넷 자료(23.8%)를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정부보고서(66.7%) 신문, 잡지, 방송(33.3%)으로 나타나 기업과 정부에 근무하는 그룹들은 정부보고서에 우선적으로 의존하는 반면에, 학계와 언론계 그룹은 신문·잡지·방송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 공개정보의 신뢰성

북한정보를 다루는 그룹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개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서, 신뢰성이 ‘높다’ 이상인 응답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보고서가 60%를 상회하면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국제기구 보고서, 서적 및 지도와 민간보고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 신문, 잡지, 방송과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XI-3> 북한정보 수집에 이용되는 각 공개정보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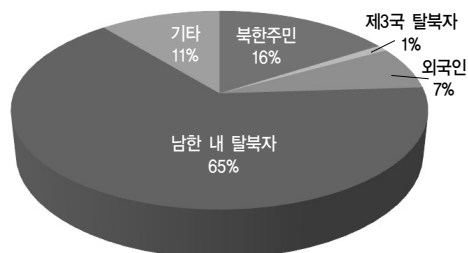
이 결과에서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으로는, 북한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알려진 신문·잡지·방송 및 인터넷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장 자주 활용되고 있는 공개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북한정보를 취급하는 그룹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인간정보 수집 실태

### (1)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인간정보의 출처

공개정보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간정보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남한 내 탈북자(65%)와 북한주민(15.7%)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외국인(6.4%)과 제3국 탈북자(1.4%)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살다 오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증언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4>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공개정보에 대한 활용에서 응답자의 소속 기관 간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과 학계의 응답자들은 남한 내 탈북자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84%, 75.4%를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NGO의 경우에는 남한 내 탈북자에 대한 의존도는 19%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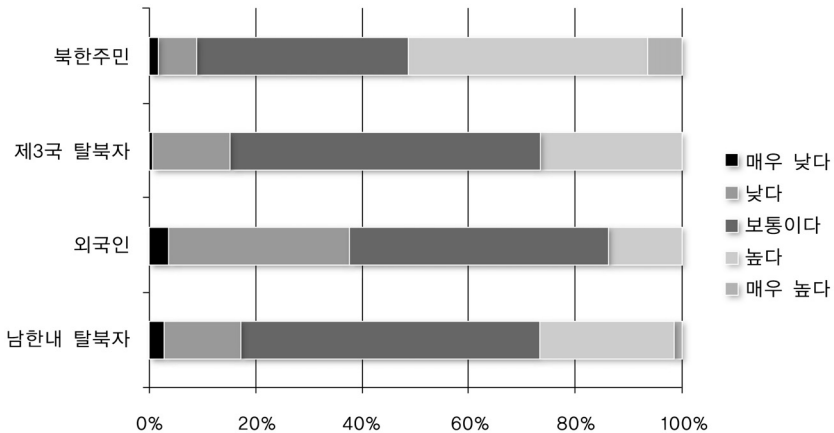
NGO는 북한주민을 통한 정보 취득의 비중이 71.4%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NGO들이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한주민(북한측 파트너)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정보의 분석과 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남한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는 북한주민들을 통한 정보 취득의 비중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 인간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

인간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이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높고 보았을 때, 북한 주민을 통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한 내 탈북자, 제3국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통한 정보의 신뢰성은 20% 미만으로 집계되어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림 지-5> 인간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



인간정보에 대한 신뢰성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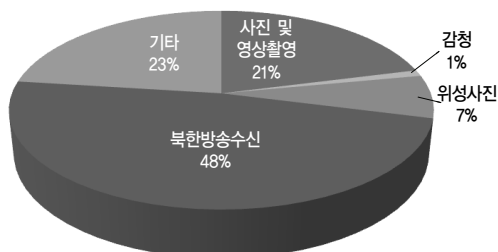
정보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표본이 출신성분이나 출신지역 등에서 북한주민들의 한 부분만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나 한국에서 취득한 정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기술정보 수집 실태

### (1)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기술정보의 출처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를 설문한 결과, 북한방송 수신을 통한 정보수집이 4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방송 수신을 통한 정보수집은, 실질적으로는 공개정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남북한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한적 그룹만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정보에 포함시켰다. 뒤를 이어 사진 및 영상촬영이 21.4%로나타난 반면에 위성사진(7.1%)과 감청(0.7%)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기타의 비율이 22.9%로 나타났는데 기타를 선택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술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외 북한 관련 문서 해독,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수집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XI-6>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기술정보를 이용하는 패턴은 근무 경력이나 업무 성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속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NGO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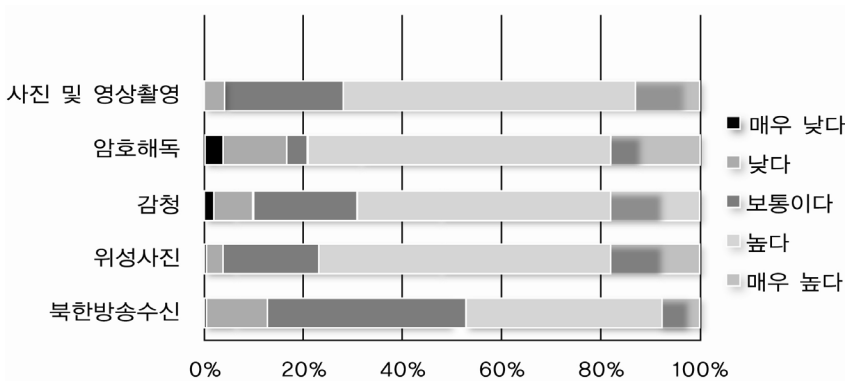
및 영상 촬영 자료를 가장 많이(42.9%)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NGO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북한방송 수신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은 28.6%로 다른 기관의 근무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 관련 NGO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북한에 출입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여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기술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

기술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을 측정한 결과,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암호해독이 80%가량 높은 신뢰성을 보였고, 위성사진, 사진 및 영상촬영 역시 70% 이상 높은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뒤이어 감청에 의한 정보, 북한 방송 수신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은 앞서 살펴본 공개 정보나 인간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북한정보 취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정보의 출처인 북한방송 수신과 사진·영상 자료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다른 기술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가장 덜 신뢰하는 기술정보의 취득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지-7> 기술정보를 통해 수집된 북한정보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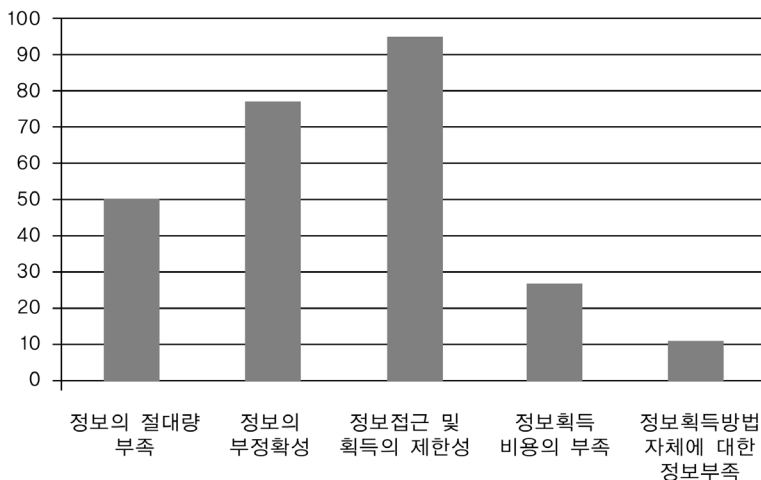
## 마. 북한정보 수집 실태에 대한 평가

### (1) 북한정보 수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북한정보 수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복수 응답 질문에 대해, 정보 접근 및 획득의 제한성을 선택한 응답이 90%이상을 기록하여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정보의 접근성 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보의 부정확성(75%이상), 정보의 절대량 부족(50%) 순으로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그 외에 북한정보 수집과정의 어려움으로 정보획득 비용의 부족(25%)과 정보획득 방법자체에 대한 정보 부족(10%)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향후 북한정보 수집과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림 XI-8> 북한정보 수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2)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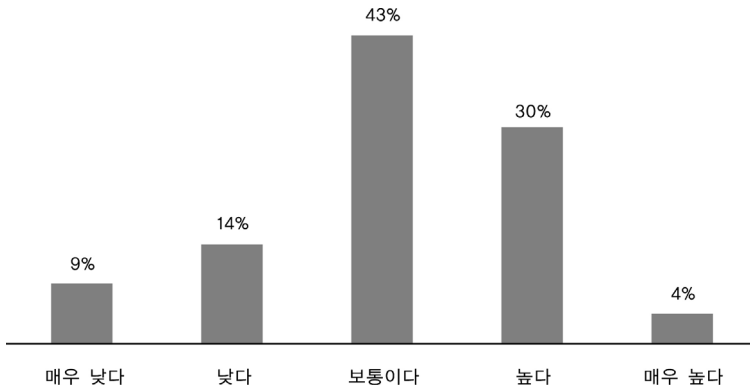
본인이 속한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다’(4%), ‘높다’(30%), ‘보통이다’(43%), ‘낮다’(14%), ‘매우 낮다’(9%)로 나타나 응답자의 34%가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23%는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정보를 다루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북한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 양호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기관(52%)과 언론계(42.9%)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에 학계(23%)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GO는 38.1%로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기업의 응답자(3명)는 너무 적어서 해석이 곤란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이점도 발견되었는데, 정보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63.6%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북한정보의 분석(29.9%)과 활용(34.6%) 업무를 수행하는 응답자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XI-9>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수집능력



### (3) 북한정보 수집 시 이용하는 각 기관 북한정보의 신뢰성

북한정보 수집 시 이용하는 각 기관 북한정보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성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기관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기업, 학계, NGO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해서는 10%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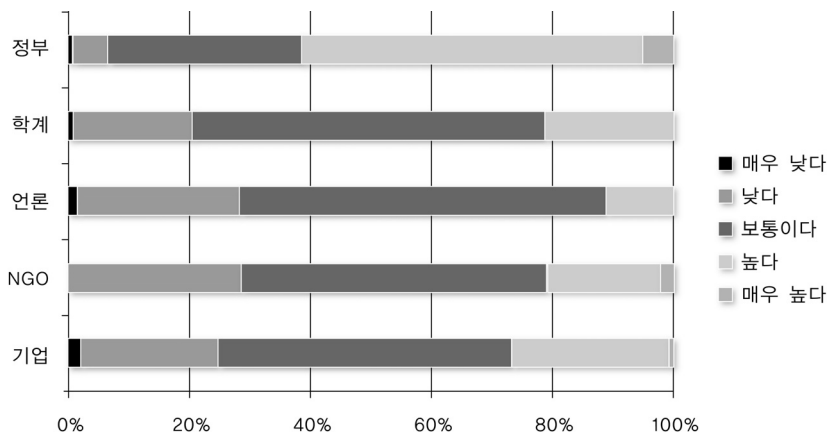


높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상의 평가를 한 응답만을 대상으로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한 비중은 언론계(92.9%), 정부기관(80%), 학계(67.2%), NGO (6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6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언론계와 정부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현상은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정부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이어 NGO가 생산한 정보가 13.2%로 2위를 차지한 점이다.

<그림 XI-10> 북한정보 수집시 이용하는 각 기관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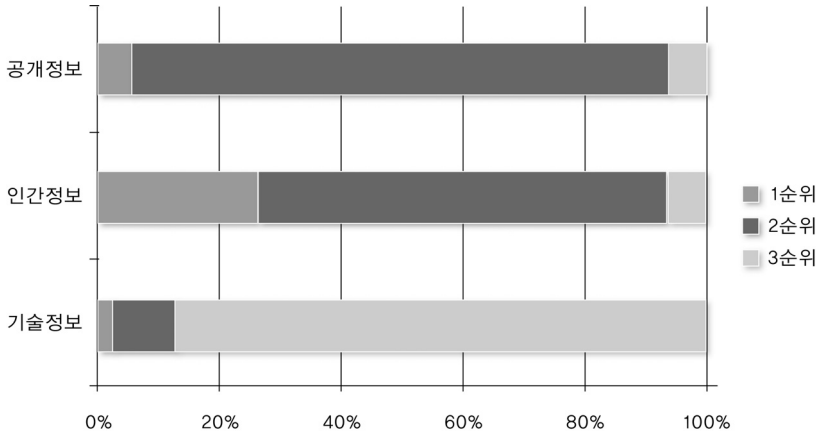
### 3. 북한정보 분석 실태

#### 가. 북한정보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북한정보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는 공개정보(OSINT)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응답하였다. 2순위는 인간정보(HUMINT), 3순위는 기술정보(TECHINT)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묻는 앞 부분의 질문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XI-II> 북한정보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1순위 응답만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심층 분석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기관(80%)과 학계(84.6%) 응답자의 대다수가 공개정보를 선택한 반면에 NGO(36.8%)와 기업(33.3%)은 상대적으로 소수가 공개정보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대신에 인간정보를 1순위로 선택한 비중이 NGO(57.9%), 기업(66.7%)으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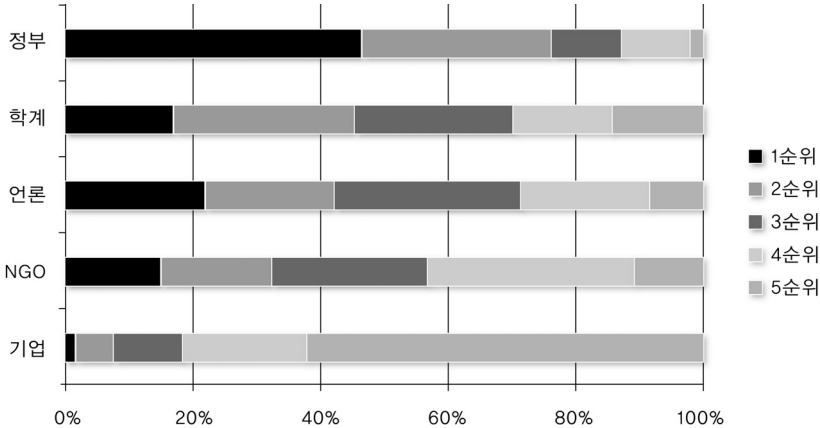
응답자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도 1순위 응답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의 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정보의 분석을 위해 인간정보를 주로(80%) 이용한 반면에 분석업무와 활용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는 공개정보를 각각 78.4%, 76.6%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나. 북한정보 분석 시 이용하는 기관의 활용도

북한정보 분석 시 이용하는 기관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활용하는 기관은 언론이 차지했다.

그러나 1순위, 2순위를 합친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학계가 언론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4순위는 NGO, 5순위는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지-12> 북한정보 분석 시 이용하는 기관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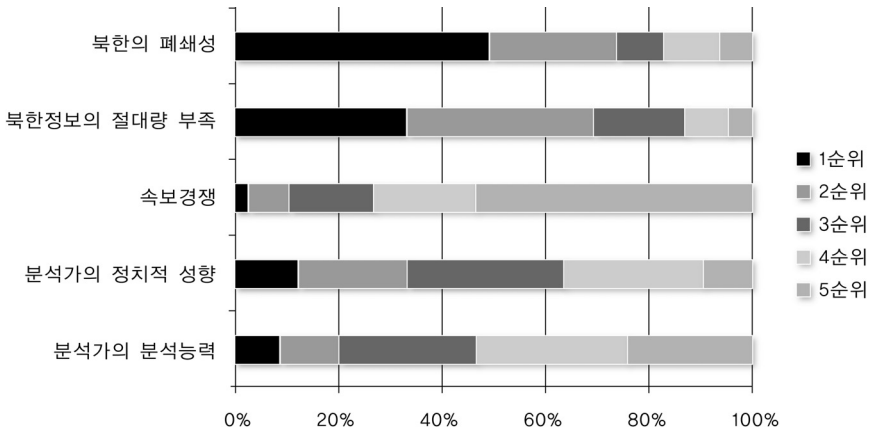


설문 결과의 1순위 응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소속 기관별로 북한 정보의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72%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12%가 언론의 정보, 8%가 NGO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학계는 정부의 정보에 대한 우선적인 활용도가 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계(26.2%), 언론(21.5%), NGO(10%)의 순으로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언론계는 78.6%가 정부의 정보를 가장 먼저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계(14.3%), 언론(7.1%)이 생산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NGO의 경우에는 정부 정보에 대한 우선적인 의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15.8%에 불과하며 학계정보에 대한 의존도(10.5%)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언론이나 NGO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공히 36.8%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 다. 북한정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북한정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 가량이 북한의 폐쇄성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북한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실상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북한정보의 절대량 부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정보 분석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북한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순위로는 분석가의 정치적인 성향, 4순위는 분석가의 분석 능력으로 연구자의 개인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의 속보 경쟁이 선택되었다.

<그림 XI-13> 북한정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북한정보 분석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소속기관 별 응답의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정보의 절대량 부족을 그 이유로 선택한 비중이 정부기관(88%), 학계(64.1%), 언론(85.7%), NGO(85%)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학계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오류의 원인을 제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정보의 절대량 부족 이외에, '분석가의 정치적 성향'(18.8%)과 '분석가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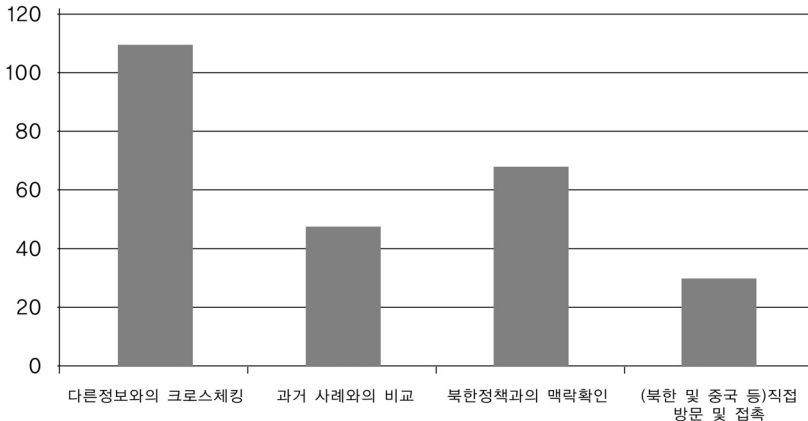
능력'(14.1%)을 분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로 선택하였다.

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집업무'의 경우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정보의 절대량 부족을 그 이유로 선택한 비중은 90.9%, '분석업무'는 72.4%, '활용업무'는 82%가 선택하였다. 부차적인 이유로는 수집업무 응답자는 속보경쟁(9.1%)을 꼽았고, 분석업무 응답자는 '분석가의 정치적 성향'(14.5%)과 '분석가의 분석능력'(11.8%)을 지적하였다. 활용업무의 경우에는 분석가의 정치적 성향(10%)을 선택하였다.

## 라. 북한정보를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북한정보를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복수응답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와의 교차분석'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14>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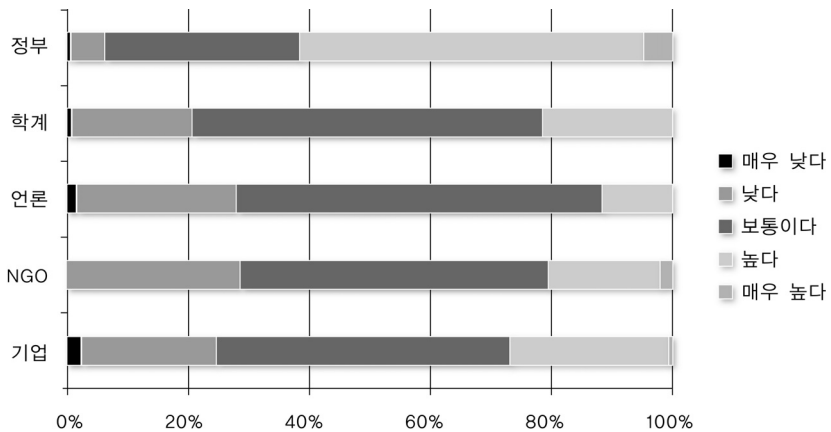
이어 '북한정책과의 맥락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는 '과거 사례와의 비교'가 선택되었으며, 네 번째로는 '북한 및 중국 등 직접 방문 및 접촉'을 통하여 정확성을 높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 ‘북한주민에게 연락’하거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통한 사실 확인,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 마.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른 기관에 비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15>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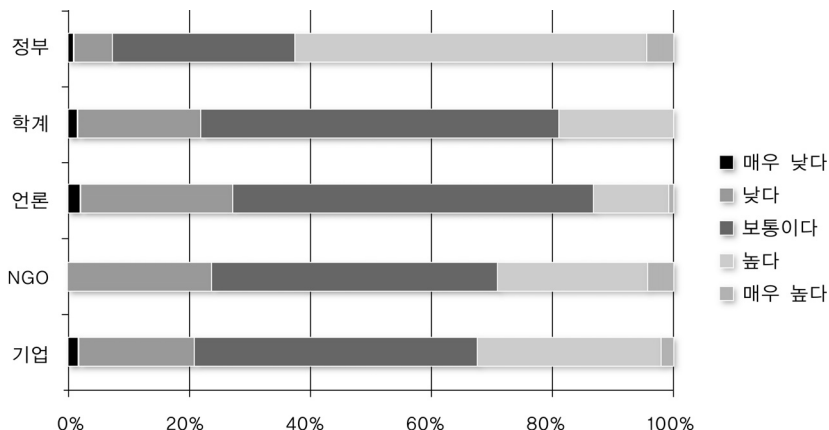
신뢰성이 ‘높다’ 이상으로 응답한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2순위는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학계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북한정보 분석 시 기관의 활용도에서 기업이 가장 낮은 활용도를 차지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북한정보 분석 시, 기업을 활용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분석한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를 이어 4순위는 NGO, 5순위는 언론이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정보 수집 시 이용하는 각 기관 북한정보의 신뢰성을 묻는 문항의 결과와 유사하다.

## 4. 북한정보 활용 실태

### 가.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신뢰성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신뢰성이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기업, NGO, 학계, 언론의 순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질문한 북한정보 수집 시 이용하는 각 기관 북한정보의 신뢰성,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과 유사한데, 이것은 수집, 분석, 활용의 정보 순환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와 정부에 의한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16>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신뢰성



1순위 응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신이 속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정부기관의 응답자는 정부기관의 신뢰성이 제일 높다는 응답 비율이 80%를 차지하였으며, 학계 응답자는 정부(67.7%)에 이어 학계의 신뢰성이 제일 높다는 응답 비중이 10.8%로 평가하였다. 또한 NGO 응답자들도 정부(52.4%)에 이어 NGO를 선택한 비중이 23.8%를

기록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편향성을 보이는 집단은 언론으로, 100% 자신들(언론계)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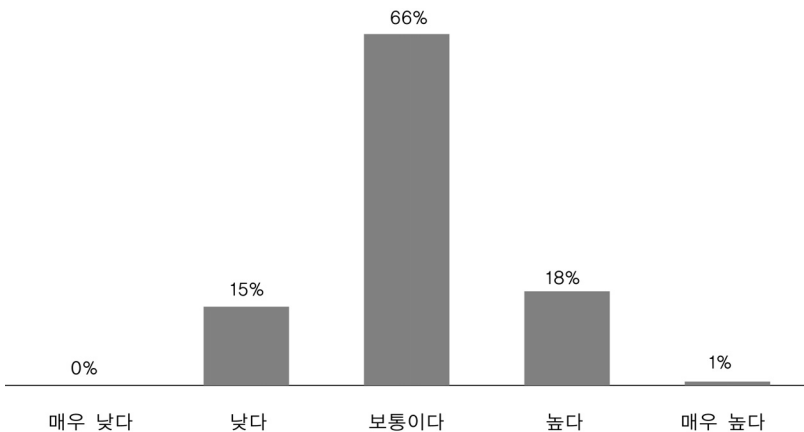
업무 특성별 응답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수집 업무의 경우에는 정부(72.7%)에 이어 NGO(18.2%)를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보 활용 업무에서도 정부 75%, NGO 13.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정보분석 업무에서는 정부(63.6%)에 이어 학계(13%)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 나. 북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 (1) 국내에서 활용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국내에 활용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높다’는 의견은 18%, ‘낮다’는 의견은 1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소수인 1%만이 ‘매우 높다’고 나타내고 있어 국내에 활용되는 북한정보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XI-17> 국내에 활용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내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도 정부, NGO, 학계, 언론의 순으로 높게 나고 있다. 정부기관의 응답 중에서 ‘높다’ 이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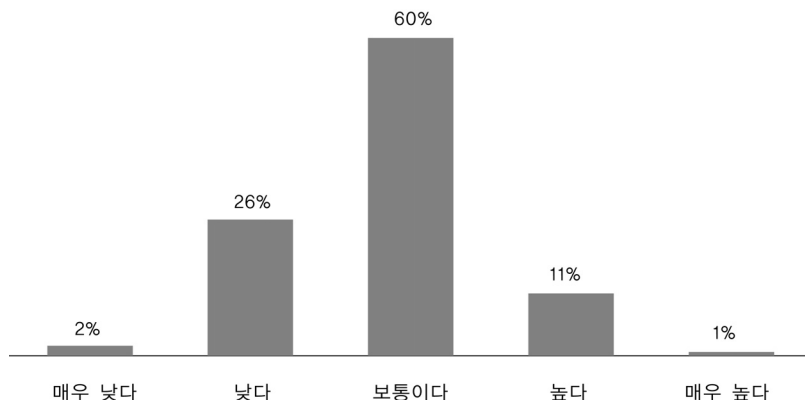
차지하는 비중이 32%이며, NGO의 응답 중에서는 ‘높다’ 이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23.8%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학계는 ‘높다’ 이상이 15.4%를 차지하였고, 언론계에서는 높다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 특성과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및 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국내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높다’ 이상을 선택한 비중이 정보 수집(27.3%), 정보 분석(11.7%), 정보 활용(26.9%)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응답자들이 국내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국내에서 배포되는 북한정보의 정확성

국내에 배포되는 북한정보의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보통’이라는 의견이 60%로 다수 의견을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낮다’는 의견이 26%, ‘높다’는 의견은 11%, ‘매우 낮다’는 의견이 2%, ‘매우 높다’는 의견이 1%를 차지하여 국내에 배포되는 북한정보의 정확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정부의 신뢰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나 점은 북한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18> 국내에 배포되는 북한정보의 정확성



북한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설문결과를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더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이 정부(20%), 학계(32.3%), 언론(42.9%), NGO(15%)로 나타나 언론계의 불신이 가장 크고 뒤이어 학계, 정부, NGO 순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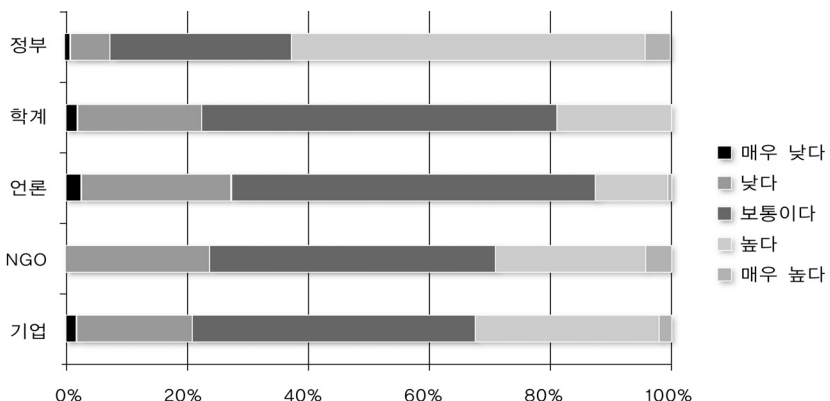
업무 특성과 관련해서는 정보 분석(29.9%), 정보 활용(26.9%), 정보 수집(18.2%) 순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여전히 정보 수집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의 국내 북한정보에 대한 견해가 가장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신뢰성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의 신뢰도가 6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기업의 신뢰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3순위는 NGO, 4순위는 학계로 나타났고, 언론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언론이 활용하고 있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이 가장 낮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국내 언론의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19>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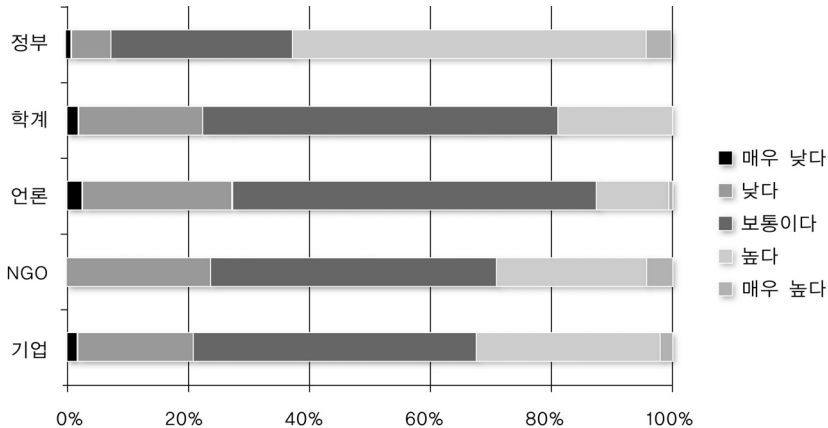
## 다.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 (1) 각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각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를 차지한 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3순위는 NGO, 4순위는 학계로 밝혀졌고, 마지막은 언론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설문 결과와 앞에서 언급한 “북한정보 수집 시 이용하는 각 기관 북한정보의 신뢰성”이나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을 묻는 설문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 기관이 생산하거나 분석에 활용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20>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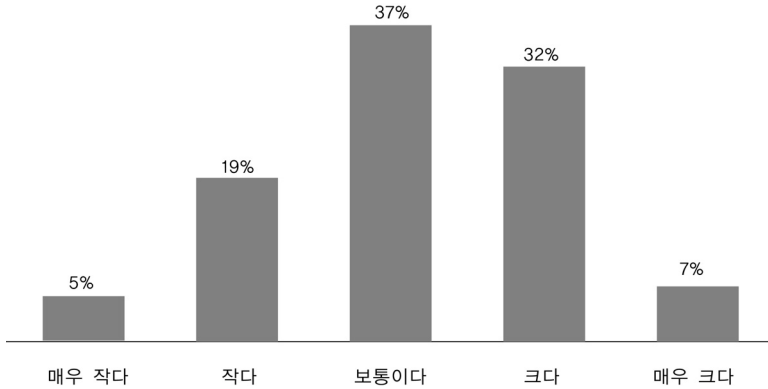


### (2)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응답자가 소속한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크다’는 의견이 32%, ‘작다’ 19%, ‘매우 크다’ 7%, ‘매우 작다’ 5%로 나타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대북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적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지-21>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소속 기관별로 ‘크다’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 응답자는 72%, 학계는 32.3%, 언론계는 21.4%, NGO는 28.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생산된 북한정보가 대북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정부기관이 가장 높고 언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 업무별 ‘크다’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집업무는 36.4%, 분석업무는 40.3%, 활용업무는 36.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들이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북한정보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라.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와 주 활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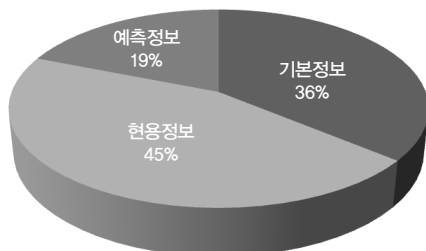
### (1) 주로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

응답자가 주로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는 기본정보, 현용정보, 예측정보 3가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았다. 여기서 기본정보란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수집, 분석한 첩보를 의미하며, 현용정보는 국익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예측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를 말한다.

응답 결과, 현용정보를 주로 생산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기본정보가 3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정보를 주로 생산한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그림 XI-22> 주로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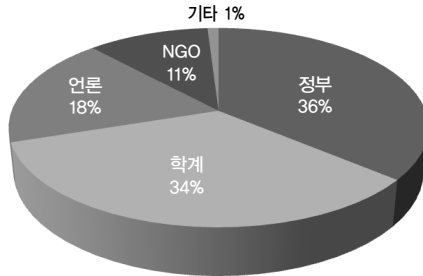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특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기관 응답자들은 현용정보의 생산(52%)을 주로하면서 기본정보와 예측정보의 생산은 24% 동일한 비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계 응답자들은 기본정보(40.6%), 현용정보(39.1%), 예측정보(20.3%) 순으로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계 응답자들은 현용정보의 비중이 38.5%로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기본정보와 예측정보의 비중도 동일하게 30.8%에 달해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NGO 응답자는 순으로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응답자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주로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수집업무 담당자들은 현용정보(54.5%), 예측정보(27.3%), 기본정보(18.2%) 순으로 정보를 생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분석업무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현용정보(46.1%), 기본정보(35.5%), 예측정보(18.4%) 순으로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업무 담당자들은 기본정보(43.1%), 현용정보(39.2%), 예측정보(17.6%) 순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응답자에게 생산한 정보가 주로 활용되는 곳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라고 응답한 비중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응답은 학계(34%)가 차지하였다. 이어 3순위는 18%인 언론으로 나타났고, 4순위는 NGO(11%)로 밝혀졌다.

<그림 XI-23>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이 결과를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산된 정보의 주 사용처가 자신이 속한 기관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기관 응답자는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사용되는 곳을 정부(84%), 학계(12%), NGO(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계의 응답자는 학계(52.3%), 정부(35.4%), 언론(7.7%), NGO(1.5%)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계의 응답자는 언론(85.7%)과 학계(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NGO의 경우에는 NGO(61.9%), 언론(23.8%), 학계(14.3%) 순으로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응답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기업에서 사용된다고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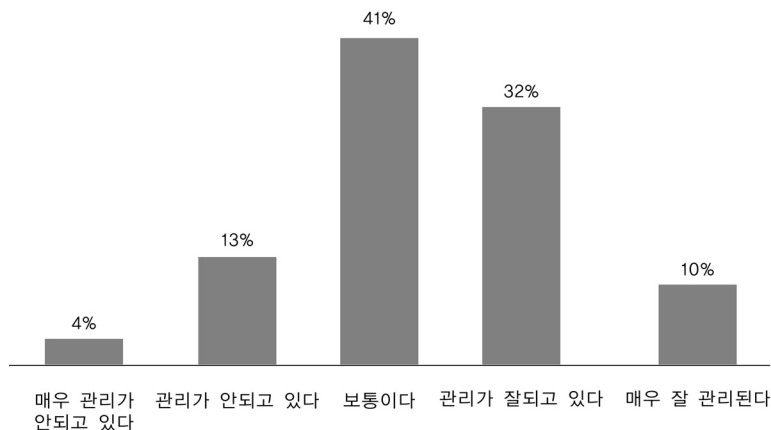
이에 비해, 업무 성격의 차이에 따른 활용처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수집업무 담당자가 생산한 정보는 언론(54.4%), NGO(27.3%), 정부(9.1%), 학계(9.1%)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분석업무 담당자가 생산한 정보는 학계(42.9%), 정부(36.4%), 언론(10.4%), NGO(5.2%), 기업(1.3%) 순으로 활용처를 밝히고 있다. 활용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정부(38.5%), 학계(23.1%), 언론(19.2%), NGO(1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마.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및 교류 현황

### (1)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현황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1%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32%를 차지하였으며,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의견은 13%로 나타났다. 뒤이어 ‘잘 관리된다’는 응답이 10%, ‘매우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의견은 4%로 밝혀졌다. 따라서 소속된 기관의 북한정보의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17%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속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현황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XI-24>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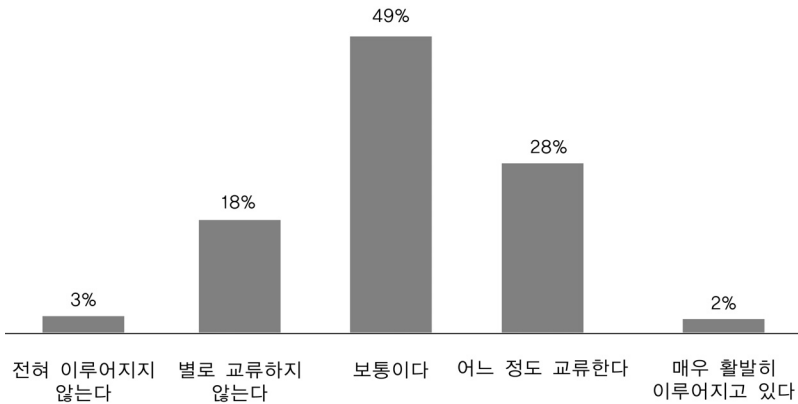
소속 기관별로 긍정적인 평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은 64%, 학계 43.1%, 언론 7.1%, NGO 19%, 기업 10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22)</sup> 이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기업은 정보관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철저한 반면에 NGO와 언론기관의 정보관리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222) 기업부문의 설문대상자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문결과와 신뢰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소속 기관(개인)과 타 기관과의 북한정보 교류 현황

소속 기관(개인)과 타 기관과의 북한정보 교류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9%로 나타났다. 또한 ‘어느 정도 교류한다’는 의견이 28%, ‘별로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4순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3%로 나타났으며,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2%로 나타났다.

<그림 XI-25> 소속 기관(개인)과 타 기관과의 북한정보 교류현황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에 소속된 응답자의 북한정보 교류 현황에 대한 반응은 정부기관의 경우 32%가 어느 정도 이상은 교류한다고 밝혔다. 학계는 33.8%, 언론계는 14.3%, NGO는 38.1%, 기업 33.3%가 어느 정도 이상은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언론계에서 정보교류가 가장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계에서 정보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실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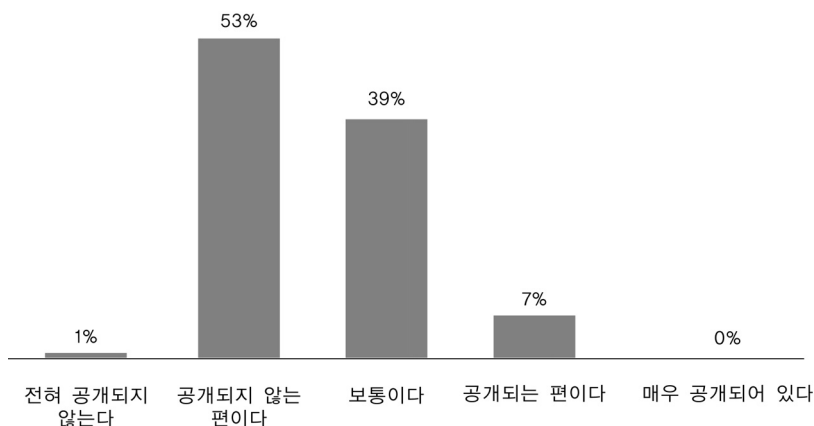
업무 특성에 따른 차이도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정보 수집업무 그룹에서는 36.4%, 정보 분석업무 그룹에서는 32.2%, 정보 활용업무 그룹에서는 26.9%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를 활용하는 그룹에서 북한정보의 교류가 가장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바.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53%가 넘는 응답자가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39%,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은 7%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이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26>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32%, 학계 60%, 언론계 85.7%, NGO 33.4%, 기업 6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소속기관인 정부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NGO의 경우 타 소속 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정부기관이 NGO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청된다. 반면에 언론계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NGO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북한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NGO와 언론에 대한 접근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가 업무 성격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결과, 수집업무의 경우 27.3%에 불과한 반면에, 분석업무 58.4%, 활용업무 5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의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외부기관의 정보 수집업무에 그리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사.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의 수정을 위한 환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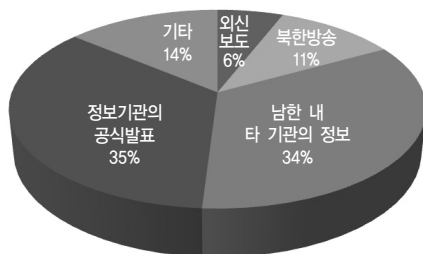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의 오류 및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환류과정을 거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5%가 ‘정부기관의 공식발표’를 꼽았다. 이와 함께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가 34%로 정부기관의 공식발표와 매우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북한방송’이 11%로 4순위, ‘외신보도’가 6%로 나타났다. 이외에 14%를 차지한 기타 의견으로는 ‘4가지 과정 모두를 통해 환류된다’, ‘수정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명확한 사실이 드러날 때 수정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소속기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기관 응답자는 ‘정부기관의 공식발표’(44%),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36%)로 나타났으며, 학계는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38.5%), ‘정부기관의 공식발표’(27.7%)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언론계는 ‘정부기관의 공식발표’(64.3%), 북한방송(21.4%)을 주로 이용하고, NGO는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38.1%), 북한방송(23.8%), ‘정부기관의 공식발표’(19%) 등을 주로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징적인 현상으로 언론계와 NGO에서는 북한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북한방송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기관 종사자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통되고 있는 북한정보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응답자의 담당업무 차이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기관의 공식발표’와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수집업무 63.7%, 분석업무 68.9%, 활용업무 69.2%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방송을 이용하는 비중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집업무 27.3%, 분석업무 7.8%, 활용업무 11.5%로 편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룹들에서는 기존의 북한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다른 업무 담당자들에 비해서는 북한방송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지-27>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의 수정 방법



## 5. 종합 평가

북한정보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주요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관심분야별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분야별 설문 결과를 취합하는 본 장의 특성으로 인해 순위를 요구한 분석 실태 관련 설문결과는 종합평가에서 제외하였다.

### 가. 북한정보의 수집 실태

#### (1) 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신문·잡지와 방송자료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관심분야별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정치분야의 경우 신문·잡지와 방송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제분야의 경우에는 정부보고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인터넷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XI-2>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

	신문·잡지, 방송	정부 보고서	서적, 지도	인터넷자료	국제기구 보고서	민간 보고서	기타	합계
정치	55%(11)	15%(3)	0%(0)	15%(3)	0%(0)	10%(2)	5%(1)	100%(20)
외교	35%(7)	30%(6)	0%(0)	20%(4)	10%(2)	0%(0)	5%(1)	100%(20)
군사	45%(9)	40%(8)	5%(1)	0%(0)	0%(0)	10%(2)	0%(0)	100%(20)
대남	35%(7)	10%(2)	0%(0)	20%(4)	15%(3)	10%(2)	10%(2)	100%(20)
사회·문화	40%(8)	10%(2)	5%(1)	30%(6)	5%(1)	5%(1)	5%(1)	100%(20)
인권	25%(5)	30%(6)	0%(0)	20%(4)	15%(3)	0%(0)	10%(2)	100%(20)
경제	10%(2)	50%(10)	5%(1)	15%(3)	0%(0)	5%(1)	15%(3)	100%(20)
합계	245	185	15	120	45	40	50	140

( )은 응답자 수

**(2) 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관심분야에 관계없이 남한내 탈북자를 선택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회·문화분야, 인권분야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인권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XI-3>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

	북한주민	제3국 탈북자	외국인	남한내 탈북자	기타	합계
정치	10%(2)	5%(1)	5%(1)	70%(14)	10%(2)	100%(20)
외교	0%(0)	0%(0)	15%(3)	70%(14)	15%(3)	100%(20)
군사	10%(2)	0%(0)	5%(1)	80%(16)	5%(1)	100%(20)
대남	10%(2)	0%(0)	5%(1)	70%(14)	15%(3)	100%(20)
사회·문화	25%(5)	5%(1)	0%(0)	50%(10)	20%(4)	100%(20)
인권	30%(6)	0%(0)	0%(0)	65%(13)	5%(1)	100%(20)
경제	25%(5)	0%(0)	15%(3)	50%(10)	10%(2)	100%(20)
합계	110	10	45	455	80	140

( )은 응답자 수

### (3) 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정치분야는 북한방송을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와 인권분야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사진 및 영상촬영 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XI-4>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

	사진 및 영상촬영	암호해독	감청	위성사진	북한방송 수신	기타	합계
정 치	20%(4)	0%(0)	0%(0)	0%(0)	65%(13)	15%(3)	100%(20)
외 교	15%(3)	0%(0)	0%(0)	5%(1)	55%(11)	25%(5)	100%(20)
군 사	15%(3)	0%(0)	0%(0)	5%(1)	50%(10)	30%(6)	100%(20)
대 남	15%(3)	0%(0)	0%(0)	5%(1)	50%(10)	30%(6)	100%(20)
사회·문화	35%(7)	0%(0)	0%(0)	5%(1)	45%(9)	15%(3)	100%(20)
인 권	25%(5)	0%(0)	5%(1)	5%(1)	35%(7)	30%(6)	100%(20)
경 제	25%(5)	0%(0)	0%(0)	25%(5)	35%(7)	15%(3)	100%(20)
합 계	150	0	1	50	335	160	140

( )은 응답자 수

## 나. 북한정보의 활용 실태

### (1) 응답자가 생산하는 정보의 성격

대체적으로 기본정보와 현용정보를 생산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치, 외교, 군사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측정보를 생산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3개 분야에서는 분야의 속성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다 중요한 정보로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회·문화와 인권분야에서는 예측정보를 생산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미래 예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XI-5> 응답자가 생산하는 정보의 성격

	기본정보	현용정보	예측정보	무응답	합계
정 치	40%(8)	35%(7)	25%(5)	0%(0)	100%(20)
외 교	25%(5)	40%(8)	35%(7)	0%(0)	100%(20)
군 사	25%(5)	50%(10)	20%(4)	5%(1)	100%(20)
대 남	30%(6)	55%(11)	15%(3)	0%(0)	100%(20)
사회·문화	45%(9)	45%(9)	10%(2)	0%(0)	100%(20)
인 권	50%(10)	40%(8)	10%(2)	0%(0)	100%(20)
경 제	40%(8)	40%(8)	15%(3)	5%(1)	100%(20)
합 계	255	305	130	2	140

( )은 응답자 수

(2) 응답자가 생산한 정보의 활용처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를 묻는 질문에서는 크게 3가지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정부, 학계, 언론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정치, 외교, 경제분야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정부와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된다고 밝힌 군사, 대남, 사회·문화분야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권분야로 NGO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XI-6> 응답자가 생산한 정보의 주 활용처

	정부	학계	언론	NGO	기업	기타	합계
정 치	30%(6)	40%(8)	30%(6)	0%(0)	0%(0)	0%(0)	100%(20)
외 교	40%(8)	25%(5)	30%(6)	0%(0)	0%(0)	5%(1)	100%(20)
군 사	45%(9)	35%(7)	10%(2)	5%(1)	0%(0)	5%(1)	100%(20)
대 남	45%(9)	30%(6)	0%(0)	15%(3)	0%(0)	10%(2)	100%(20)
사회·문화	35%(7)	45%(9)	15%(3)	5%(1)	0%(0)	0%(0)	100%(20)
인 권	15%(3)	25%(5)	5%(1)	50%(10)	0%(0)	5%(1)	100%(20)
경 제	35%(7)	30%(6)	30%(6)	0%(0)	5%(1)	0%(0)	100%(20)
합 계	49	46	24	15	1	5	140

( )은 응답자 수

### (3)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대남분야와 경제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사실은 군사분야의 응답자들은 가장 전형적인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평가가 고르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XI-7>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공개된 편이다	매우 공개되어 있다	합계
정 치	5%(1)	20%(4)	35%(7)	35%(7)	5%(1)	100%(20)
외 교	0%(0)	25%(5)	50%(10)	25%(5)	0%(0)	100%(20)
군 사	10%(2)	15%(3)	35%(7)	25%(5)	15%(3)	100%(20)
대 남	5%(1)	20%(4)	30%(6)	40%(8)	5%(1)	100%(20)
사회·문화	15%(3)	10%(2)	45%(9)	25%(5)	5%(1)	100%(20)
인 권	0%(0)	20%(4)	35%(7)	35%(7)	10%(2)	100%(20)
경 제	0%(0)	25%(5)	30%(6)	40%(8)	5%(1)	100%(20)
합 계	7	27	52	45	9	140

( )은 응답자 수

### (4) 유통된 정보가 수정되는 과정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와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를 선택한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는 북한방송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교, 대남, 인권 분야에서는 외신보도를 통해서 기존정보를 수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외교·인권분야의 경우에는 외신이 관심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발견된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외신보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외교분야에서는 북한방송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표 XI-8> 유통된 정보가 수정되는 환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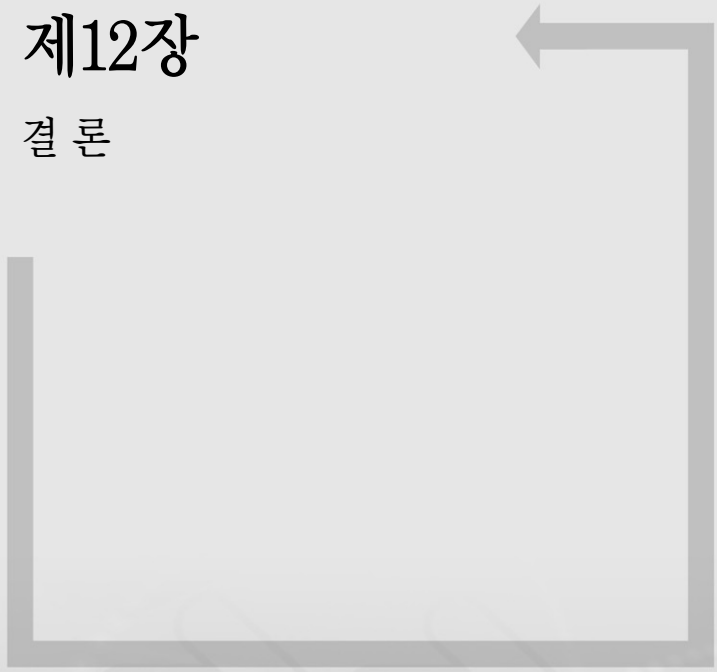
	외신보도	북한방송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	기타	합계
정 치	5%(1)	10%(2)	30%(6)	45%(9)	10%(2)	100%(20)
외 교	10%(2)	0%(0)	45%(9)	35%(7)	10%(2)	100%(20)
군 사	5%(1)	5%(1)	25%(5)	55%(11)	10%(2)	100%(20)
대 남	10%(2)	15%(3)	25%(5)	30%(6)	20%(4)	100%(20)
사회·문화	0%(0)	15%(3)	30%(6)	40%(8)	10%(2)	100%(20)
인 권	10%(2)	10%(2)	45%(9)	10%(2)	30%(6)	100%(20)
경 제	0%(0)	20%(4)	35%(7)	30%(6)	15%(3)	100%(20)
합 계	8	15	47	49	21	140

( )은 응답자 수



# 제12장

## 결론



# 제12장

## 결론

### 1. 북한정보체계 영향 요인

#### 가.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변화는 북한정보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남북한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영역에서 교류협력이 급증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여 간의 시기는 정부, 민간, 언론, 학계 등 북한정보주체가 다차원적으로 확장된 시기였다. 또한, 정보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치 중심의 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의 저변을 확대하게 된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감소되면서 직접 접촉을 통한 정보 수집, 분석, 활용에서 우회 내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이 강화되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지원, 경험 관련 단체, 기관 등을 통한 정보 생산은 축소된 반면, 정보원 등을 통한 우회적, 간접적인 정보 획득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말 현재 2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정보 접근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북한정보 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개선기에는 경험 및 금강산·개성 관광 등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가 확대되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기에는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영역의 변화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정보 수요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통로의 변화에 따라 수집 가능 정보의 영역이 달라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나. 북한상황

북한체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북한내부상황의 변화는 북한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폐쇄성 정도는 정보의 희소성 및 특정정보의 쏠림현상을 현상을 야기

시켜 북한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왜곡될 소지를 갖는다. 또한 희소한 정보를 선점하려는 경쟁적 수집, 분석, 활용 단계가 강화되므로 정보의 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내부의 통제 상황에 따라 정보의 양과 질적 수준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면, 국경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사를 위해 오고가는 북한주민을 통해 수집하게 되는 정보 수집도 용이치 않게 된다. 결국 정보 수집량이 줄어들게 되고, 북한의 의도적 역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다. 국제관계

북한정보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적 배경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북·중 교류 증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은 북한정보 주체, 영역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북한정보 주체로서의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성장과 정보 영역에 있어 인권, 주민생활 영역으로까지 구체적 정보 수집, 분석,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 내, 한국 내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는데, 국무부 예산항목과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에서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NGO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NED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은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가 중심이 된 북한정보 매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해당되며, 대북 정보 내지 방송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로 Daily NK,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Daily NK, 열린북한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최근 북한정보활동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주목되고 있는바, 이들 단체의 성장 배경으로 미국 재정 지원이 무관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정보화되고 활용되어 북한정보 영역이 사회문화, 인권 영역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권 단체로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포

함되어 있어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보 영역 확대를 촉진하는 배경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2. 북한정보체계 특성

### 가. 북한정보체계 현황

#### (1) 영향요인의 다변화와 거버넌스 필요성 증대

최근 10여년간 남북관계변화 및 정권교체,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외적 요인 등 북한정보체계와 관련된 요인의 다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와 남북한 양자의 국내적 요인, 그리고 국제정세는 북한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4요인의 복합적 연계구조와 상황적 변화는 북한정보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보수집, 분석과 활용체계의 우선순위 및 평가에 있어 변화를 야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세변화 및 정보활용 주체 및 해석권자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북한정보의 생산과 활용, 정보생산 주체의 중요도가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정보의 다변화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와 특정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라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있어서 불균형 구조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북한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있어 양적 발전과 아울러 질적 발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구심점(control tower)의 마련과 아울러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 (2) 북한정보체계의 불균형적 발전

최근 북한정보는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 차원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정보의 절대량 증가, 정보생산 주체의 다변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도의 증가 등 북한정보와 관련된

양적인 발전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보의 왜곡과 정치적, 경제적 의도에 의한 경쟁적 과잉화, 신뢰성확인 체계의 미비 등 질적 수준의 제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향후 북한정보의 중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

### (3) 북한정보의 대중화

남북관계의 진전과 아울러 북핵 문제 등 민감한 이슈의 증대는 북한정보의 생산과 소비 및 환류에 있어서 대중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북한의 권력체계변화 등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소비는 안보시스템과 소수정책결정자에게 국한되는 문제였으나, 현재는 대중적 차원의 관심의 대상으로 변화했다. 북핵실험과 북한의 후계체제, 그리고 천안함 피격 침몰사건 같은 경우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대중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피격 침몰사건은 북한관련 정보의 대중화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대중적 관심의 폭발적 증대와 아울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전문적 정보들이 범람함으로써 국가정보체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공신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생산과 환류의 과정은 공식적인 국가의 북한정보체계에 다시 부담으로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북한정보체계의 대중화와 아울러 새로운 고비용구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정보의 대중화에 부응하는 신뢰성, 전문성의 확대 및 정보오류의 극복을 위한 정교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나. 전문가 조사결과

### (1) 북한정보의 수집 실태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공개정보의 종류의 경우 전체적으로 신문·잡지와 방송자료를 활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특징의 경우 정치분야는 신문·잡지와 방송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제분야는 정부보고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인터넷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인간정보의 종류의 경우 관심분야에 관계없이 대체로 남한내 탈북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분야, 인권분야 및 경제분야의 경우 북한주민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권분야의 경우 북한주민들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북한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술정보의 경우 정치분야는 북한방송을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와 인권분야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사진 및 영상촬영 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정보의 활용 실태

대체적으로 기본정보와 현용정보를 생산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치, 외교, 군사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측정보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속성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회·문화와 인권분야에서는 예측정보를 생산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주 활용처를 묻는 질문에서는 크게 3가지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정부, 학계, 언론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정치, 외교, 경제분야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정부와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된다고 밝힌 군사, 대남, 사회·문화분야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권분야로 NGO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에 대해서는 대남분야와 경제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분야의 경우 전형적인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고르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남한 내 타기관의 정보와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를 선택한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는 북한방송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대남, 인권 분야에서는 외신보도를 통해서 기존정보를 수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외교·인권분야의 경우에는 외신이 관심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외신보도를 활용하지 않는 반면 외교분야에서는 북한방송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분야별 비교분석

북한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체계는 남북경협 및 인적교류의 확대에 따른 접촉면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냉전체제와 다른 형태의 북한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북한정보는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과 아울러 정보의 대중적 소비화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획득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 분석과정의 전문성 결여, 활용에 있어 정보공유 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북한정보의 양적 발전과 아울러 질적 발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정보체계의 전반적인 확장과정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정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정보의 경우 금강산사업 및 개성공단 등 공개적인 남북경협의 확장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되어 왔으며, 양적인 증가와 아울러 다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류협력으로 인한 인간정보의 확대와 아울러 공개정보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특성상 기술정보의 신뢰도도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중접경지역의 무역관계자나 북한내 정보제공자, 새터민 등을 통해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의 양도 증가하였고, 정보 전파의 신속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부족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의 정보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내 관련 기관 간에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의 대북 경험참여 기업 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전반적 남북경협 위축은 경제정보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정치정보의 경우 1990년대 경제난 등으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급되는 정보의 성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탈북자 증언, 내부 생산 정보 등의 공급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과거 좁은 의미의 상층 권력 정치에만 주목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 공급과 관심영역의 확장에 따라 주제의 폭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던 정권 대 사회 간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정보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이것이 정보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도 과거 보수적 인식이 독주하던 상황으로부터 보수적 인식과 진보적 인식이 상호 경쟁하고 보완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정보 생산과 가공 주체의 정치적 선입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가 북한정치 인식 및 정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해석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외교활동의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외교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북한이 수교한 나라는 161개국으로 남한의 188개국에 비해 86% 수준이지만 재외공관 수는 상주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를 모두 합하여 49개로서 남한의 155개에 비해 32%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외교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교활동에 대한 정보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입수된 정보의 신뢰성도 높지 않다. 정부의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북한의 외교정책 활동에 대한 정보는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사정보는 타 분야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 군사정보는 비밀성이 강하다. 북한의 경우 극도의 폐쇄성과 군사정보가 갖는 비밀성으로 여타 분야의 정보에 비해 민간인 전문가의 접근에 제약이 따르고 따라서 정보의 취득방식도 현지조사 등 직접적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집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군사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은 여타 분야의 정보 분야에 비해 ‘정치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남측 정권의 선호에 따라 북한 군사정보의 요구 그리고 군사정보 요구에 따른 분석의 선호, 선별적 정보공개와 활용 방식 등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공개, 비공개 군사정보들의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역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군사정보는 편향성이 강하다. 인간정보 수집출처는 신뢰성의 확인이 어렵고 공개출처 정보는 북한의 통제강화로 역정보의 의심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은 훨씬 강해지고 있다. 기술정보의 비중 확대는 북한 군사정보의 요구와 내용에 있어 편향성을 가져와 최고 지도자의 의도, 북한군의 주요 수뇌부의 인물 변동, 군사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정책 변화, 북한군 부대내 실상 등 인간정보보다는 기술정보에 의한 북한군의 NLL 도발 및 핵미사일 정보, 휴전선일대 군사동향 등에 집중케함으로써 북한 군사정보의 수집에 편향성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정치, 북한경제, 북한사회문화 등 북한 내부의 상황적 변화를 다루는 분야와 달리 북한대남정책정보는 남한이라는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북한이 취하는 의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정보는 북한이라는 분명한 상대가 있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에서 기인하여 북한이 실제 남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북한정보는 세밀하게 설계된 정보흐름 장치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관리라는 종합 시스템을 통해 북한 대남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대북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가정보체계는 수집, 분석, 평가, 예측이라는 복합적 과정을 포함하는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국가정보는 민관네트워크로서 세밀하게 설계된 정보의 흐름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남한의 북한대남정책정보체계는 획일, 단절, 임시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 대북정책결정에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 대남정보의 수집, 분석,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대남정책정보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민간의 인적접촉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이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는 누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느냐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문제와 연계된다. 누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달라지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생산된 정보의 신뢰도 및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지어진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느냐에 따라 신뢰도 및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문화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은 무엇보다도 북한 사회·문화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 및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수요자 내지 정보수집자를 비롯하여 북한 사회·문화 정보를 다루는 행위자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 하여 ‘서로 다른 실상’을 주장하며 이를 ‘사실화’하려 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은 첩보수준의 정보를 진위가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남발하는 활용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 첩보 수준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남발은 일반 대중을 포함한 정보수요자들로 하여금 북한주민의 생활 양상 및 환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정보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 및 탈북자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중국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면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의 방북 및 상주지원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한적이거나 북한에 대한 정보획득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공론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면서, 북한인권정보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내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조직들이 설치되었고, 북한인권정보의 범위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정보는 특성상 관련자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점과 객관적 사실의 확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3. 북한정보체계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가. 경제정보부문

##### (1) 문제점

북한경제정보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경제정보의 신속성과 신뢰성, 다양성의 한계들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정

보의 경우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중요한 경제정보의 획득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경제정보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 확대와 경험의 증가는 인간정보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정보의 주관성을 제거하고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오류의 가능성 역시 증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정보가 주로 편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 평양중심이며 주로 거시정책 중심의 북한경제정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북한경제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경제정보 및 미시정책 관련 북한경제정보의 경우 인간정보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보됨으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경제정보의 균형적 확보 및 다양화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북한경제정보의 분석단계의 다양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독점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정보분석에 대한 신뢰성확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내, 또는 정부와 민간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의 가동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정보기관과 통일부, 경제관련 부처와 안보관련 부처,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정부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의 미비는 북한경제정보의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

## (2) 개선방향

첫째, 정부차원에서 북한 경제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경제정보의 생산과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는 정부 부처의 전문인력확보가 시급하다. 북한정보의 특성상 전문성있는 전담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필요한바, 현재의 순환식 근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성있는 인력의 수급 및 지속적 전담업무의 부여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북한경제정보의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경제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체계는 정부내 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간에도 필요하다. 통일부와 국정원 간의 협조를 기반으로 안보부처와 경제관련 부처 등을 포함한 상시적 경제정보 공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의 수요가 많은 북한경제정보의 특성상 민관 정보공유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희망업체, 그리고 각 민간분석기관에 대해 북한경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협참여업체 및 민간지원단체 등은 교류협력을 통해 확보된 북한경제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경제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대북정보의 특성을 고려 북한경제정보의 중요도 및 안보영향을 고려, 공개의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시 공개, 일부 공개, 일정시점 경과 후 공개, 비공개 등 정보공개 및 활용 분류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보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경제정보에 대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과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정보의 경우 안보관련분야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초보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북핵문제 등 북한관련문제의 해소를 위해 경제제재 및 불법경제행위 차단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관련 당사국간의 북한경제정보 협력체계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정치정보부문

### (1) 문제점

북한정치관련 기술정보의 경우 민간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부서 및 국가기관차원에서 수집과 분석,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남한내 민간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정치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주로 공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한내 유통되는 공개정보의 경우 상당부분 탈북자 및 인적접촉을 통한 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인간정보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정부와 민간차원 전문가의 상당수가 탈북자 면접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활용빈도가 매우 높다. 언론매체 등 공개정보에 의존하는 특성상 북한정치정보의 적시성 및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체로 보통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정치정보의 특성상 정보전달자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왜곡 가능성도 지적될 수 있다.

북한정치정보의 분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후계체제나, 당·군·정 관계 등 북한 내부 상층 권력 동향에 대한 첩보의 왜곡과 편향된 해석의 가능성이 타 분야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상층 엘리트 동향 및 권력동향 관련 첩보의 경우 정보의 부정확성,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정보 수집 및 보도 경쟁, 희소정보의 과잉 해석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정치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신뢰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 (2) 개선방향

북한 정치정보의 수집단계의 개선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이다. 북한정치정보의 상업성은 남한사회 내에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정보에 대한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근거 없는 보도의 양산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치정보의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객관적 수집을 위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단계의 경우 신뢰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북한정치정보의 특성상 정보의 부정확성 및 의도된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분석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재체제의 권력 동태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지식의 활용도를 높여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함에 있어 분석가가 독자적 시각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활용단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분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분석결과의 신중한 활용이다. 북한 정치 특히 상층 정치 분석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충분성과 신뢰성이 중요

한 문제이므로 이를 반영한 활용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정보에 대해 상, 중, 하의 신뢰도를 부여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치정보의 불안정을 고려한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다. 외교정보부문

### (1) 문제점

북한의 외교정책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에 있어 체제의 폐쇄성 및 외교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정보들의 한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개정보조차 개방적인 사회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부족한 게 현실이다. 외교정보의 경우 특히 민간 및 학자군이 정부의 정보수집 기관들과 정책결정 그룹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외교정보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외교정책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주체들이 일부 대학에 속한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책연구기관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제의 선정이나 분석의 결론과 정책제언에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는데 따라 상당히 큰 폭의 변화들을 보인다. 이는 미국과 달리 전직관료들의 풍부한 실무경험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분석의 질이 저하되고 정책적인 활용성마저 떨어지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그 결과 북한의 외교정보에 대한 분석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사장되고 실제 분석 또한 엄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무경험이 없는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은 현안이 지닌 세부적인 요소들이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이는 다소 모호한 일반적인 평가와 전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의 경우도 자체 검증이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판단 결과 등에 크게 의존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의존하기 때문



이다. 이념적 차이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 간의 대화와 소통도 부족하다.

북한 외교정보의 유통과 공유과정에서 보안문제가 대두된다. 정부에서는 수집단계뿐 아니라 분석된 정보도 비밀등급에 따라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외교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 통제하는 방식은 북한정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 등 대민접촉이 많은 정책부처의 경우 정책수행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익명이나 기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정보기관이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 (2) 개선방향

북한 외교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이나 ARF와 같은 다자회담 및 남북 양자 차원의 대화를 통한 정보수집의 확대와 아울러 15트랙 및 민간 접촉면의 확대를 통한 정보 유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외교정보의 파급력과 여론 영향력을 감안, 신뢰성있는 정보제공의 통로를 확대하고 개방적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 및 비 정부 부문에서 수집, 분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의 종합과 교차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간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외교정책 활동에 대한 정보 유통의 양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접촉면이 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대화와 접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나 관련기관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확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에서 수집되었으나 사장될 수도 있는 정보들이 취합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의도나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 집단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직 관료들의 실무적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라. 군사정보부문

### (1) 문제점

북한 군사정보 수집의 특성상 정부의 ‘정보독점’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민간의 정보 획득 경쟁을 가중시켜 무분별한 정보 난립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간 단체의 경우, 단체별로 제한된 자료와 불완전한 방법, 상충하는 가치지향 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 영역에서 강조하는 정보의 사실성, 공정성, 객관성, 비해석, 중립성 등의 규범적 원칙과 절차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탈북자의 경우, 북한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편중과 성별 불균형,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폐쇄성 등 정보의 편향가능성이 있다.

정보분석과 관련하여 당국은 정보분석에 있어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에 맞는 편향적 분석과 해석이 지배할 수 있으며 전문 분석관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학계의 분석방법의 차이나 인식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관련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당국에 의해 1차 가공된 제한적 정보 제공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 언론매체들의 경우 경쟁적 보도로 인한 불충분한 정보분석 보도와 함께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상업화 및 인기영합적 분석의 경향이 있다. 정보분석의 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부재도 문제가 되며, 이는 북한군사정보가 갖는 비밀성에 기인한다.

북한 군사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정보기관들이 주제별로, 수집 및 분석 영역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군사정보의 과잉공개와 신중치 못한 공개는 대내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첩보수준의 부정적인 정보를 빈번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안보위기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 수집과 분석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환류 과정이 부재하다. 이러한 환류과정의 부재는 북한체제의 폐쇄적 속성에 책임을 돌려 북한관련 정보는 으레 그럴 수 있다는 관성을 가지게 할 때 그리고 왜곡된 정보의 진위여부가 확인 불가능할 때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2) 개선방향

북한 군사정보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정보의 효용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통합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간 효율적 정보협력체계의 구축이 미흡하여 통합조정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 재조정 및 필요분야에 대한 정보역량의 선택과 집중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수집 방식의 다양화와 각 주체간 협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 강화 및 정보기관과 민간단체간 협력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정보활동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부분의 정보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활용하는 산학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마. 대남정책정보부문

### (1) 문제점

북한대남정책 정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실 확인 및 검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제한된 내부정보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중한 검증없이 배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정보수집의 편중성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정보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보요원의 안전, 기만정보, 허위정보, 이중첩자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교류가 축소되면서 북한전문언론매체와 연계되어 있는 일부 북한내부정보원의 활동에 치중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공개된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대남정책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북한이 의도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대남 담론은 사실적 차원과 조작적 차원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정권지도부의 현실인식과 희망사항이 혼재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북한대남정책 정보의 경우 사실관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해석자의 이념적 프레임에 맞추어 해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 추론에 따라 전망을 해야 하는데,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전망, 즉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분석자의 대북 인식이나 이념적 규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북한대남정책정보는 북한의 대남정책 형태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대남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층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한 정보수집이 아닐 경우 그 정확성은 현격히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보분석 및 향후 예측의 불명료성은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활용단계에서 첩보검증의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인식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만 정보가 검증이 되면서, 일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매체는 정확한 정보의 사실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시의성과 이목을 끌기 위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념적 성향 및 편집방향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정보로 유통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2) 개선방향

정부내 북한 대남정책정보관련 부처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정보 수집, 분석, 활용 전반에 관여하는 민,관의 각 주체들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보유 정보의 공유 및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유기적 협력체계 없이 고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관련 인력들간의 유기적 연결망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협력체계가 상설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간 정보 공유 및 교차검증시스템의 확보, 다각화된 분석시스템 및 제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선정적 저널리즘의 문제를 억제하고, 언론매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뢰성있는 정보원의 확보도 필요하다.

## 바. 사회·문화정보부문

### (1) 문제점

정보수요자가 북한 사회·문화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및 이해가 없이 정보출처에 접근하는 것은 정보왜곡 및 정보실패를 초래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개출처보다도 비밀출처정보 수집 활동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비정부기구의 중국 현장조사에서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수집자가 개인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특히 중국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정부수집자들이 직면하는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 및 중국 공안의 단속에 따른 위협부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정보생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정보의 경우 인간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이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의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은 같은 일,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와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문자를 통한 정보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이중정보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북자를 통한 정보의 경우도 감시와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방북 활동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정보체계의 분석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과 인프라의 부족이다. 특히,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분석관이나 전문가가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수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정부기관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를 독점할 뿐 민간과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협력적 분석네트워크 부재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정보의 분석방법과 분석틀이 더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수집된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위장, 맥락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개념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계량적 분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분류 단계에서 수집된 수많은 첩보들이 DB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의 해석에서 관료화, 정치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의 활용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석된 정보가 잘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보기관과 정부내 타부처간의 정보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협력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 (2) 개선방향

사회·문화 정보 수집의 특성상 대북지원단체 및 민간교류단체, 개별적 방북자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들에 의한 관련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사전·사후지원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직접지원 방식과 아울러 관련 교류협력 사업 및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민간영역간의 효율적 협력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분석단계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관적, 단편적

분석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인력 및 고도화된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정보의 특성상 고도의 보안사항을 제외할 경우 정보의 개방적 공유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책임성제고를 통해 정보신뢰성의 제고 및 정보왜곡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주의체제 붕괴과정의 예측실패에 있어 사회적 측면이 간과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 사회·문화정보를 활용한 북한변화예측체계의 구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사. 인권정보부문

### (1) 문제점

북한인권관련 정보는 대부분 인권침해를 경험 혹은 목격한 탈북자들의 개별 증언에 의해 수집된다. 따라서 북한인권관련 정보는 일반적인 북한정보와 달리 구체적인 경험 및 목격 증언이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보들은 반드시 교차확인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관련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북한인권관련 정보조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북한문건을 조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각된 바 있다. 이는 정보수집의 신뢰도문제와 관계되며 특히 실제 북한인권정보가 대부분 탈북자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다는 점에서 면접조사의 신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인권정보수집에 있어 증언자보호의 체계화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분석단계의 경우 북한인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분석에 활용하는 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인권침해 사례 정보는 대부분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단답의 형식을 띤다. 정신적 상처와 결합된 인권침해 등의 경우 다양한 방어기제를 통해 망각되거나 분절화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바, 질적인 분석방법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정에서 기관을 넘어선

제도적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정보는 피해자 개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침해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정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 낮은 신뢰도는 인권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기관이 북한 내 인권관련 첩보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협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순환되는 정보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탈북자의 증언에 주로 의존하는 북한인권정보의 특성상 수집단계에서 정보의 신뢰도 및 정보조작문제의 소지가 크며, 교차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정보의 특성상 증언자 보호체계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단계의 경우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화된 분석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직접피해사례 등에 대해서는 증언자의 자기방어기제를 해석하여 보다 정밀한 정보의 생산이 가능한 방식의 도입도 요구된다. 분석 및 활용단계 공히 관련 주체들간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개선방향

첫째, 북한인권정보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의 북한인권정보들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다. 물론 통합관리시에는 보안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부처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정보의 교차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다변화하여 민간기관간, 민간과 정부기관 간에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들이 직접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가 환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고서 발간차원을 넘어서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정보공유



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초통계의 경우에도 증언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세부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북한정보의 향후 과제

본 글에서는 북한정보 현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한정보환경으로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정보 추이를 살펴보았고, 둘째는 북한정보의 주요 주체와 주체별 기능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북한정보 순환단계인 ‘수집 → 분석 → 활용’ 단계별 개괄적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정보 가중치 편중성과 조정력 향상의 거버넌스

한반도 대내외의 정세 변화는 북한정보의 양, 질적 수준, 주요 주체 및 방법, 정보 가중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와 북한정보의 추이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이 정세 변화에 의해 특정 정보 주체, 기능이 부각되었다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주체와 기능이 확대되어 구체화된다는 것이기도 해 일면 긍정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주체, 기능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북한정보 주체, 기능의 편중성으로 인한 현황 오판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특정 주체가 생산하는 정보에의 의존성이



커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되지 못한 채 특정 부문의 기능만이 두드러지게 될 경우 북한정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확한 현황 진단과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정보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주체, 기능의 편중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주요 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객관적 상황을 명료화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실천이 더불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과의 조화 지향

북한정보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북한정보의 규모, 주체, 기능 등 전영역에 있어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 전문성 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정보 주체별, 순환과정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양적 확대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서 파생된 북한정보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윤 추구에 따른 경쟁적 북한정보 과잉화, 북한정보의 희소성과 사실 여부 확인의 지연 내지 어려움 등이 중첩되면서 북한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는 주요한 과제이자 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정보의 규모, 주체, 기능이 축소되기보다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북한정보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북한정보의 대중화에 따른 정보 순환 오류 극복

북한정보 현황에서 눈여겨 봐야할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정보

를 주로 다루는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국가기관이었고, 그 외에 관련 연구자나 업무 종사자에 국한된 북한정보 활동 양상이 뚜렷했다면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3대 세습,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북한정보 활동 주체의 확산과 양적 규모 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별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2만 명에 이르면서 북한정보 수집이 민간차원에서 용이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정부와 북한 연구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주로 국한된 정보 공급과 수요가 민간 부문에 까지 파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부문이 정치적 고위급 정보까지도 다루게 되는 정보 주체간 정보 기능의 경계도 약화되고 있다. 과거 국가기관만이 수집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민간도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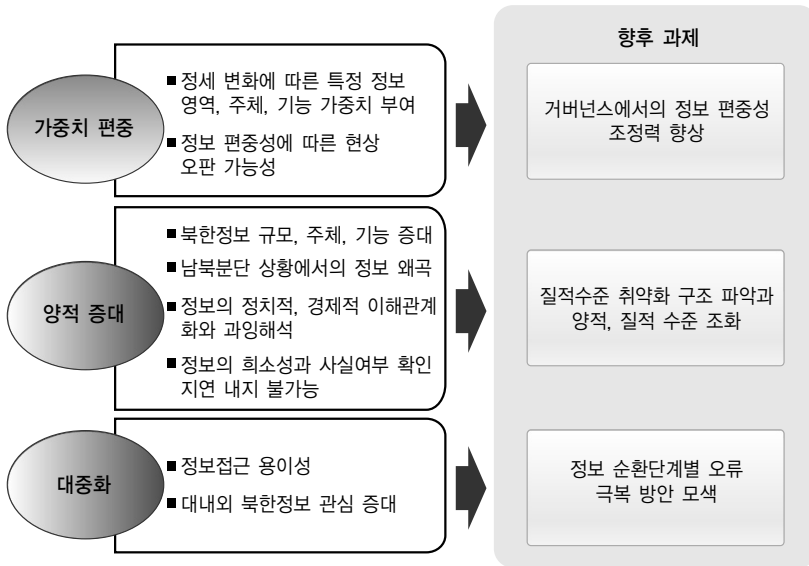
국내 정보화의 확산은 기술정보에 대한 민간부문의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북한정보를 생성하는 전문 민간 부문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의해 북한정보가 생성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보 수집 방법인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주체간 생성 정보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가 대중화되는 양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정보가 정부, 학계 등의 관계자들만의 관심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대중적인 관심을 촉발시켜 대중화 양상을 띠는 것이 최근 북한정보 수집, 분석, 활용 전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정보의 대중화는 일방적으로 어느 주체가 주체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쌍방향화 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북한정보 생산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대중적 환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허위정보가 만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또한 북한정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 주체별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과잉 정보 생산 및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 북한정보의 왜곡이 확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223)</sup>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현상 인식과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정보 순환단계별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종합 제시한 북한정보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제-1> 북한정보 현황과 향후 과제



223) ○○○(언론사 기자), (통일연구원 자료회의, 2010.10.18).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석찬.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과학원출판사편집부 편. 『조선말사전 상』.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5.
-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6.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 김대행. 『통일이후의 문학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남만권 편.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 서울: 국방연구원, 2006.
- 노귀남. 『북한의 사회문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노다 히로나리 저. 홍영의 역. 『한반도 주변 심리 첩보전』. 서울: 행복포럼, 2009.
- 마크로웬탈 저, 김계동 역.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모리스 A. 이스트 외 저. 최성권 역. 『비교외교정책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수원: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9.
- \_\_\_\_\_.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민족통일연구원 편. 『남북한국력추세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민진규. 『국가정보학: 역사와 혁신』. 서울: 배움, 2010.
- 백종천 외. 『위기관리론』. 서울: 인간사랑, 1992.
- 밸러리 허드슨 저. 신윅희 외 역.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법륜 편.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 서보혁. 『북한인권』.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서 훈. 『북한의 선군외교』.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서진영.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스테판 헤거트·마커스 놀랜드 공저. 『북한의 선택』.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 아브람 N. 솔스키 외 저. 신유섭 역. 『국가정보의 이해: 소리없는 전쟁』. 서울: 명인문화사, 2007.
- 안 델리센 편. 박종일·박선영 역.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 파워』. 고양: 인간사랑, 2008.
- 외교통상부. 『2010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10.
- 유용원. 『남북한의 모의전쟁: 과연 서울은 함락될 것인가?: 충격적인 DIA(미국 방부 정보본부)보고서』. 서울: 조선일보사, 1994.
- 윤여창 외.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수혁. 『전환적 사건』. 서울: 중앙북스, 2008.
- 이연숙 외. 『통일한국의 어린이영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2010.
- 이종석 외.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1998.
-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세종연구소, 2000.
-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서울: 청목출판사, 2003.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지속과 변화』. 서울: 해남, 2006.
-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잉그리트 슈타이너 가쉬·다르단 가쉬 공저. 박진권 역. 『독재자를 고발한다』.

- 서울: 위즈덤피플, 2010.
- 장익관 외.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안보정보 관리전략』. 서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5.
- 전 용.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서울: 한울출판사, 2007.
- 정기중. 『불』. 평양: 문예출판사, 1998.
- 조엘 위트 외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서울: 모음북스, 2005.
- 조경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좋은벗들 편.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 찰스 프리처드 저. 김연철 외 역. 『실패한 외교: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 파주: 사계절, 2008.
-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현황』, 서울: 통일부, 2004.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1999.
- 한희원. 『국가정보체계혁신론』. 서울: 법률출판사, 2009.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 Berkowitz and Goodman. *Best Tru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Berkowitz and Goodman. *Strategic intellig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16 July 2002.
- \_\_\_\_\_.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9.
- Jervis, Robert. *Why Intelligence Fails: Lessons from the Iranian Revolution and the Iraq Wa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 May, Ernest R. et al. *Dealing with Dictators: Dilemmas of U.S. Diplomacy*

*and Intelligence Analysis 1945~1990*.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2006.

Quiggin, Thomas. *Seeing the Invisible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in an Uncertain Age*.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2007.

Schwekendiek, Daniel.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Demography, Society, Economy*. Seoul: IPUS, 2009.

UNFPA.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 2. 논문

- 고재홍. “김정일의 북한군 주요 승진인사 분석.” 『정책연구』. 154권, 2007.
- \_\_\_\_\_. “김정일의 북한군부대 시찰 동선 분석.” 『군사논단』. 제52호, 2007.
- \_\_\_\_\_. “실용정부 출범 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양상 분석.” 『군사논단』. 제58호, 2009.
- 김갑식. “김정일의 선군정치 : 당·군 관계의 변화와 지속.”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2001.
- 김강일.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외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0.10.14).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2호, 2002.
-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민족과 문화』. 제4집, 1996.
-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1호, 1998.
- 김인수. “서해상의 북한 군사형태.” (한국군사학 교육학회 주최 정기세미나, 2009.9.18).
- 김홍광. “대북 언론정보 활동 회고-평가, 반성, 교훈,” (열린북한통신 1주년 기념 토론회, 2010.1.11).



- 박경숙. “북한의 인구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42회 정책포럼, 2010.3.15).
- 박수성. “주요일간지 북한관련 웹사이트의 정보운영체계 비교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 박현선. “현대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북핵 문제의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9).
- 송승섭. “북한자료의 이용확대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 방안.” 『정보관리연구』. 제41권 2호, 2010.
- 안청시·김근식.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가능성.”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3호, 1994.
- 오동룡. “북한 서해도 무력점령 시도할 수도” 『월간조선』. 2009년 3월호, 2009.
- 오유석.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제49권, 2001.
- 王緝思. “朝核問題与当前中韓關係,” 『2010 한중평화포럼: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학술회의, 2010.9).
- 이교덕. “북한군 군사규율 문란실태 분석.” 『정책연구』. 2005년 여름호, 2005.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2001.
- 이봉조. “북한의 신년사 의미와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5호 2010년 1-2월호, 2010.
- 이삼식. “북한 기아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3호, 2000.
- 이영중.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통일연구원 전문가워크숍, 2010.8.25).
-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4권 1호, 2001.
- 장노순.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입법부의 정보감독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0년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2010.2.23).

- 장성욱, “북한의 ‘공격우위 신화’와 선군정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9).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제3호, 2001.
- 정창현, “민간 대북정보의 생산과 해석: 화폐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제6차 NGO 포럼, 2010.4.13).
- 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1년 1호, 2001.
-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2001.
- 최진태, “정보화시대의 정보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44권 1호, 2001.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ovember 20, 2010),” <<http://iis-db.stanford.edu/pubs/23035/Yongbyonreport.pdf>>
- Albright, David and Paul Brannan. “Suspect Reactor Construction Site in Eastern Syria: the Site of the September 6 Israeli Raid?” ISIS Reports with Imagery. OCTOBER 23, 2007.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SuspectSite\\_24October2007.pdf](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SuspectSite_24October2007.pdf)>
- \_\_\_\_\_. “What is North Korea building in the area of the destroyed cooling tower? It bears watching.” ISIS IMAGERY BRIEF. September 30 2010.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New\\_Activity\\_DPRK\\_Cooling\\_Tower\\_30Sept2010.pdf](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New_Activity_DPRK_Cooling_Tower_30Sept2010.pdf)>
- Bill Gertz, “EXCLUSIVE: N. Korea general tied to forged \$100 bills.” *The Washington Times*. June 2, 2009.
- Goodkind, D. and West, L.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 Impac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June 2001.
- Hecker, Siegfried S.,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ovember 20, 2010),” <<http://iis-db.stanford.edu/pubs/23035/Yongbyonreport.pdf>>
- McEachern, Patrick.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Louisiana State University, 2009.
-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n Catastrophe and Its Lesson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January 2002.
- Newcomb, William. “Countering DPRK Illicit Activities.” This paper was produced as part of the project *Improving Regional Security and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U.S. Policy Interests and Options*. <[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Newcomb\\_FINAL\\_Countering\\_DPRK\\_Illicit\\_Activities.pdf](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Newcomb_FINAL_Countering_DPRK_Illicit_Activities.pdf)>.
- Panel of Experts.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from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www.fas.org/irp/eprint/scr1874.pdf](http://www.fas.org/irp/eprint/scr1874.pdf)>
- W. C. Robinsons, M. K. Lee, K. Hill.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strospective Study.” *The Lancet*. Vol. 354, July 1999.
- “COUNCIL REGULATION (EU) No 1283/2009 of 22 December 200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3.12.200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46:0001:0025:EN:PDF>>.
- “Executive Order 13551-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September 1, 2010),” <<http://www.fas.org/irp/offdocs/eo/eo-13551.pdf>>

### 3. 기타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뉴시스』.

『동아일보』.

『로동신문』.

『북한』.

『시사저널』.

『신동아』.

『연합뉴스』.

『월간 말』.

『월간 중앙』.

『월간조선』.

『위클리 경향』.

『이코노미스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주간동아』.

『주간한국』.

『중앙일보』.

『통일뉴스』.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Daily NK』.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USA Today.*

<www.fas.org>  
<http://hwahai.cbck.or.kr>.  
<http://tongil.snu.ac.kr>.  
<http://www.asiapress.org/korea>.  
<http://www.cck.or.kr>.  
<http://www.flicker.com>.  
<http://www.goodfriends.or.kr>.  
<http://www.ipa.re.kr>.  
<http://www.kinu.or.kr>.  
<http://www.minjog21.com>.  
<http://www.nis.go.kr>.  
<http://www.nkis.kr>.  
<http://www.nkorea.or.kr>.  
<http://www.nkradio.org>.  
<http://www.unikorea.or.kr>.  
<www.bemil.chosun.com>  
<www.cns.miis.edu>  
<www.fnkraio.com>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동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추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장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 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이입신청서

성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